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659-01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0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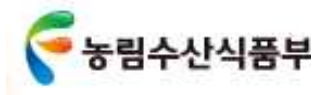
연구기관 : 전남여성플라자

연구책임자 : 오미란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실장)

공동연구자 : 박민선 (농협대학 교수)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

이진순 (전남여성플라자 연구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09
전남여성플라자

본 보고서는 전남여성플라자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 공모사업
결과 위탁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연구의 추진체계	10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II 제2차 5개년계획의 성과와 과제평가

1. 2차 5개년계획 성과 평가	17
2. 2차 5개년계획 총괄평가 과제별 추진실적	23
3.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과 평가	48
4. 2차 5개년계획의 성과점 및 보완점	57

III.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의 농어업

여건변화 및 전망

1. 농어업 대외여건 변화	65
2. 농어업, 농어촌 내적 환경변화	67
3.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변화	71

IV.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1. 3차 계획기간중 여건전망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변화 ..	77
2. 3차 여성농어업인 5개년 기본계획 정책기조	96
3. 3차 5개년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100
4. 3차 5개년계획의 정책과제	102

V.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107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120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138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149
5.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64

<참고문헌>	185
<부록 1> 여성농업인 수요조사	190
<부록 2> 여성어업인 수요조사	221
<부록 3> 여성농업인센터 수요조사	236
<부록 4> 지자체 연차별 사업결과 분석	259
<부록 5> 일본 여성농업인 사례연구	277

■ 표 목 차

<표 I - 1> 농가 인구(2000~2008)	1
<표 I - 2> 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표구성	8
<표 I - 3>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14
<표 II - 1> 정책평가 기준	17
<표 II - 2> 1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	20
<표 II - 3> 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21
<표 II - 4>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관련 조항	27
<표 II - 5> 정책과제 1(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평가	29
<표 II - 6> 정책과제 2(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평가	30
<표 II - 7> 정책과제 3(생산자조직 참여확대) 평가	31
<표 II - 8> 정책과제 4(여성농어업인단체 활동지원) 평가	32
<표 II - 9> 정책과제 5(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 평가	33
<표 II-10> 정책과제 6(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평가	34
<표 II-11> 정책과제 7(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향상) 평가	36
<표 II-12> 정책과제 8(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기반확충) 평가	37
<표 II-13> 정책과제 9(노동생산성 향상 및 부담완화) 평가	37
<표 II-14> 정책과제 10(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평가	38
<표 II-15> 정책과제 11(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어업인 전문화) 평가	39
<표 II-16> 정책과제 12(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평가	40
<표 II-17> 정책과제 13(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평가	41
<표 II-18> 정책과제 14(영농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평가	41
<표 II-19> 정책과제 15(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확충) 평가	42
<표 II-20> 정책과제 16(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평가	42
<표 II-21> 정책과제 17(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평가	43
<표 II-22> 정책과제 18(여성농어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평가	44
<표 II-23> 정책과제 19(종합문화복지관 모델개발 및 보급) 평가	44

<표 II-24> 정책과제 20(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평가	45
<표 II-25> 정책과제 21(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평가	46
<표 II-26> 정책과제 22(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 평가	46
<표 II-27> 정책과제 23(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 개발) 평가	47
<표 II-28> 시·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48
<표 II-29>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평가를	49
<표 II-30>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부서	51
<표 II-31> 정책추진 관련 조례(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각시도)	52
<표 II-32> 시도별 사업내용 분석	54
<표 II-33> 시도 년차별 시행계획 총괄평가	55
<표 II-34> 2차 5개년 계획의 보완	61
<표 III-1> 일본 농촌여성 농가공사업 현황	68
<표 III-2> 농가인구 전망	68
<표 III-3>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69
<표 III-4>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현황	69
<표 III-5> 2009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70
<표 IV-1> 성별 연령별 장래 농가인구 추계 (2005~2020년)	78
<표 IV-2> 어업인구	80
<표 IV-3> 농촌(읍·면부)과 도시(동부)의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81
<표 IV-4> 연간 가구소득 분포(2007)	82
<표 IV-5> 농지규모별 농가현황	83
<표 IV-6> 연도별 작물재배 현황	84
<표 IV-7>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93
<표 IV-8>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95
<표 IV-9>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정도	97
<표 IV-10> 성평등 지수	98
<표 IV-11>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성평등 지수	99
<표 IV-12> 3차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	100

<표 V-1> 여성농어업인에게 합당한 지위에 대한 평가	109
<표 V-2>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정 조건에 대한 인지도	109
<표 V-3> 고령여성농어업인의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소득기여도	126
<표 V-4> 연도별 후계여성농어업인 선정현황	141
<표 V-5> 단계별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 로드맵	142
<표 V-6> 의료기관 이용 중 애로점	151
<표 V-7>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	157
<표 V-8> 1년중 시행한 문화 활동	161
<표 V-9> 연령대별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161
<표 V-10>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171
<표 V-11> 농어촌 지역내 성평등 지수에 대한 인식	172
<표 V-12> 차별경험	172
<표 V-13> 차별경험 영역	173
<표 V-14> 보육사업 인증여부	175
<표 V-15>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176
<표 V-16> 센터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업	176

■ 그림목차

<그림 I-1> 정책과제 연구 대상 영역	5
<그림 IV-1> 장래 농가인구 구조 변화 (2005~2020년)	79
<그림 IV-2> 농사일에 결혼이민자의 역할비중 인식	83
<그림 IV-3>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판매금액 ..	85
<그림 IV-4>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85
<그림 IV-5> 3차 5개년계획 추진시책과 핵심과제	101
<그림 V-1> 여성농어업인의 교육경험	130
<그림 V-2>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153
<그림 V-3>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현황	154
<그림 V-4>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1순위)	156
<그림 V-5>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도	159
<그림 V-6> 연령대별 문화향유 정도	160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2009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8년 51.6%로, 지난 38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함. 또한 농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어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어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현실에서, 농어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됨.**

<표 1-1> 농가 인구(2000~2008)

단위 : 명, %

연도	전국 농가인구			
	전체	여	남	여비율
2000	4,031,065	2,060,076	1,970,989	51.1
2001	3,933,250	2,030,584	1,902,666	51.6
2002	3,590,523	1,842,721	1,747,802	51.3
2003	3,530,102	1,814,975	1,715,127	51.4
2004	3,414,551	1,760,668	1,653,883	51.6
2005	3,433,573	1,756,981	1,676,592	51.2
2006	3,304,173	1,696,959	1,607,214	51.4
2007	3,274,091	1,684,124	1,589,967	51.4
2008	3,186,753	1,644,417	1,542,337	51.6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보고서」, 연도별

- 여성농업인 육성 2차 5개년계획('06-'10) 동안 농어업정책 방향은 부처의 명칭이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업을 1차+2차+3차(6차 복합산업)으로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은 1차 농어업 생산에서 가공 등 2차 산업, 각종 농어촌 마을개발 사업, 문화·관광, 체험 등 서비스 영역인 3차 산업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마을 노인돌봄도우미, 보육교사, 학교급식, 농어촌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 도우미와 후견인 역할 등 농어촌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지원자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농촌사회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2006년 OECD에서는 NRP(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하고 향후 농촌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 농촌의 역할에 주목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OECD는 향후 농촌의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인구변화, 인구이동, 고령화, 경제변화 등을 통한 도-농연계의 기회와 위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특히 미래농촌이 녹색성장전략에 대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자연자원, 생태계 관련 서비스, 문화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원이 농촌의 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함(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자료 2006).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농촌은 고령여성화, 농-도 상생발전 강화, 녹색성장 전략의 중심지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볼 때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란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여성농어업인들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참여나 분산적인 역할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이 농촌활성화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함.**
- 따라서 2차 5개년계획이 여성농어업인의 경영주체, 법적지위, 복지향상이 주요 초점이었다면 3차 5개년 계획은 농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식품, 농어촌관광,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로컬푸드 대응 창업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역통합, 고령화 대비, 귀촌·귀농 증가 등 농어업 영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육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응이 중요해짐.**
- 특히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농업생산자, 경영자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및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 복지서비스의 지지자, 다문화 통합의 실천자, 지역특화 사업의 주도자로서의 역할 등을 보완한 **미래 농촌사회 주된 경영자로서 여성의 역할 증진에 따른 정책을 도출해야 함.**

1.2 연구의 목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계획을 평가하고 농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개년 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육성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핵심정책과제

4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경영능력,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 과제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방안 및 재원조달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1.2차 여성농어업인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여전히 정책과 현실 사이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음.
- 이는 근본적으로 농어업 정책이 남녀 농어업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농어가단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3차 여성농어업인 정책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보완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 3차 5개년계획은 2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계획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정리**하고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주도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의 비전 및 목표와 과제 설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활성화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에 따른 **신규정책 및 과제에 대한 연차별 과제시행 계획 및 과제 실현의 타당성**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1 연구내용

-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3차 계획에 반영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도출.
- 2차 5개년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3차 계획기간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3차 계획 연구과정에 반영. 또한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3차 5개년계획 실행에 도움이 될 정책방안을 제시함.
- 그간 여성농어업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대한 정책과제 및 생애주기별, 영농규모 및 유형별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도출.

<그림 I-1> 정책과제 연구 대상 영역



- 서론인 제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시와 더불어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 제II장에서는 「제2차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의 총괄평가 및 과제별 추진실적을 평가함. 과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는 총 6개 지표로 정책계획, 정책수행, 정책성과 부문 각각의 부문별 지표를 적용하였음. 검토내용은 중앙정책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였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검토한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유무와 정책전달 인프라를 검토하였음.
- 제III장은 제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여성농어업인 여건변화 및 전망을 통해 계획기간 중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 및 정책목표를 도출하였음.
- 연구대상기간(2011~2015) 동안의 농림부 정책관련 보고서 및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변화 흐름 등 분석
- 제IV장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 핵심과제를 5개 영역으로 구분함. 핵심추진과제 5개 영역은 2차 5개년계획의 4개 과제 외에 지역개발 리더육성 및 차세대 인력육성 항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음. 특히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변화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중 소득향상에 필요한 식품가공 관련 사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 부록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조사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여성농어업인 설문조사는

직접면접 및 전화조사를 통한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임. 기타 여성농업인센터 및 여성어업인의 욕구를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2.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 기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문헌자료 및 각종 농어촌관련 사업의 조사 및 사업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였음. 또한 폭넓은 자료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착수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군단위 회장 이상을 대상으로 면대면, 직접 전화설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농림수산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에 반영하였음.
- 2차 계획기간에 정책대상에 추가된 여성어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성과가 미흡한 영역인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정책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음
- 여성농어업인 관련 국제사례의 비교연구를 위해 기존자료 및 해외 농어업관련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고, 일본에 현지출장을 통해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여 반

8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영하였음.

<표 1-2> 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표구성

영역	지표	수행방법
2차년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적 환경변화 반영의 적절성 - 목표실현을 위한 과제대상의 적절성 ● 목표에 따른 시행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와 수단의 실행가능성 ● 정책수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및 추진정도 - 중앙정책 및 지자체 평가분석 포함 	자료 평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도 및 만족도 	정책대상 설문조사
3차년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기간 중 농어업·농어촌 대내외적 환경변화 예측 ● 3차 계획 기간 중 변화되는 여성농어업인 역할에 관한 인식측정 	자료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계획 목표 및 과제선정에 대한 욕구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 전문 인력화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정책 지원 	자료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정책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계획에서 추가될 항목에 대한 정책욕구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소득지정정책 -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정책 강화방안 - 고령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방안 -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정책방안 - 여성농어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방안 	전문가 델파이조사 정책대상 설문조사

2)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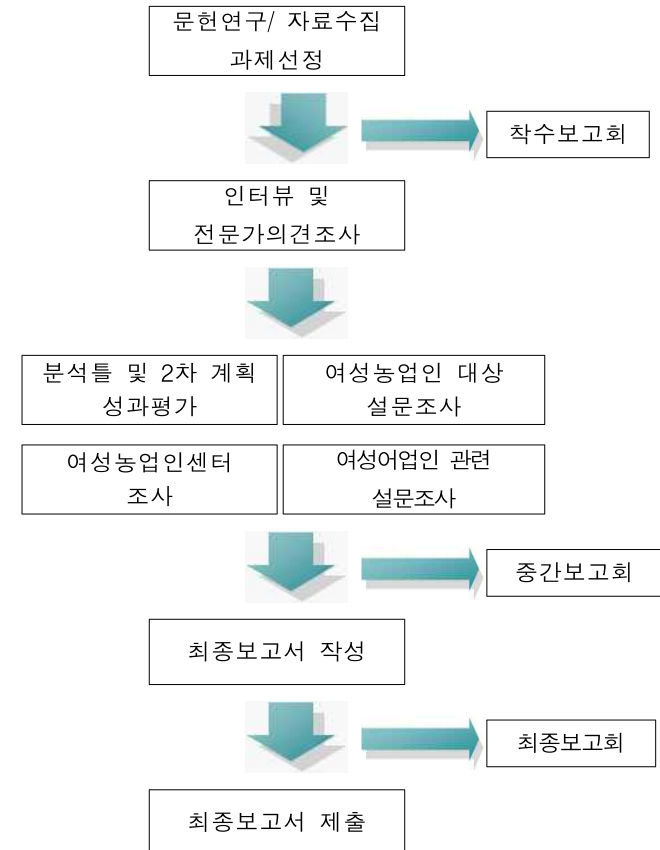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2011 ~ 2015
- 공간적 범위 : 국내 및 해외

3. 연구의 추진체계

2.3 이전 연구와 차이점

■ 2차 계획 연구와의 차이점

- 생애주기별, 경작규모별, 활동영역별 차별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 복지, 인력육성 등에 있어서 생애주기와 활동영역, 농가유형, 경영환경 등이 반영된 세부항목 도출.
- 3차 계획기간에 변화된 여성농어업인 정책대상의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을 포함시킴.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영역을 핵심과제로 추가하여 제시함.
- 해외 현장 출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외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 국내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농업소득과 관련한 여성농업인 참여 사례를 조사함.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1 연구의 기대효과

1) 기여도

- 변화되는 농어촌, 농어업 정세 및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및 활용을 통한 농어업의 미래 전망 강화
-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틀 제공

2) 기대효과

- 1.2차 5개년 계획의 성과평가에 기초한 3차 계획기간의 과제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연속성 담보를 통한 정책의 성과 지표 향상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적 능력 향상 및 농어업 전문역량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농어촌 소규모 농가공 산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취·창업 가능성 확대
 -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대 및 농·도 상생을 위한 역할증진

-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토대를 강화
- 농어촌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2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제한점

1) 활용방안

- 지역단위(광역) 여성농어업인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및 과제 의 틀 제시
- 농촌활성화를 위한 타 부처의 역할 및 여성농어업인 지원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방안 제시
- 농어업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실현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및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활용

2) 연구의 제한점

-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책욕구는 대상의 역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따라서 여성농어업인들의 계층다양화 및 생활조건의

다양성, 생산활동의 다양성 등을 반영한 정책이 보다 세분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각 집단별 정책요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함.

☞ **향후 여성농어업인, 농가공 참여자, 마을개발 등 보다 특화된 영역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심화연구 필요**

- 여성농어업인 정책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방안인 농어업정책의 성평등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자신의 변화 발전의지에 대한 욕구가 중요함.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영역부분은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표 1-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연구 목적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은 2008년 농가인구의 51.6%로 농어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각됨. 따라서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지역참여 방법 모색 ○ 2차 계획기간(2006~2010)중 농어업은 복합산업으로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됨. 따라서 농어업인력 중 가공, 관광, 판매, 체험 등 농어업외 소득을 증진에 관한 정책도출 필요 ○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육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 지역리더 양성방안 도출 ○ 여성의 활동을 저해하는 사회문화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성 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연속성 담보를 통한 정책의 성과지표 향상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향상 및 농어업 전문역량으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의 토대를 강화 ○ 농어촌사회 성 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복지향상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Ⅱ 제2차 5개년계획의 성과와 과제평가

-
1. 2차 5개년계획 성과평가 기준
 2. 2차 5개년 계획 총괄평가 및 과제별 추진실적
 3.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과 평가
 4. 2차 계획의 성과점 및 보완점
-

1. 2차 5개년계획 성과평가 기준

1.1 정책평가의 기준틀

- 정책 사업을 평가하는 의미는 사업이나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됨.
- OECD(1999)에 따르면 사업평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반화된 연구기법을 사용한 분석적인 평가, 둘째, 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셋째, 평가지표의 내용의 신뢰성 담보, 넷째, 논점 중심으로 진행, 다섯째,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성이라고 지적함.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준의 절차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의 결과·평가로 구분함. 2003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책의 공동평가기준은 <표 II-1>과 같음.

<표 II-1> 정책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 책 형 성	목표의 적합성	- 상위 국정지표의 부합성 및 환경변화 대응도 - 정책목표의 명확한 제시정도
	계획의 충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충실성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의 부합성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 고려
정 책 집 행	과정의 효율성	- 일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 - 투입된 자원의 목표달성 관련 효율적 집행도
	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의 포착 및 대응의 적절성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홍보되는 정도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정 책 성 과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 달성 정도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정책대상자들에 미치는 영향

18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책의 공동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대상 사업은 중앙정책과 지방정책 두 개의 영역을 평가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체의 경우 계획수립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정을 실행하지 않고 중앙의 정책에 입각한 지자체의 집행의 의미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본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많음.

1.2 2차 5개년 계획의 여건변화 특징

- 2차 5개년계획은 1차 5개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¹⁾를 거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시안을 연구하여 수립하였음. 평가 및 계획수립 과정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립 되었음.
- 특히 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추진인프라의 변화가 발생함.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각 조례에 여성농어업인정책협의회 설치 등 정책추진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커다란 변화였음.
- 또한 2차 계획기간은 지방분권, 지역혁신 등의 영향을 받아 중앙정부 사업중 많은 영역이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실행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행정에서 했던 사업은 복지정책 중심이

1) 1차 5개년계획은 2005년 농림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게 위탁하여 평가가 실시되었음.

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사업은 농협,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 기술센터)의 사업이 대부분임.

- ◆ 2차 계획기간 중 여성농어업인 정책관련 여건변화
-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농식품관련 사업 포괄)
 - 어촌, 어업관련 정책 추가 : 여성어업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됨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기구 변화(과가 없어지고 농촌사회여성 팀으로 변경 되었다가 다시 농촌사회과로 변경됨)
 -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사업 등 주요사업 지방이양

1.3 1.2차 5개년 계획 정책 추진과제

- 2차 5개년 계획은 남녀 농업인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건설한다는 비전하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정착을 목표 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1) 1차 계획 정책

<표 II-2> 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 목 표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 추진과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촉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 여성단체 위탁 사업 활성화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 직업의식 고양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의 개발연구 ·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 정비

2) 2차 계획 추진과제

<표 II-3> 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 비 전 >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농 업	: 여성의 특성과 자질이 발현되는 여성친화적 산업
◇ 여성농어업인	: 남성과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직업인
◇ 농 촌	: 농촌다움이 보전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 목 표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



< 추진과제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 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 양성평등의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 농촌종합문화 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 ·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 성 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1.4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차이점

1) 정책목표

- 1차 계획의 목표는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어촌사회 발전'으로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목표가 명료하지 못했음. 그러나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의 정착을 목표'로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목표가 명료해짐.

2) 추진과제

- 1차 계획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나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이 추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1차 계획에서 경영능력 강화 방안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과제로 제시하여 리더십, 창업활동지원 및 농촌개발 리더로서 육성 등 농어업의 변화 현실을 반영한 지역리더 개념으로 영역이 확장됨.
- 2차 계획은 국제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과제가 추가되었고 삶의 질 문제를 복지정책 향상에 관한 항목으로 바꾸고 영유아 양육, 보육에 관한 과제 및 문화, 건강권 및 영농도우미 등 복지 관련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 2차 계획에서는 정책추진 인프라 과제로 성 인지 정책관련 정책과제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남녀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함.

2. 2차 5개년 계획 총괄평가 및 과제별 추진실적

2.1 총괄평가

1) 정책목표와 기본시책 방향

- 1차 평가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는 농업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와 역량강화를 제시하였고 2차 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목표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정착으로 설정함.
- 정책목표가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추진과제에 양성평등성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제시됨. 정책목표에 따라 기본시책방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고 정책추진체계 역시 성별영향평가나 성별통계 등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됨.
- 또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지원,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마을리더 육성 과정에 여성의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과제가 세부과제로 제시된 점 역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거주민으로서 다양화되는 여성들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정책제시였음.
- 이러한 목표나 시책방향은 농어업 일반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아젠다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내용임.
- 그러나 중점 추진과제와 핵심사업이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음.

24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추진과제의 핵심사업으로 **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 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위향상 과제와 적합한 사업이 아님**. 오히려 복지나 인력육성 항목으로 사업별로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금 및 보험수급권의 확대**는 여성농어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바탕에서 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복지증진 항목 보다 는 지위향상 항목으로 변경**해야 함.
- 2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 4개 항목 중 1차 계획 과제에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교육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교육은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과 관련한 중심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기는 어려움. 특히 영농방법의 다양화 및 농어업 부가가치 확대, 농어촌 거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어업인 관련 교육과정은 오히려 계층별, 영농형태별, 활동영역별, 세대별로 특화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1차 계획에 비해 2차 계획은 농업, 농촌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긴 했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의 제시가 미흡했음. 특히 정책에 대한 이해대상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상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체계

①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 평가

- 여성농어업인 관련 추진체계는 3가지 수준을 통해서 집행됨.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최종으로 검토하는 단위가 여성농어업

인 정책자문회의임. 그러나 정책자문회의는 일년에 한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 의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음.**

-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농림부가 농림수산부로 농림수산부가 다시 농림수산식품부²⁾로 변화되어 정책대상자 자체가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출발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는 여성정책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2월 농촌정책구조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에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으로 개편되었고, 2009년 10월 농촌사회과로 개편되면서 여성농어업인 정책만을 전담하는 체계에서 점차적으로 농어촌 사회 일반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로 변화됨.
-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집행적 성격보다는 부처간 정책추진 과정에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통합 조정관련 역할로서 여성정책 전담 추진체계가 필요함.**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 수준에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또한 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여성농어업인 정책관련 주요 과제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요한 정책 추진체계로 부상함.** 따라서 향후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포괄예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

축 증대가 중요해짐.

②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확립

- 2005년 8월4일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거침과 동시에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이에 따라 2차 계획은 모든 광역지자체의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음. 또한 매년 집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8조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2003년 여성농업인 통계가 발행된데 이어 5년 후 2008년 여성농업인 통계가 발행되었음.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조사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보다는 중앙의 시행계획을 집행하는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2)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변경

<표 II-4> 정책평가 기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p>◆ 여성농어업인 육성법</p> <p>○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 제5조(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1항.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財源)의 지원계획 3항.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4항.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p> <p>○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등) 1항.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③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이 보고되고 있지만 단순취합 수준이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중앙과 지역의 추진체계 연계망이 약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지역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분석해 보면 대동소이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로 정책이 이양된 사업의 경우 중앙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이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2차 계획기간에 증가되지 못함).
-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이 보고서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기관이나 실적에 대한 추진집행 주체가 없음. 따라서 지자체 내에서 행해진 사업도 집행실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항목도 많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할 지표를 항목별로 설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야함.

2.2 과제별 추진실적

1)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 농업관련 각종 정책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정책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추진과제의 기본으로 설정한 부분은 적절함.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세부추진항목으로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생산자조직 참여확대, 여성농어업인 단체활동지원,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정착지원, 양성

평등 의식 확산의 6개 과제를 설정하였음. 6개 과제 항목 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착지원은 별도로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은 정책인프라 추진 과제 안에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농어업 정책과제 속에 포함되도록 상위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농가공동경영협약 및 농어업관련 각종 법안의 개선이 이루어져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음.

<표 II-5> 정책과제 1(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정책 형성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음.	
	정책 집행	-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농가경영협약 및 농가등록제, 농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사항 기재 등의 정책이 보완됨. -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지자체의 추진의지에 달려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체계가 명확치 않음. -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협약이나 경영체 등록시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을 집행할 추진체계는 없음 ☞ 2010 여성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인정 조건을 알고 있는 비중이 22.4%에 불과함	· 정책연계 인센티브 미약(공동협약이나, 경영체 등록과 여성참여 인센티브 필요) ·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여성농어업인들의 인지도 약함) · 특정단체 중심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짐(공동경영협약 교육이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확대되지 못함)
	정책 성과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건을 명확히 한 점(농업종사사실확인서 제도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시 경영주와 종사원 명기, 농지원부에 가족사항 기재의무화) ☞ 농가경영협약 농가가 06년 92개 농가에서 09년 342 농가로 증가함. 여전히 성과는 미흡	

<표 II-6> 정책과제 2(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2.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정책 형성	-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 인지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음. (목표 40% 설정) - 여성참여 40% 목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부합하고 전체적인 양성평등 정책과 부합함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는 성인지 정책 실현의 매우 중요한 도구임
	정책 집행	- 중앙단위에서 농어업관련 각종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은 06년 33.1%에서 09년 20.1%로 오히려 낮아짐(목표는 07년 40%) - 자치단체 농정관련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은 06년 22%에서 09년 26.8%로 높아짐(목표 40%에는 못미침) - 정책시행 과정에서 수산영역이 포함되어 여성농어업인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수산부문에 대한 여성참여는 미흡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여성참여 확대(10%~20%)는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의 구축 및 심사규정 등이 제고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음.	· 정책참여에 여성참여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함 · 마을개발사업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마을심사 규정에 여성참여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해야함.
	정책 성과	- 여성위원비율(중앙은 낮아지고 지방은 높아지는 효과), 중앙의 경우 2008년 40%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도달 못함 - 농촌마을개발 관련 여성참여는 남녀공동대표제의 경우 실시되지 않았음. ☞ 설문조사 결과 2차 계획기간 중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도는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2.5%인데 보통이거나 미흡하다는 응답이 64.2%로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책체감도가 낮음	

<표 II-7> 정책과제 3(생산자조직 참여확대)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3.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직과 관련된 항목은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생산자조직의 경우 계획초기는 농업단체만을 포함했으나 이후 어민단체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계획서가 제출되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조직 유형별로 여성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여성참여의 경우 목표달성이 일정에 따라 잘 이루어졌음. 그러나 협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임원선출의 경우 목표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07년 이후 3년째 답보상태임. - 협동조합 여성분과위를 2010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2010년 사업에서는 목표에서 없어짐. - 작목반 참여확대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아서 측정이 어렵고 여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체도 없고 시행부처도 명확치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협 등 정부유관기관의 경우 강력한 추진의지로 성과목표를 강화해야 함.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조직 참여확대는 정책목표 대상으로 선정할 생산자 조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생산자조직 활동으로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작목반, 영농어법인 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여성농어업인들의 생산자조직 참여의사는 높았으나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참여해서라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II-8> 정책과제 4(여성농어업인단체 활동지원)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4. 여성농어업인 단체 활동 지원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단체활동에 관한 지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능력증진 및 민관협치를 위한 국정과제 실현과도 일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단체 활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의 실현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원의 균등화 및 표준화 필요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성농어업인 단체는 크게 4개 단체가 있으나 지원에 있어서 농가주부 모임은 농협,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는 정부 직접지원,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는 민간자립 및 최소지원으로 분화되어 있음. -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회원교육, 연구활동, 연찬회, 우수여성농어업인, 도-농 교류, 사업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양적인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지원내용의 집중성과 특정 단체로의 편중성은 강화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인 면에 국한한 단선적인 정책이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다변화된 교류방안 마련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단체활동의 지원에 있어서 교육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필요함. - 교류사업이 농-도 교류에 국한되어 있어서 정책대상자가 불분명함. 따라서 교류사업을 농-도 교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간,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 다변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단체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지원필요

<표 II-9> 정책과제 5(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5. 국제결혼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민여성의 문제는 다문화사회로 진전하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환경변화에 부합됨 -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부처간 역할 구분이 불분명함 	<p>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및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부처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정책대상자들의 영역충돌을 최소화하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p>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6년, 2009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적절히 이루어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157개가 구축되어 활동중임.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부처연계 및 전담조직에 맡기고 농어촌의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 이민여성관련 지원은 상담원을 07년부터 매년 40여명을 양성한다고 했으나 사업집행결과 보고에 상담원 양성은 없음.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관련 사업의 정책목표는 친정집 맺기, 모국방문 등 프로그램 중심 사업의 성과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어업 영역으로 특화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달성이 부족함. - 농어업 후계인력이나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 등으로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함 ☞ 조사결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과제로 한국어교육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문화 교육이 36.6%, 영농교육은 9.3%만이 응답함 	

<표 II-10> 정책과제 6(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6.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식 확산은 국정지표와 결합된 핵심과제임. 따라서 정책목표로 부합함 - 양성평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p>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은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프로그램 및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p>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교육 확산의 1차적 대상은 농촌사회 내부 구성원들의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과정이 중요함. - 그러나 양성평등 정책의 대부분이 교육이나 캠페인 수준이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함. - 정책시행계획에 양성평등 확산과 관련한 정책내용이 거의 없고 집행결과보고서에 아예 항목이 없는 연도도 있었음.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집행 정도가 대체로 미흡 - 여성농어업인, 남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정책과 연동한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함(각종 정책수혜대상 교육 실시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가 필요). 이를 위해서는 여타 정책담당부서와 구체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는 남녀 농업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이므로 의도적이고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함 	

2)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어업에서의 역할증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은 농어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여성농어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농업경영자, 농업 기술, 지역사회 리더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함. 따라서 영농형태, 지역사회의 변화, 농어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이 반영되어야 함.
- 2차 계획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세부항목으로 정보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및 컨설팅, 품목별 전문교육 참여 확대, 여성농어업인 전문강사요원 양성, 여성농정위원 교육, 선도 여성농어업인 해외연수 등 7개 항목을 설정하였음.
-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지역개발 등 전문인력의 영역, 세대별 전문인력 참여 집중육성 방향 등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표 II-11> 정책과제 7(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향상)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7.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향상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은 국정지표에 부합함. -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목표를 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성에 두고 있긴 하나 영역별 구체성은 미흡 	<p>경영능력을 향상하고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인력육성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p> <p>2006년 여성농어업인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p>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과정에서 어업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년차별 시행계획에 여성어업인에 대한 항목추가는 적절하였음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개발 리더과정은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함. - 지역혁신사업의 진행에 맞게 혁신리더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집행 등은 효율적이었음. - CEO 등 인력육성 과정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교육이나 컨설팅에 여성참여 확대는 비교적 이루어짐. 평생학습센터의 경우 기본계획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이었으나 연차별 실행계획은 8개소로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는 실행되지 않았음. - 농정위원 교육 역시 연차별 실행결과는 당초 기본계획의 목표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08년의 경우 집행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2010년의 경우 사업에서 아예 없음. - 교육과정의 집중과 연차적 연계는 필요하지만 교육과정 중 일부는 모집당시부터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실시었기 때문에 기타 대상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됨. 	

<표 II-12> 정책과제 8(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기반확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8. 후계여성농어업인력육성기반확충	정책 형성	- 후계여성농어업인력을 창업, 후계, 농업인턴, 대학생 창업연수 등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은 적절함. 그러나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과제로서는 적합지 않음.	· 후계인력 육성에 관한 영역별 특화 필요. · 관광, 가공 등 변화되는 농어업 여건에 맞게 재구성 필요
	정책 집행	- 정책시행 과정에 어업인 관련 정책이 추가된 점은 정책변화 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음. 또한 전업농이나 후계농 선정시 가점 반영 등은 상황변화를 잘 반영하였음. 특히 2010년 계획에 귀농귀촌에 있어서 여성관련 정책지원 강화방안 필요성 인식은 적절한 대응임.	
	정책 성과	- 당초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인턴제 등은 실시하다 중단되었고, 농산업 계열 대학에 관련학과의 설치할 수 없음.	

<표 II-13> 정책과제 9(노동생산성 향상 및 부담완화)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9. 노동생산성향상과 노동부담완화	정책 형성	- 생산성 향상은 모든 산업의 핵심과제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 임대활성화, 식사제공 등 농업노동 전과정 포함 필요.	· 농기계의 개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농작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임대농기계에 농작업 도구 추가를 요구함
	정책 집행	- 개발된 여성농작업 기계의 상용화에 대한 성과환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음. - 여성농어업인들의 노동경감을 위해서는 기존 농기계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육에 여성참여 방안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정책 성과	- 여성농작업 농기계 개발 숫자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여성농어업인 우선임대지침을 포함한 것은 적함. 그러나 여성농작업 관련 농기계 보유종목과 임대농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개선되어야 함.	

<표 II-14> 정책과제 10(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0.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지원	정책 형성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여성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또한 농어업, 농어촌 대책의 핵심 역시 농업외 소득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어업인들의 창업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부합함.	· 창업활동의 성공포인트는 결국 마케팅에 있음. 따라서 마케팅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창업과 관련한 영역은 고용인력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타 유관부처 사업과 연동시켜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정책 집행	- 여성농어업인 창업관련 사업은 06~08년까지 9개 소씩 증가하다 09년 72개소로 증가하여 일정계획에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 또한 창업 이외에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기술지도가 병행되어 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짐. - 2009년 농촌여성기업인 모임이 구성되어 도시 여성기업인과 교류가 시작되었음. 또한 최근 창업관련 지원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협조체계는 미흡함(마을개발, 마을반찬, 사회적기업, 공동체 기업 등)	
	정책 성과	- 창업활동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어업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가소득 향상에 가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5.8%로 높음.	

<표 II-15> 정책과제 11(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어업인 전문화)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1.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화	정책 형성	-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농촌개발은 농촌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 과정에 여성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이지 못함	· 목표를 분명히 하고 마을개발 지침에 여성관련 리더의 참여를의 무 화 하는 조항이 필요함. 여성공동대표제 및 사무장 채용시 여성농촌체험교육 이수 필수 등
	정책 집행	-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실제 지역개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가 점검되지 못함. - 지역개발에 필요한 체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적절한 정책대응임.	
	정책 성과	- 지역개발 교육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는 정책목표의 2배를 초과했음(06년 25%~09년 46%). 그러나 지역개발의 핵심인 마을개발위원장의 경우 5%가 넘지 않고 여성위원이 15% 내외인 점을 볼 때 교육과 실제 정책집행의 연관성이 낮음. - 농촌여성체험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대상이 여성농어업인이라면 실제 마을개발에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함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접근성의 악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의 여성화는 복지에서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함.

- 복지영역은 취약계층 복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및 생산적 복지 정책의 수준에서 제고되어야 할 영역임

<표 II-16> 정책과제 12(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2. 여성농어업인의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정책 형성	-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증대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또한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수급권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 또한 복지관련 영역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임. - 정책에 따른 수단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음.	· 연금이나 보험의 경우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가입율 향상인지 지원확대인지 목표지표를 설정해야함.
	정책 집행	-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정책 성과	-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움 - 연금의 경우 전국민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자 대비 편차가 발행하고 있음. - 보험의 경우 농작업 재해 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혜비율이 낮음 ☞ 조사대상자들은 2차 계획기간 동안 복지혜택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20.4%인 반면 미흡했다는 응답이 41.7%로 만족도가 낮았음.	

<표 II-17> 정책과제 13(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3.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정책 형성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에 대한 완화에 필요한 의료정책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의료지원 확대는 시설만이 아니라 농부증 등의 직업병 인정, 농어업 질병 전문진료병원 확보,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함.
	정책 집행	- 관련사업이 모두 보건복지부 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관련 지침이나 정책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 성과	- 목표대비 사업의 집행도는 높았음. 그러나 한방 보건사업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율이 낮음. 농촌 여성 건강실태조사의 경우 농진청의 농부증 실태조사가 있었음.	

<표 II-18> 정책과제 14(영농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4.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정책 형성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 및 복지향상과 관련해 중요한 국가 정책임.	도우미 사업과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연계
	정책 집행	- 기본계획에서는 정책항목의 목표달성을 이용요금, 이용일수, 인력지원단, 서비스 인력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출산도우미의 경우 법정 산전후 휴가인 90일 수준의 보장과 대부분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실거주지를 떠나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반영 필요	
	정책 성과	- 출산도우미 이용료는 현재 35,000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고 영농도우미의 경우 사고농가 및 취약농가 까지 확대되었음. 그러나 출산도우미 이용기간은 확대되지 않아 도시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비해서 형평성이 떨어짐. -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농어촌 일손돕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표 II-19> 정책과제 15(여성농업인 센터 운영확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5.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확충	정책 형성	- 최근 정부는 제3섹터 영역으로 복지영역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센터는 유일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지원기관으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이관됨.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집행이 어려움
	정책 집행	- 2006년 이후 증설된 곳이 거의 없음	
	정책 성과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은 0% 이루어지지 못함. - 센터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센터 관련 정책은 센터수를 늘리기 보다는 기능전환에 두어져야 함. - 여성농어업인 대상 정책설문조사 결과 센터의 역할에 대해 보육 14.2%,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 53.4%로 센터 역할 변화 필요.	

<표 II-20> 정책과제 16(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16.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정책 형성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최근 보육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과제로서 적절함	지원액과 지원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거주 주소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 필요)
	정책 집행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거주지 제한이 있음. - 조손가족의 경우 주소지는 도시, 실제양육은 농촌 등 주거불일치 문제 있어 조절이 필요함	
	정책 성과	- 성과목표치가 아동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음. 농어촌 지역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서 목표수치는 무의미함. - 다만 정책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숫자보다는 지원액의 현실화가 더 중요한 과제임.	

<표 II-21> 정책과제 17(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평가

구분	평가기준	내용	보완점
17.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여건에 대한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특히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보육서비스 다양화가 현재 보육정책의 핵심임. 따라서 정책수단은 시설확충만이 아니라 보육다양성에 두어져야 함.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 최소 1면 1보육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함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조항을 법제화하여 시행을 강화하도록 정책적 요구가 필요함.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담당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사업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측정이 어려움. 	조사결과 여성농어업인들은 보육여건개선 방안으로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1.5%,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26.87%로 응답함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실시되고 있어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어려움이 있음(일정수가 채워져야 함) - 국공립 보육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진 읍면단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기관으로 인증전환을 하고 있지만 시설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형 보육시설의 인증 및 개소기준의 변화가 필요함 - 농어촌 시설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시행됨(10만원 지원) 	

<표 II-22> 정책과제 18(여성농어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평가

구분	평가기준	내용	보완점
18.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여건 개선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 특히 문화향유 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순회공연이나 소모임 지원은 적절한 정책 방법임(설문조사 결과 전시회나 공연은 26.7%로 매우 낮음)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면단위 농협 등의 역할 필요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공연은 당초 06년 2006년 17회에서 점점 증가하여 2009년 200개소로 증대하였음.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여성농어업인 스스로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위문형에 불과함 - 여성농어업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여성농어업인 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중 프로그램개발이나 소모임 지원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었음 	

<표 II-23> 정책과제 19(종합문화복지관 모델개발 및 보급) 평가

구분	평가기준	내용	보완점
19. 농촌종합문화복지관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로 인해 문화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저하된 실정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종합복지관 정책은 바람직함. 	면단위 문화복지관 보급사업은 국가차원의 농어촌개발공간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관 사업을 실행할 시행주체가 없음. - 시행실적이 없음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관 관련 사업집행 실적이 없음. 	

4)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정책추진 인프라의 요소로 법, 제도, 인력, 추진체계 등 4가지 요인이 반영되어야 함.
- 2차 계획의 정책목표가 남녀 파트너십의 정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표에 부합한 정책추진 인프라가 보완되었는지는 평가가 필요함.

<표 II-24> 정책과제 20(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20.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정책 형성	- 정책목표로 시도계획수립, 전담인력 보강, 협의회 운영, 2차 계획 중간평가, 담당공무원교육 등을 설정하고 있어 정책형성은 적절함.	정책추진 인프라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약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인프라에 대한 개입여지가 매우 낮음
	정책 집행	- 시도계획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중앙의 계획을 집행하는 수준의 계획에 불과함. - 전담인력은 보강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오히려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었음. 또한 2차 계획의 중간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었음	
	정책 성과	- 중앙부처에서 실행하는 계획, 법으로 정해진 계획 이외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함. 또한 중앙정부 계획 중 3차 계획 수립을 위해 중요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시군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제정(시도평가 항목 참조)	

<표 II-25> 정책과제 21(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21.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	정책 형성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 농업정책의 경우 정책목표가 대부분 농가를 단위로 하는 양성적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의 의미가 매우 큼	농림수산 정책 중 성별 격차가 예상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함.
	정책 집행	- 2006년 13개, 2007년 6개, 2008년 2개, 2009년 3개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됨. 특히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홍보 및 성과가 불분명함 - 농림부 성별영향평가는 심층평가 사업으로 농기계 생산, 임대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음	
	정책 성과	- 성별영향평가 정책목표 달성도가 낮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대상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표 II-26> 정책과제 22(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22.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	정책 형성	- 성별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목표에 부합함	정책별로 성별통계가 생산되고 활용되어야 함.
	정책 집행	- 2003년 통계생산 이후 2008년에 통계를 생산, 5년에 1번 생산. 또한 2010년 농어업총조사 실시 시 여성농어업인 경영주 현황 및 미취학 영유아 현황 포함 추가, 결혼이민자 관련 조사항목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함	
	정책 성과	- 성별통계의 생산 결과가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성별통계의 생산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는 성별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집행 성과 보고서 성별통계를 의무화해야 함.	

<표 II-27> 정책과제 23(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 개발)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내용	보완점
23. 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 개발	정책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는 정책대상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함.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제가 다문화 가정에 초점이 있어서 실제로 여성농어업인들의 가공, 경영 등 농업외 소득,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의 생산자원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미래발전 전망 및 현실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정책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농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정책과제 생산이 적절치 못했음. - 과제수는 매년 2개씩, 연구분야는 전문분야 및 지자체 연구기반 확충으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2007년 이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연구가 다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짐. 	
	정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된 정책목표의 년차별 2개 과제는 달성했으나 내용이 다문화에 집중됨. 현재 농어촌, 농어업 관련 현황에서 농촌개발 여성인력육성이나 고령 여성 생산자원화는 이주여성 못지않게 중요한 당면 정책 과제임. 	

3.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 평가

3.1 시도 여성농어업인 정책체계 및 평가지표

1) 정책수립 체계

- 시·도 여성농어업인정책 수립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에 의거하여 중앙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시행실적과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해야 함.

<표 II-28> 시·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계획」(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제 시행에 필요한 투융자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수립된 시·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	○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작성	매년 농식품부 농촌사회과에 제출
	농식품부 농촌사회과	○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평가지표

① 기반체계(인프라) 대한 평가 항목

- 각 도의 행정적(인력규모, 인력의 전문성, 평가구조의 존재 여부), 재정적(예산의 규모, 여성발전기금 등), 법적(법·제도의 정비) 역량 평가

②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정책목표의 적절성, 수단의 구체성, 성과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

<표 II-29>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평가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척 도
기관 역량 평가	집행 기관의 능력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 평가구조 존재 여부
		재정의 적정성	- 예산의 규모, 여성농어업인 지원 기 금 여부
		법·제도의 정 비	- 법·제도정비 실적 -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 수립 여부
정책 영역별 평가	정책 형성	중앙과의 연계 성 및 지역적 특성 반영	- 정책목표와 상위목표와 연계성 - 정책목표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목표의 구체성	- 목표설정이 구체적인가? 정책목표를 실행시킬수 있는 조례·법, 예산 등 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정책 집행	수단의 적절성	-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 구, 예산, 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정책 성과	목표의 달성도 (진전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 는가? 계획 대비 추진실적

3.2 시·도 여성농어업인 정책 총괄평가

1) 정책목표와 기본시책 방향

-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의 정착’ 임. 이는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전체 사회의 패러다임에도 적합성이 있고 농어촌의 공동화 및 노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현실에서 타당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으로 평가됨.
- 대부분 지자체들의 기본시책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은 거의 없음.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은 대동소이함.

- 정책추진의 과제에서 핵심인 정책인프라 구축의 경우 계획에서 배제된 지역이 많음. 특히 광역시의 경우 보육서비스 지원 이외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지원정책이 없었음.

- 광역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수립의 기본인 정책대상자 욕구조사 및 자문, 심의 등의 과정이 없이 시도단위 기본계획이 제시된다는 것은 문제임. 이는 집행체계가 없다는 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임.

2) 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기관역량 평가)

① 현황

-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체계는 3가지 수준을 가짐. 먼저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의 구성임. 이는 추진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지만,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일년에 한 두 차례의 회의가 활동의 전부임.

- 여성농어업인 협의회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미미함.
- 집행기구는 담당자 1명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사업이 농협이나 도 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표 II-30>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부서

시 도	국	과	담 당
강원도	농정산림국	농어업정책과	농어업소득
경기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보육,센터,도우미 사업담당자
충청남도	농정수산물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	농업농촌과	농업교육복지
전라남도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경상북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소득기획
경상남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육성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도시영농팀	관련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농업정책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	관련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	농식품유통과	농정팀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생명농업과	관련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업유통과	관련사항 없음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농축산과	관련사항 없음

② 성과

- 2차 계획 기간의 가장 큰 성과는 광역자치체별로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점이나 대부분 지역의 조례들이 아직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장롱조례에 불과함.
-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여성정책협의회나 정책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성별통계나 양성평등 정책실현 관련 항목을 담고 있음. 또한 전담부서 설치 및 성별통계 생산을 조항에 포함함.

<표 II-31> 정책추진 관련 조례(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각시도)

조례 제정 현황 (2010.01.21일 현재)

지역	시군	제정(공포일기준)	기초
경기	도	2009.08.13	양평(2009.10.16),가평(2008.02.19),남양주(09.03.26)
강원	도	2009.07.03	원주(2007.12.31),속초(2009.04.15),양구 (2010.01.01).
충북	도	2008.04.04	영동2007.12.27, 제천2008.11.07, 옥천 2009.04.20.
충남	도	2009.04.15	아산2007.09.17, 예산 2008.06.13, 홍성 2009.04.24
전북	도	2007.12.28	남원 2009.04.29 고창 2009.03.31 김제 2009.05.25, 익산 2009.08.14. 군산 2009.09.30
전남	도	2008.01.09	순천 2007.10.01 나주 2008.01.14 강진 2008.07.03, 영광 2007.12.31, 보성 2009.07.07
경북	도	2008.09.22	문경 2008.01.08 성주 2009.01.08 상주 2009.12.29, 울진 2009.10.01
경남	도	2008.12.31	합천 2009.05.07 진주 2009.06.26 밀양 2008.10.24
제주	도	2008.04.0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제정(2007.8.8)
현황	9개 도 29개 시·군 제정됨.		

※ 성별통계 생산 및 정책과제 개발 : 수행된 곳 없음

3.3 지역별 세부추진 실적 검토(정책영역별 평가)

1) 시책목표 : 모두 동일함.

2)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업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음.
- 시도 시행계획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데 주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항목이었음. 또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정책의 경우 타 유관부서 복지정책 항목을 나열하기도 하고, 학자금 지원 등 보건의료(특히 한방) 관련 항목 등을 보고하기도 해 여성농어업인 정책항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가 필요함.
- 시행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실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미진함.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실효성이 제기됨

<표 II-32> 시도별 사업내용 분석

추진계획 비교					
시도	추진과제	추진체계			
		여성위원	협의회	정책개발	특징
강원	중앙과 동일 정책추진인프라 없음	23%	없음	다문화 복지	공동취사장 및 농작업 환경개선
경기	중앙과 동일 정책추진인프라 없음	30%	없음	없음	여성농어업인 세미나
충북	중앙과 동일	30%	운영 (08)	없음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 3개
충남	중앙과 동일 정책추진인프라 없음	7.4%	없음	없음	없음
전북	중앙과 동일	15%	없음	없음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
전남	중앙과 동일	23%	06년만	없음	여성이장 여성농업인센터1개 가족경영협약지원
경북	중앙과 동일 정책추진인프라 없음	없음	없음	정책세미나	농촌보육정보센터 가족경영협약지원
경남	중앙과 동일	20%	자문위	없음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제주	중앙과 동일	40%	구성운영	여성분과 네트워크	농기계 실태 양성평등 확산 가족경영협약 지원

3) 자치단체별 이행계획의 특징

- 광역시의 경우 영유아 양육지원 이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함. 총괄평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집행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임.

<표 II-33> 시도 년차별 시행계획 총괄평가

시도	총괄평가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창업 활동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개인 농작업도구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의 환경변화 및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액이 너무 열악하고(개인당 4만원)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지원이 전혀 없었음 정책핵심과제 중 여성농어업인과 관계가 없는 복지관련 사업 항목이 모두 여성농어업인 정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책담당자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이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산자조직, 농협 등 영농관련 조직과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 관련 항목은 보고되어 있지 않음. 정책내용이 전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보다는 여성농어업인 복지에 치우쳐 있음. 다만 여성참여비율은 높은 편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실적을 상세히 보고함. 특히 양성평등 교육이나 여성이장 확대 노력이 있었음.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음.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약함. 여성농어업인 위원비율도 7.4%에 불과하거나 집행실적 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함.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이 미흡함. 특히 2008년, 2009년의 사업 집행 실적보고는 거의 없음. 공동경영협약, 농협 여성참여비율, 후계자 여성비율 등 농관련 생산조직과 여성농어업인 관련 항목이 거의 없음.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지원 중 창업관련 항목은 기록되지 않았음. 그러나 교육내용에 가공관련 교육이나 농외소득 관련 교육이 많아 실제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정도를 보여줌.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서가 핵심과제별로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 그러나 2008, 2009 보고서의 복지향상 과제 실행보고

	<p>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남녀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이장 비율을 높이고 농가공동협약을 지원한 점이 특징임.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 관련 핵심과제에 대한 연차별 시행실적 및 계획이 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내용과 핵심과제별 배치가 다르게 나타나 담당자의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차 여성농어업인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남녀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실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음(양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가족경영협약, 행복농촌 프로젝트 등)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잘 보고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보고 및 여성위원 비율이나 조례 등에 대한 항목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음. 보육정보센터나 시군별 문화복지센터 확대, 여성농어업인 대상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집행이 타 시도의 계획에 비해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특화 정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짐.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보고서가 핵심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되어 있으나 2007년과 2008년 실적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음. 농소정 교류사업 농촌마을 입간판 설치사업, 한방진료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 사업이 아닌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다문화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되어야 함.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개편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실무자를 배치하였음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시행계획과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잘 이루어져 있음.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실적이 뚜렷이 향상되고 있음(양성평등교육, 여성이장 지원, 직업적 지위 인정수단 획득운동, 농정관련 여성위원 비중 확대). 여성농어업인 전문 인력화 추진과제 역시 변화하는 농업정세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자세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부록 참고

4.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점 및 보완점

4.1 성과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광역지자체까지 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가능케 함.
- 2차 계획기간 동안 지방정부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조례의 제정임. 또한 지방정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양성평등 성 주류화 패러다임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또한 농어업·농어촌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창업 관련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은 농가경영체 등록시 경영주와 종사자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농지원부에 가족란을 명기, 공동경영협약 확대 등 가장 성과가 큰 부분임. 또한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남녀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기초 여건인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발전된 사항임. 특히 지역별로 소득과 연결된 가공, 마케팅, 경영, 지역리더 등 전문 인력화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
- 복지관련 서비스 영역 중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됨. 특히 출산도우미의 경우 도시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농촌지역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 여성의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

4.2 보완점

1)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 제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남녀 파트너십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파트너십을 증진 할 수 있는 양성평등 확산이나 여성참여 증진에 대한 노력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편차가 심함.
- 농업정책의 성 주류화는 미흡함. 또한 농촌지역 양성평등 지수향상을 위한 정책미흡(캠페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연동시키는 방안 필요). 또한 여성참여비율이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비율인지 여성인지 명확한 성과목표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추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특정 시도의 특정단체 지원, 특정기관의 특정단체 지원 등 정책추진이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여성인력 육성 및 능력개발 정책이 제한적임.

2) 여성농어업인 전문 인력화

- 농어업, 농어촌을 둘러싼 내외적 변화요인에 대응한 세부적인 정책계획이 미흡한 점(농업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 인력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경영자로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증진, 리더십 증진 등)
- 농어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하는 능력증진 관련 훈련과정 미흡(교육에 관한 부분이 전적으로 농협과 농진청에 맡겨져 있어서 특정단체 및 통합적인 인력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교육관련 도구의 다양화 및 단체편중성을 극복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단계별, 전문영역별 특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핵심인 후계인력이나 여성 귀농인에 대한 정책대안의 실행·점검 시스템이 미약함.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 지방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예산이 지방양여금로 이관된 경우 사업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중앙지원이 끊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향을 보였음.(대표적인 사업이 여성농업인센터와 평생교육기관 사업임.)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미약이 원인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문화관련 정책은 후퇴- 기초생활 보장 정책, 서비스제도 개선 등의 영역은 확대됨.(참여형 문화활동 및 고령자에 대한 문화서비스 지원방안 필요)
- 농작업 재해, 연금, 고령여성 관련 지원은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고령 여성농어업인을 생산자원화 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함. (일본의 경우 남녀공동참여계획에 주요 정책과제로 고령여성을 생산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4) 정책추진 인프라

-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매년 시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이 점검될 수 있음. 그러나 이행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보고가 형식에 불과함(시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예산 연계 등 인센티브 필요).

-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자에 대한 정책이해 교육이 필수적임. 또한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의 경우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연구나 통계생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정책이 수립되도록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시행계획 총괄 보고서 작성 보완

- 사업집행시 지방정부의 농산업 육성관련 사업과 연계한 집행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여성농어업인 대상사업의 연계성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통합성을 통해 정책효과를 증진 유도.
- 시도 여성농어업인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하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중앙의 기본계획 수립에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유도.
- 여성농어업인 정책관련 사업을 중앙과 지방/ 농협과 농진청/ 부처별로 구분하여 세분화, 보고관련 지표의 명확한 설정 및 심의가 필요함.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할 핵심과제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내실화.

<표 II-34> 2차 평가 결과 3차계획 수립시 보완점

	2차 5개년 항목	3차 5개년 보완 내용
비전	남녀농업인이 책임 과 성과공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할 것
목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 트너쉽 정착	. 여성농어업인의 능력이 증진되고 인정되는 양성 평등한 농어촌사회 구현 제시
추진 과제	여성농업인 지위향 상	. 2차 계획기간 만들어진 제도의 실행을 강화할 방안 모색. 정책실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 도록 기타사업과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 전문인 력화	. 통합적 교육시스템 마련. 평생교육 관리와 대상 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방안 제시 .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
	여성농업인 복지증 진	.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정책 세부과제를 분명히 할 것. 타 부처와 중복, 연계, 차별화 . 연금, 보험의 경우는 지위향상과제로 이동 .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시행 계획에서 중앙/지방의 역할구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 . 중앙-지역 정책연계 시스템 평가
성과	법제도의 정비의 구체화	. 기본법, 조례 제정 및 실행 현황
	지역여성농어업인 정책수립	. 집행체계 및 실행내용 점검
	여성농어업인 지위 구체적 제도개선	. 마을개발 등 농촌개발 영역의 참여정도 및 지위 관련 항목 추가
	보육,결혼이민여성 지원강화	.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율성 증진방안

Ⅲ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의 농어업 여건변화 및 전망

-
1. 농어업 대외여건 변화
 2. 농어업, 농어촌 내적 환경변화
 3.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변화
-

1. 농어업 대외여건 변화

- 3차 계획기간(2011~2015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요인으로 농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달러약세 전망에 따라 유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강세가 예상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영농비가 증가되어 농산물 생산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제 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DDA 협상/FTA 확산 등 개방경제 추세 가속화.
 - 한-중, 한-멕시코 등 FTA 협상 가속화
 - 세계 경제 악화에 따른 농산물 보호주의 강화. 이로 인해 농산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각국의 식량주권 의지 확산으로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농업정책은 공격적인 정책을 강화할 것임.
 - 일본 식량자급율 노력(식료농산기본계획에서 자급율을 강조함)
- 식품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및 식품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추정되고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자동차나 IT시장보다 큰 규모임.

☞ 세계 인구 : ('07년) 67억명 → ('50년) 92억명 증가 전망
- 식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의 강화 및 경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이 확산될 것이며 고투입 농법에 대한 전환이 요

구되며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도시민 89.4%, 전문가 87.5%, 농업인 76.9%로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가치 부여 의식이 높음
- IT, BT 등의 지식과 기술혁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IT 혁명은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BT 기술이 농업에 접목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크게 진전될 것임.
- 소득 증가,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교통망 확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어촌은 전원주거-체험관광-휴양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 농촌관광수요(농림수산식품부) : ('02)36백만명 → ('05)68백만명 → ('11)146백만명
- 학교급식 실시 및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 등 농업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이는 농식품의 가공관련 '손맛'을 가진 고령여성들을 자원화 할 수 있음.
- 농어민의 도시적 생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웰빙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농산어촌 지향성도 증가하고 있어 농산어촌의 새로운 발전 잠재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쾌적한 전원생활 등에 대한 수요 확대
 - ☞ 5~15년 후 연금 1세대들의 전원생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2. 농어업, 농어촌 내적 환경 변화

- 농업총생산액은 200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약간 상승함.
- 농가교역은 2000~2003년 다소 개선되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임. 2009년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2.8%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 가격지수가 4.6% 상승하면서 농가교역 조건은 84.7로 전년 대비 1.7% 악화
- 농수산물은 환율악화, 재배면적 축소 및 어획량 감소 등 공급충격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수요증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농가소득에서 경영비 비중이 2008년 62.2%를 차지함(2003년 50%). 따라서 농가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운영 불가피. 이는 농업생산방식이 자본재 투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비용 구조의 경영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
- 농가경영 악화
 - 농가의 양극화 심화
 - 농가소득 정체(08년 농가소득은 04년 대비 5.2% 증가, 농업경영비는 11.1% 증가)
 - ☞ 농가소득 : 04년 29,001천원 08년 30,523천원
 - 농업경영비 : 04년 14,572천원 08년 16,189천원
- 농가에서 농외소득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될 전망이다.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업외 소득활동이 증가될 전망이다.

<표 III-1> 일본 농촌여성 농가공사업 현황

- 일본 농림성에서 '농촌여성가공회'라는 조직을 운영함
- 조직구성은 마을단위로 구성되며 법인 조직체를 구성
- 조직원의 평균연령은 62세이며 구성원 수는 10인 내외
- 판매처 : 지역내 'ふるさと(고향)' 직매장, 이벤트장, 택배
- 당면한 어려움 : 자본부족, 후계인력 부족, 고령화로 인한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 부진, 경영적 측면의 진단 미비 등

- 농가인구는 '04년 347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2% 수준이나, 10년 후에는 226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III-2> 농가인구 전망

	2004(P)	2005	2008	2014
▪ 농가호수(천호)	1,252	1,233	1,158	1,000
▪ 농가인구(천명)	3,465	3,364	2,981	2,259
- 총인구대비(%)	7.2	6.9	6.1	4.5
▪ 농외취업률(%)	18.7	19.2	20.4	23.2

주: 농외취업률은 농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농외취업자(농가경제활동인구-농림업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전망 2005(2005)

- 농어촌지역 작물재배 면적은 쌀의 경우 점점 감소하고 시설작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설작물의 증가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노동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역할을 증대시킬 것임.

<표 III-3>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2004	2005	2008	2014
▪ 하계작물	1,388	1,379	1,296	1,122
(쌀)	1,001	987	932	804
▪ 동계작물	161	163	155	142
▪ 과수작물	154	153	147	139
▪ 시설작물	86	84	89	104
▪ 기 타	152	153	153	152

자료: KREI, 농업전망 2005

○ 농어촌 복지 미흡

- 농어촌 복지, 생활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격차가 큼
- 노후주택비율 : 도시 9.1%, 농촌 24.5
- 병원 1개소당 도시 886명, 농촌 1,367명
-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 : 16.9%에 불과
- 농어촌 보육시설 : 19.4%(대도시 38.9%)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 농어촌지역 시도가 많음.

<표 III-4>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구수	135	4	1	10	11	8	14	13	20	23	19
총 읍면수(A)	1,417	20	12	142	119	103	171	159	229	238	198
보육시설 없는 읍면수(B)	450	8	2	9	21	34	43	65	80	102	86
비율(B/A)	(31.8)	(40.0)	(16.7)	(6.3)	(17.6)	(33.0)	(25.1)	(40.9)	(34.9)	(42.9)	(43.4)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07)

<표 III-5> 2009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①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 높음
 - 도시민의 89.3%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
 - 가장 중요한 농업 농촌의 역할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지적함
 -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 을 전문가는 '후계인력 육성'을 각각 주문
 - ② 2009년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을, 가장 성과가 낮은 정책으로 농가경영안정대책을 선택
 -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농산물 안전성과 후계인력 육성(전문가), 연금 지원과 직불제 확대(농업인)를 선택
 - ③ 농가 경영 주된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32.0%)와 인력부족(19.5%)
 - ④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
 - 도시민의 62.5%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
 - 83.8%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
 - ⑤ 도·농간 거주환경 만족도 격차는 19.4%p로 여전히 크며 특히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15.1%로 매우 낮은 모습
 - 거주환경 만족도 : 도시민 56.2%, 농업인 36.8%
 - 삶의 질 만족도 : 도시민 22.6%, 농업인 15.1%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농업인/전문가 2,470명 설문(09.10~1월)

○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가내의 분화가 심화되어 농가의 규모화는 더욱 진전될 것임. 또한 경영규모의 전업화, 규모화가 더욱 심화되어 농업 내부의 차이가 확대될 것임.

○ 농가경영규모의 전업화·규모화의 진전은 농산물 가격불안정, 재해 등의 경영위험이 있을 때 농가의 시장대응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이 중시될 것임.

3.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변화

- 3차 계획기간에 실행될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은 기존 농정의 패러다임을 확대하면서 농식품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책대상의 변화
 -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의해 농림부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식품부로 정책대상이 확장됨. 이에 따라 어업, 어촌, 어민 관련 정책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농식품³⁾관련 부분이 정책에 포함됨.
 - 여성농어업인 육성 제27조⁴⁾ 1항과 2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농업정책은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농촌·농민문제는 소득·복지 면의 대응책을 강구 하도록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적 관심이 농업부문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지역정책으로 외연은

3)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식품과 식품산업은 제3조 7항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8항에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4) 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확장될 것임.
-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농촌복지·교육 및 지역개발이 급격하게 전개될 것임.
- 생산증대 중심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
- 생산기반정비 등 토목사업중심의 투자를 축소하고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등 을 통해 개방화에 적극 대응
- 대 농민지원은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실 요인을 최소화
- 따라서 계획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목표는 경영혁신과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 이를 위해서 농업정책이 전체 농가에 대한 평균적 지원으로부터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변화되고 대규모 1군 1유통회사,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주식회사 등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될 예정임.
-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요인은 정부의 재정분배 방식의 변화임. 향후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량권은 확대될 예정임.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나 농가도우미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이관된 상태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

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을 확대하거나 시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여성농어업인들의 권리확보가 어려움. 즉 권리확보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치력이 중요해짐

- 국가재정법 개정(06)으로 향후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 인지에산 제도'를 도입함.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정책을 양성평등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출산은 미래사회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확산되고 있음. 농촌지역의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사회적 수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취업의 증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가족내 성역할 모델 다양화 및 가족관계가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가족이 담당해 온 보육, 노인수발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구축이 요구됨.
-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의 증대가 필요함. 국제결혼, 취업이민 등 이주민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 농어업·농어촌 대책 중 여성농어업인과 관련성이 큰 정책항목
 - 지자체 공동 홍보 판매 - 장류 박람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영역 특화)
 - 농식품부 : 소규모 창업 및 여성농어업인 경제활동 지원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10. 10월)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0. 5월)
 - 여성농어업인의 소규모 창업 경영지원
 - 도-농 여성기업인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09년 31쌍, 10년 60)
 - 창업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선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 생산가공 시설, 포장개발, 유통개선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원계획 09년 17개소 17억원 - 1010년 18개소 18억원
 - 농림수산 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 식품기업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농어업 생산분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 가업승계 영농, 영어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교육, 컨설팅, 생산기반 지원
 - 우리술, 장류, 천일염, 기능성 식품 등 1+2+3 차 복합산업 창업지원
 - 공동체형 농어업인 홈 조성방안(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및 지원-여성)
 - 도-농 교류 활성화/ - 2008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초등학교 체험교육 제도화 전문인력양성, 지역역량 강화
 - 농어촌서비스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일자리 확대
 - 정보화, 마케팅, 관광 등 다양한 직종 경험자의 귀촌을 지원해 다양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운영인력 공급
 - 농촌형 공동체 회사, 마을법인 등 신규 인력 수요처 개발
 - 여성관련 사업
 - 연중 : 도-농 여성기업인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어촌 공동체 회사 모델 개발
 - 체험마을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평가시 여성친화형 마을개발 시설 및 개발지표 반영

IV

제3차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 3차 계획기간 중 여건전망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
 2. 3차 여성농어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정책기조
 3. 3차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4. 3차 5개년 계획의 정책과제
-

1. 3차 계획기간 중 여건전망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변화

1.1 3차 계획 기간 중 여건전망

1) 여성농어업인 인구통계학적 여건

가.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여성화

- 여성농어업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농가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농업전망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2004년 총인구 대비 7.2%에서 2014년에는 4.5%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5).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어느 정도 있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나타났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는 더욱 뚜렷해짐.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어 농촌사회 자체의 존립 위기가 도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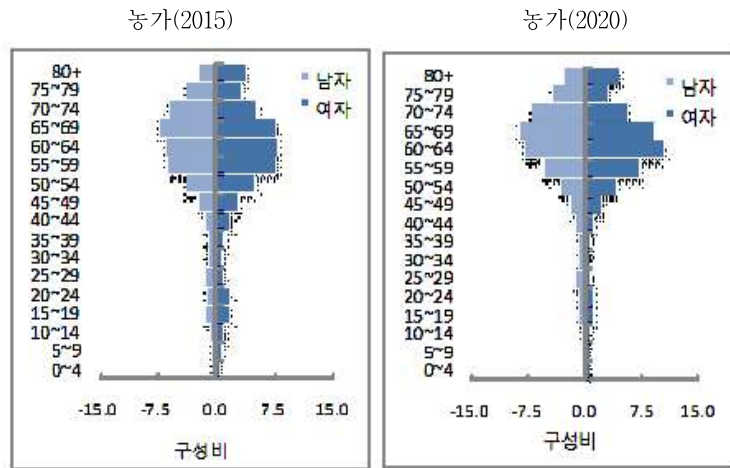
<표 IV-1> 성별 연령별 장래 농가인구 추계 (2005~2020년)

단위: 명

	2005		2010		2015		202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4세	35,333	31,917	18,662	16,708	12,193	10,861	7,808	6,968
5~9세	60,898	53,910	27,089	24,170	15,243	13,608	9,369	8,306
10~14세	82,118	70,909	47,107	42,415	23,651	21,423	13,237	11,988
15~19세	83,046	74,746	61,872	57,778	38,320	37,719	20,218	20,646
20~24세	77,377	71,858	46,797	44,600	36,469	35,246	23,462	24,401
25~29세	83,323	59,777	63,247	36,585	40,540	21,703	33,651	16,921
30~34세	71,006	47,700	44,184	26,923	30,977	17,143	19,016	9,198
35~39세	67,606	61,538	47,806	40,440	29,552	23,375	19,813	14,734
40~44세	89,934	95,140	60,466	62,001	41,789	41,537	25,475	24,591
45~49세	126,426	137,095	91,037	102,136	62,883	70,961	44,918	50,069
50~54세	131,538	152,847	132,301	158,957	102,493	126,097	73,996	93,190
55~59세	150,058	166,420	150,035	179,893	158,859	196,749	130,822	167,560
60~64세	160,513	191,234	168,879	196,083	169,149	205,273	186,914	237,536
65~69세	191,400	217,121	185,450	197,669	188,312	194,710	20,263	214,447
70~74세	148,482	160,797	163,042	146,671	158,161	133,897	165,620	128,692
75~79세	74,114	84,828	92,631	85,200	101,843	81,361	97,626	70,581
80세이상	43,420	79,144	50,828	91,162	61,354	98,806	68,309	99,923
전체	1676592	1756981	1451433	1509392	1271789	1330469	1142516	1199751

자료: 김태현 외., 2008

<그림 IV-1> 장래 농가인구 구조 변화 (2005~2020년)



- 농촌인구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될 것임. 따라서 빈곤의 여성노인화, 독거노인의 여성세대주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임. 이를 담당했던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서비스 지원 역할이 증대할 것임.
- 어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어업인구 중에서 농어업을 겸하는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어서 여성어업인의 노동력은 강화되고 있음.

<표 IV-2> 어업인구

	어 가	어 가 인 구				어업종사자가구원 ¹⁾	호당어가인구
		계	남	%	여	%	
2000	81 571	251 349	126 775	50.4	124 574	49.6	139 837
2005	79 942	221 132	110 658	50.0	110 474	49.8	130 589
2006	77 001	211 610	106 340	50.3	105 270	49.7	128 048
2007	73 934	201 512	100 985	50.1	100 527	49.9	122 916
2008	71 046	192 341	95 856	49.8	96 485	50.2	118 879

1) 어업종사자 가구원 : 조사기준일 현재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조사실시전 1년동안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 식물의 포획, 채취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료 : 통계청 2009

자료 : 통계청(농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나. 다문화 가족의 증대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건수는 2000년 11,605건에서 2009년 33,3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09년 10.8%로 증가함(2010 박대식 국정과제공동세미나 자료집)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은 2009년 도시(동부)가 17,846건으로 농촌(읍·면부)의 6,839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구성비는 농촌(12.9%)이 도시(7.2%)보다 높음. 2009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5,640명 중 35.2%에 해당하는 1,987명이 외국여자와 혼인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2009년)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남.

<표 IV-3> 농촌(읍·면부)과 도시(동부)의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단위: 건, %)

		혼인건수 (A)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건수(B)	구성비 (B/A)	건수(C)	구성비 (C/A)	건수(D)	구성비 (D/C)
2008년	계*	327,715	28,163	8.6	6,459	2.0	2,472	38.3
	도시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
	농촌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
2009년	계*	309,759	25,142	8.1	5,640	1.8	1,987	35.2
	도시	248,050	17,846	7.2	1,295	0.5	307	23.7
	농촌	52,919	6,839	12.9	4,341	8.2	1,679	38.7
전년 대비 증감률 (%)	계*	-5.5	-10.7	-	-12.7	-	-19.6	-
	도시	-5.5	-10.3	-	-13.6	-	-29.3	-
	농촌	-7.2	-12.9	-	-12.5	-	-17.6	-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2010).

- 연간 가구소득 분포(2007년)를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12.2%, '1,000~1,500만원 미만'이 16.5%, '1,500~2,000만원 미만' 24.7%, '2,000~2,500만원 미만'이 28.5%, '2,500~3,000만원 미만'이 13.0%, '3,000만 원 이상'이 4.8%로 나타나 응답가구의 절반 이상(53.4%)이 연간 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표 IV-4> 참조).

- 2007년도의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이 31,976천원(농림수산물부, 2008)임을 감안해보면 농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94.9%)이 전국 농가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음.

<표 IV-4> 연간 가구 소득 분포(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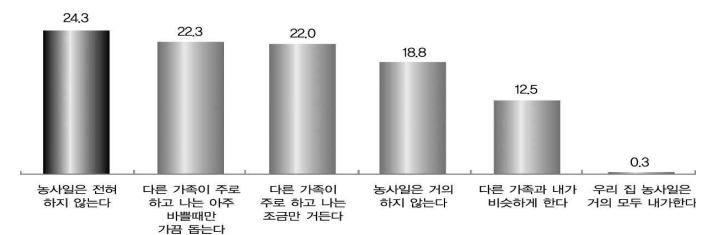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1,000만 원 미만	49	12.2
1,000~1,500만 원 미만	66	16.5
1,500~2,000만 원 미만	99	24.7
2,000~2,500만 원 미만	114	28.5
2,500~3,000만 원 미만	52	13.0
3,000만 원 이상	19	4.8
잘 모름	1	0.3
계	400	100.0

자료: 박대식·최경은(2008).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57%가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으로 평균 국내 여성농업인과 비교해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냄.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의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고졸이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11%임.
- 농사일에 본인의 역할 비중은 '다른 가족과 비슷'(12.5%),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조금만 거름'(22.0%),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바쁠 때만 가끔 도움'(22.3%), '농사일 거의 하지 않음'(18.8%),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음'(24.3%)로 '농사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43.1%로 나타남.

<그림 IV-2> 농사일에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

(단위: %)



자료: 박대식·최경은(2008).

2)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여건

- 농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3ha 이상 농가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3ha 미만 농가는 점점 축소하고 있음. 규모의 양극화는 농어촌 내부에 농업만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농가의 발생으로 인한 농외소득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임.

<표 IV-5> 농지규모별 농가현황

	농가 호수	경종 외 농가	규 모 별 농 가							
				0.1ha 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90	1,767	24	1,743	15	468	544	352	191	129	44
95	1,501	24	1,477	16	417	432	265	153	123	70
00	1,383	14	1,369	30	410	379	219	132	114	85
05	1,273	17	1,256	38	419	330	174	107	93	93
06	1,245	15	1,230	38	449	325	158	94	80	86
07	1,231	16	1,215	36	454	313	156	90	80	86
08	1,212	14	1,198	28	449	308	155	89	81	88
09	1,195	14	1,181	16	454	300	152	87	82	90

자료 : 통계청(농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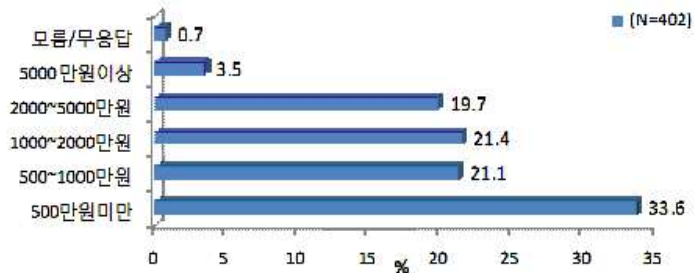
- 전업농 비중은 감소하고 겸업농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 농외취업비율은 2004년 18.7%에서 2014년 23.2%로 증가할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5). 또한 작물재배 형태는 식량작물은 감소하고 채소, 과실, 특용작물, 화훼류, 약용작물, 전매작물 등의 재배가 증가함. 따라서 향후 농업구조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작물재배 형태가 변화함.

<표 IV-6> 연도별 작물재배 현황

품 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	36,155.5	35,088.9	35,232.4	34,685.0	38,469.8	41,364.3
가. 식량작물	11,203.3	9,738.3	9,411.8	8,909.5	10,606.7	9,863.5
나. 채소	7,669.3	6,918.6	7,353.4	7,483.0	7,213.5	7,554.1
다. 과실	2,941.6	3,081.7	2,970.6	2,822.3	2,998.4	3,510.6
라. 특용작물	326.9	347.2	282.6	326.9	332.6	296.0
마. 약용작물	405.1	523.7	563.5	821.9	616.1	645.8
바. 화훼류	917.2	994.9	941.1	923.7	904.3	864.0
사. 버섯	484.1	301.4	484.8	451.1	476.5	444.0
※산림버섯 (송이, 표고 등)포함	781.8	582.4	724.0	720.1	736.2	713.4
아. 전매작물	766.8	776.8	867.8	958.3	1,028.9	1,078.4
자. 벼짚	601.4	639.3	680.4	711.1	700.0	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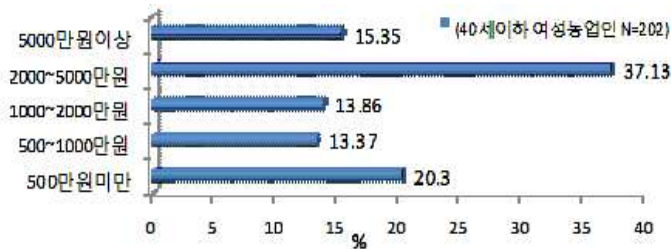
- 농가소득 구조 악화로 인해 농업외 소득에 대한 요구증대 및 농가경제 향상을 위한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가 매우 절실함. 특히 결혼이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농업의 가공 등 재취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결혼이민여성 농가의 지난 1년간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40세 이하 국내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분포에서는 2,000만원 이상이 52%를 차지하여,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그림 IV-3).

<그림 IV-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자료: 『2009년 농촌 다문화 후계인력 육성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IV-4>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자료: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3)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

-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성별통계의 발행,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의 수립, 성인지 교육의 강화 등 4개 항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여성부의 성주류화 정책의 강화로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도전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촌사회에서도 후계세대에 대한 관심 및 농업 이외의 영역을 통한 이주민들의 인식도 전환될 것임.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참여율 40%를 권고하고 있음.
- 또한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제18조)하고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1조).
- 이러한 요인은 여성농업인육성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음.

4) 농어촌 복지에 대한 정책강화

-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국민의 핵심적 관심사항임. 특히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농어촌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삶의 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교육, 의료, 고령영세농, 다문화,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사업 등에 대한 참여조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삶의 질 5개년 계획에서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연금지원 강화, 농작업 재해보장 강화, 농부중 등 직업질병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지원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시설 확대 및 지원강화,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여성, 가족(특히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노인인구에 대한 농어촌 개호 대상과 내용의 확대가 실시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보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증가하고 있음.

5) 농어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변화

- 농촌사회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2006년 OECD에서는 NRP(New Rural Paradigm)을 발표하고 향후 농촌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 농촌의 역할에 주목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OECD는 향후 농촌의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인구변화, 인구이동, 고령화, 경제변화 등을 통한 도-농연계의 기회와 위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특히 미래농촌이 녹색성장전략에 대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자연자원, 생태계 관련 서비스, 문화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원이 농촌의 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함(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자료 2006).
- 일본에서도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따른 인식의 확대를 '남녀공동참여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농업에서의 역할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북경대회에서는 농촌에서의 남녀 차별의 철폐 및 공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1.2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

- 농촌사회의 다양한 변화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농촌지역 여성들도 갈수록 고학력화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신기술이나 신지식이 더 많이 요구됨으로 인해 개발이 강조됨.
- 여성부의 성주류화 정책의 강화로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도전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촌사회에서도 후계세대에 대한 관심 및 농업 이외의 영역을 통한 이주민들에 인식도 전환될 것임.

- 농촌인구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될 것임. 따라서 빈곤의 여성노인화, 독거노인의 여성세대주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임. 이를 담당했던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서비스 지원 역할이 증대할 것임.
- 농림어업 취업자 중 여성인구의 증가. 특히 고령여성의 농업취업이 점점 증대될 것임.

1) 농어업 대외적 여건변화에 조응하는 인력육성

- 학교급식, 지역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소규모, 안심농산물의 가공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임.
- 또한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휴양지로서의 기능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정의 패러다임을 농업생산에서 농산물가공, 식품, 농촌공간 등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정책이 세분화되고 있음. 대규모 농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가로 지속 육성하되, 중소규모 농가의 지원을 위한 농업공동체회사 육성, 농업유통회사의 설립을 통한 법인화 가속화 등으로 정책이 전환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농업조직체의 변화를 3가지 형태로 하고 있음. 개별농가의 기업화, 마을의 협업법인화, 공동생산조직의 확대 등.
- 따라서 이에 적합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의 육성 및 농산물가공 전문 인력화가 중요한 과제로 됨.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방안으로 농촌관광, 농산물가공, 농촌체험,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이들 인력은 지역사회활성화 및 농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완하는 정책이기도 함.
- 농어업의 대외적 여건변화의 핵심은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임. 특히 농업의 대외경쟁력이 가속화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농업생산 인력화 만이 아니라 농식품 가공 등 농촌자원의 복합적 이용에 관한 능력의 증진이 매우 중요해짐.

2) 농업노동력의 약화 및 감소에 대응하는 농어업 후계세대 양성

- 농작물 재배전망은 쌀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고 시설작물의 경우 증가추세임. 시설작물의 증가는 농어업의 여성노동 참여를 증진하는 요인이 됨.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의 인구고령화 및 작물재배 유형에 대비한 후계 농업인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됨.
- 후계농업인력 육성은 두가지 부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데 첫째,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여성농어업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둘째, 신규 취창업 인력으로서 여성농어업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특히 신규 취창

업 인력육성은 젊은 세대의 농업취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최근 결혼이민여성을 영농인력화 하는 방안도 이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국민의 핵심적 관심사항임. 특히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문제와 더불어 인구과소화, 특히 젊은 세대의 감소 역시 중요한 복지문제임. 농가인구는 40대부터 여성 성비가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고연령일수록 여성인구 비중이 높음.
-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42.6%, 건강문제 37.2% (여성 39.9%), 소일거리 5.4% 순으로 응답함(2009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 또한 노인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는 건강검진 34%, 간병서비스 26.2%, 가사서비스 19.2%로 나타나 향후 간병과 가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농어촌 복지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농어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원의 확대와 농어촌 고령인력을 생산자원화 하는 방안 두가지 모두가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고령여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작업 취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나.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한 지역통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영역 발생

- 여성농가 인구 중 20-30대 이민여성농어업인은 '08년 10.0%에서 20년 5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농어촌 지역의 젊은 세대의 다문화 여성 비중은 급격히 증대될 전망이다.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농가규모가 영세하고 농가소득 규모도 낮아 농가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필요한 가구가 대부분임. 따라서 이들에게는 재촌 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창출이 필요함.
- 향후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26.1%가 남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22.6%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 17.7%가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지원, 16.7%가 도시근로자소득에 상응하는 농가소득보장 등으로 응답하였음.
- 장래 농가인구 및 다문화 후계세대 전망 추계 결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들은 20~30대 여성 농가인구와 유소년 농가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며, 농가인구 피라미드를 삼각형 모양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또한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새로운 인력 대안이며, 다문화 후계세대는 미래 잠재 농업인력임.
-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이민여성 본인의 문화적, 사회복지적 욕구만이 아니라 이민 2세대인 아동의 문제를 유발함.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2명 출산시 19세미만 다문화자녀는 '05년 농가인구의 2.5%에서 2020년 49%로 증가 예상.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복지욕구 영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게 됨.

<표 IV-7>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19세 미만 농가인구 에서 다문화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1명출산)	(2명출산)
2005	0.3	0.5	1.3	2.5
2010	0.9	1.8	7.5	15.0
2015	1.9	3.7	16.0	32.0
2020	3.2	6.2	24.5	49.0

- 다문화 가족아동의 문제는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이 낮은 관계로 언어능력 및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됨(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학습서비스 실시 중)

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양육과 보육지원

-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시대 새로운 화두임. 농어촌의 경우 저출산 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단절로 인한 공동화가 큰 문제임.
-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 국공립보육시설은 인증을 받기가 어려움.

- 또한 증가하는 아동의 대다수가 다문화가족 아동으로 기존의 보육서비스와 다른 지원이 필요함. 언어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 역시 특수한 보육/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함.
-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 육아서비스 기관의 미비는 젊은 세대들의 농어촌 정주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됨.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육아/교육 지원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4)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축을 위한 남녀 파트너십 강화

-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추구는 국정과제의 중요 영역중 하나임. 최근 양성평등 역시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현실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체감정도는 낮음.
- 최근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관련 법을 개정하고 성평등 추진관련 기구를 재편하였음.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분석센터를 설치함. 또한 국가재정법의 성인지예산 수립 조항의 집행에 따른 성인지예산이 수립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 생산단위가 가족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경영의 주체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부부나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한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문제가 중요함. 특히 가족 내의 성평등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중요함.

- 2010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 결과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 52.6%, 여성들의 인식미비 31.6%로 응답해 남녀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표 IV-8>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	133	52.6
가족의 반대	27	10.7
여성들의 인식미비	80	31.6
잘 모르겠음	13	5.1
합 계	253	100.0

자료: 2010 3차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5) 농어촌의 인구구성 다양화에 기반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성참여 방안 마련

- 농촌인구의 변화가운데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귀촌인구의 증가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여성 인구의 증가임.
- 귀촌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수산물부는 특히 향후 5~15년후 연금 1세대들의 전원생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농촌 젊은 세대의 50% 이상이 결혼이민여성 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 농촌지역의 고령화, 귀촌인구 증가, 다문화 가족 증가 등의 인구 특성은 지역사회 통합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육구, 농산업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 및 개발 역량을 요구하게 됨.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관광관련 인력(음식, 서비스, 체험, 관광해설, 특산물 가공 등)이 증대될 것임. 따라서 이에 적합한 농어촌 취·창업을 위한 새로운 인력육성이 요구됨.

2.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정책기조

■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정책기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은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적 수요를 실현할 정책수단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음.
-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이외에 농어업,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성평등을 증진을 통한 양성균형사회 실현임
- 한국 농어업의 특성은 가족농 중심의 생산체제이므로 농가 규모의 확대만으로 농어업,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농어업의 효율성 및 농가경영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표 IV-9>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정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30%미만	42	16.5
31~50%	38	15.0
51~80%	46	18.1
81%이상	128	50.4
합 계	254	100.0

자료: 2010 3차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농촌사회 변화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인력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농어촌 사회의 낮은 성평등 의식임. 따라서 남녀파트너십의 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 결과 농어촌 사회의 성평등 지수는 가족 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음. 특히 남녀 파트너십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양성의 참여는 지역정책, 마을사업, 가족내 가사노동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하로 응답함.

<표 IV-10> 성평등 지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소득분배	2.51	1.16
정치참여	2.44	1.09
지역정책 결정 참여	2.44	1.12
마을사업 결정참여	2.52	1.10
가족 내 의사결정	3.49	1.06
농지 등 소유	2.35	1.26
농업관련 조직에 참여	2.89	1.15
농사일 분담	3.10	1.12
농작업 결정과정	2.97	1.16
농업관련 정보향유	2.97	1.16
가사노동 공동분담	2.18	1.16
육아 공동분담	2.25	1.16

자료: 2010 3차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가 경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장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인적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데 있음.
- 또한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수혜 비중을 향상시켜 농어촌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농-도간에 격차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간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생기있는 농어촌사회 구축에 있음.
-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마을내 발언권이나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은 변화하고 있으나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응답함.

<표 IV-11>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마을 내에서 발언권	3.30	1.07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3.40	1.04
지역사회 참여기회	3.49	.99
영농관련 조직참여	3.23	1.03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2.71	.93
각종 농업정책 수혜	2.57	.92
문화서비스 향유	2.73	1.09

자료: 2010 3차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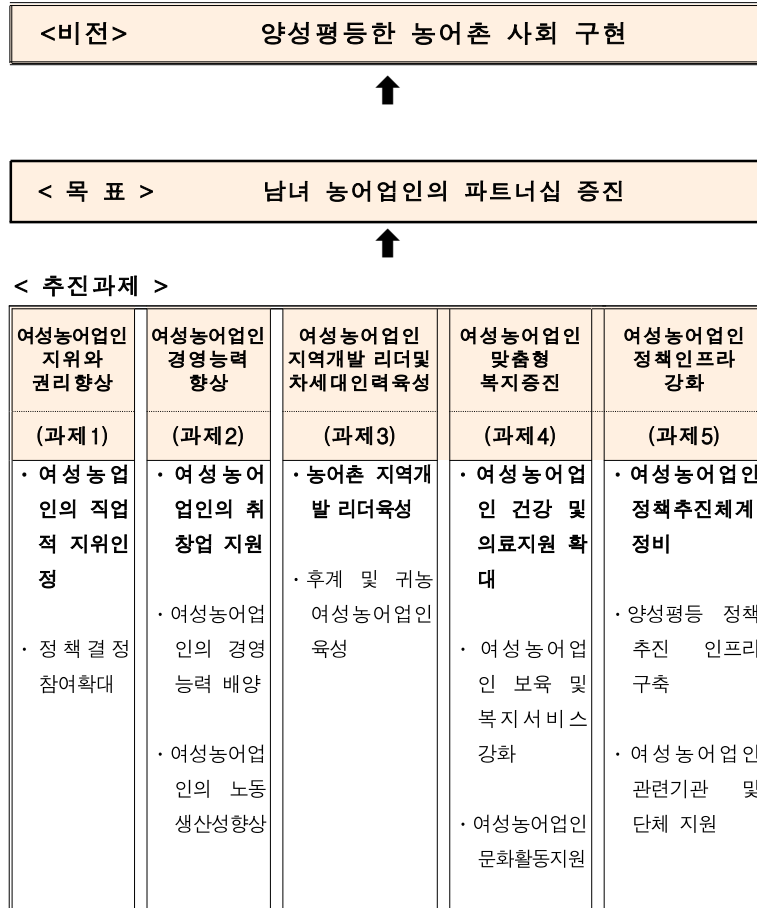
3. 3차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

<표 IV-12> 3차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

여건 및 전망	정책과제	정책방향
1. 인구통계학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여성화 ●결혼미만여성증가 ●농촌여성인구의 다양화 ●농가인구중 여성농업인 비중 증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 농식품 가공관련 인력육성 ●농가경영에서 여성농업인 전문영역 및 경영능력 관련 역량강화 ●여성CEO 육성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역량강화
2. 산업 경제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경영 악화로 인한 농외소득 활동 증대 ●농가양극화 확대 ●작물재배구조변화, 여성농업인노동참여율증가 ●농업후계인력 결혼이주여성 영농지원화 ●농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참여영역 확대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후계세대 육성(여성 귀농자 적극지원) ●귀촌귀농 인력 조직화 ●결혼미만여성 영농인력화 ●신규창업농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조직 참여 확대
3. 정책변화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강화 ●여성참여 확대 증진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 ●농업정책 영역확대 ●분권화로 지방자치체 역할 중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조직에 참여증진 ●농정위원 여성비율증진 ●여성농어업인 단체육성 ●지역개발에 여성참여 비율 확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4 복지수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증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요구 강화 ●일/가족양립, 문화권, 다문화, 고령인구복지 등 ●가족기능약화, 돌봄노동 사회화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여성 생산지원화 ●여성노인인구의 지역사회복지인력화 ●다문화가족 이동지원 ●일/지정 양립지원확대 ●여성농업인 문화서비스 확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및 의식 확산
5. 농어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성장 동력으로 농어촌에 관한 관심증대 ●국제적으로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확보 필요성 강조 ●식품 등 여성의 전통지식자원 중요성 인식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 정책인력 확충 ●성별영향평가 제도 강화 ●성별통계생산 ●정책성과 환류시스템 구축 ●양성평등 의식 확산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림 IV-5> 3차 5개년 계획 추진시책과 핵심과제

3차 5개년 계획 추진시책과 핵심과제



4. 3차 5개년 계획의 정책과제

4.1 정책목표

-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을 위해 남녀 농어업인의 파트너십 증진을 정책목표로 함.

4.2 기본 정책과제

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인정과 권리 확보

1.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직업적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 조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여성농어업인이 농업생산에서 담당하는 역할만큼 직업적 보상 및 노동기여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여성농어업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정책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

나.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3. 여성농어업인이 농가경제를 향상하고 스스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령별·거주형태별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개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4.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5. 농어업 노동이 중노동에서 경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어업 기계나 농작업 도구의 개선 및 농작업 환경을 향상.

다.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6. 여성농어업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개발에 필요한 역량 강화.
7.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과 농어촌 사회로 진입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및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농어업·농어촌의 성장동력을 육성.

라.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8. 과중한 노동부담과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 질병치료 및 예방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9. 일/가정 양립은 여성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초적 목표이며 기본전제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과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10.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임.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별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들에 맞는 문화서비스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을 지원.

마.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1. 정책추진 인프라는 제도와 인력과 예산이 갖춰져야 함.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할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예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인프라를 강화.
12. 성평등한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한 균형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 남녀 농어업인이 농어촌사회와 농어업의 발전에 동시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농어촌·농어업의 실현을 위한 각종 통계 및 정책평가, 의식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
13.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증진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농어업인 단체 스스로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성의 증진 및 여성농어업인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실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

V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2.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 증진
 5.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과제1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권리향상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정책 방향

- 여성농어업인의 농업인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영의 파트너로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여성농어업인의 가족경영 내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가경영협약을 확대 보급하며 농지의 부부공동소유제, 부부공동농장 육성을 촉진.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도화.
-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위원회의 여성위원 40%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협의체를 육성하며 각종 마을(지역)단위 개발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또한 작목반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주도형 법인 및 공동체회사를 육성하고 각종 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의 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
-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여성연금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연금가입율을 확대.

1-1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

1-1-1.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인정

□ 현황

- 농업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중은 2009년 51.5%로 농업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가구 농업노동 중 43.6%는 여성농어업인이 1/2이상을 담당
 - 24.2%는 70%이상 담당
- 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이후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인정 등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무보수 가족종사자로 간주되고 있음
 - 핵심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사고 및 피해 보상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실시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및 영농종사가족원의 농업인 여부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
-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농가에서는 여성 스스로 혹은 배우자가 여성농어업인을 공동경영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작목의 경우 남성농업인의 94.7%가 배우자를 공동경영인으로 인정(박민선외, 2003)
 - 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여성응답자의 82.1%가 공동경영인으로 인정

<표 V-1>여성농어업인에게 합당한 지위에 대한 평가

구 분	빈 도	백분율(%)
경영주	18	6.9
공동경영주	220	84.6
농업보조자	14	5.4
가족종사자	7	2.7
기타	1	0.4
합 계	260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여성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불리하므로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기피함
 - '08년 전 가족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어업인 : 34%,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여성농어업인 51.8%, 본인 명의 가입+남편과 동시가입 16.9%, 가족원(본인포함) 중 개인연금 가입자 있는 여성농어업인 9.9%.
 -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만으로는 생계보장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인정 조건에 대한 인지도는 23.5%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V-2>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정 조건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알고 있다	60	23.5
모른다	195	76.5
합 계	255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추진방향

- 농가경영체 등록시 농업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 여성농어업인용 팸플렛 및 포스터 제작을 통해 등록 유도
 - 각종 교육 시 복수의 농업인 등록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여성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을 통한 홍보 및 참여 독려 : 가정 '여성농어업인 등록 특별 추진의 달' 운영
- 여성 후계농, 전업농 선발시 가점 부여
-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 후 취득농지에 대한 공동권리 행사, 정책자금의 신청 등에 공동권리 행사 등을 보장하도록 제도 보완
-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안 수립
 - (1안) 여성농어업인이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수익에서 납입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 사망시에도 생존자와 동일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2안) 여성농어업인이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경우 부부가 각기 연금에 가입하고 정부에서는 부부 각각에 연금보험료 지원
 - 농가별로 1안과 2안 가운데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유도
 - 장기적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과소함을 홍보하여 여성이 독자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홍보(2안)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인 등록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단체를 통한 홍보&특별추진의 달 운영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 및 노후보장 실태 조사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연금가입 확대방안 공청회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여성농어업인 독자 연금가입 추진	농식품부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1-1-2. '농가경영협약'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 현황

- 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에 의해 농가경영협약 체결한 농가는 매년 증가함
 - 협약체결 농가수 (누계) ('4년) 22호 → ('08년) 282호 →('09년) 322호
- 현재 농가경영협약은 여성농어업인단체 주관으로 이행되고 있어 여성의 권익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농가경영협약은 여성 및 후계자 등이 책임의식과 계획성을 가지고 농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농가의 특징인 가정생활과 농업경영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짐
 - 일본의 경우 가족간의 합의에 의한 경영을 통해 가족원의 책임 있는 경영참여와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소득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함.
 - 인정농업인제도, 여성농어업인 연금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중

□ 추진방향

- 농가경영협약을 농가경영체 등록과 연계하여 추진
 - 농가경영협약 체결농가의 경우 부부공동경영농가로 인정
 - 농업경영체 등록시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농가경영협약과 농업정책 대상자 선발의 연계방안 검토
 - 창업농, 전업농 등 정책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 농가경영협약체결 농가에 대해 부부창업농, 부부전업농 제도와 연계 추진
- 정책자금 수혜자 중 배우자 혹은 후계자가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전국, 시도 단위 농가경영협약 체결농가 협의회 구성
 - 정기모임을 통해 사례발표 및 협약 재구성

-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배우자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한 연금특례
 - 배우자의 연금 기여분을 부인과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 사망 후 동일 금액의 연금 지급
 - 여성농어업인이 독자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100농가를 목표로 3차 기간 중 신규로 500농가 협약체결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가경영체등록제도와 연계 제도마련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정책자금대상자선발과 연계 방안 모색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시·도 및 전국단위 협의체구성	농식품부					
연금가입과의 연계방안제도 마련	복지부					

1-1-3. 여성농어업인의 피해 구제 및 법률 상담

□ 현황

- 농협에서 농어업인의 권리의식 함양과 법률적 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중.
 - 172개 시군에서 법률상담 전담창구 개설
 -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을 통해 상담사례에 대한 홍보
 -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등의 활동

- 이동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활동이 주로 남성농어업인 위주로 진행됨
 - 여성상담 실적 및 피해구제 실적에 대한 자료나 여성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에 대한 자료도 없음

□ 추진방향

- 중앙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전담 상담 인력 육성 및 확보
 - 여성주의적 관점과 농업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 상담요원 확보
 - 여성농어업인 전담 법률 자문단 구성 : 농림부 명의의 위촉장 부여
- 현행 이동상담실 운영 시군별 3명의 변호사 가운데 1명을 여성 변호사로 선임
 - 가족법 및 재산권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담이 가능한 여성변호사를 선임
- 여성피해 사례 및 피해구제 사례 수집 발간
 - 기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여성 특화적인 사례를 수집 발간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홈페이지에 게재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단위 여성농어업인 전담 법률자문단 구성	농식품부 농협					
농협의 이동자문단 여성변호사 선임확대	농협					
여성피해 구제 사례집 발간	농식품부 농협					

1-2.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1-2-1.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 현황

- 중앙 및 지자체의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2차 기간 중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2차 계획 기간 중 목표치인 30%에 이르지 못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 : '09년 20.1%로 '08년 27.3%에서 축소됨.
 - 지자체소관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 9개도 평균 27%

-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에서는 '07년까지 40%를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3차 육성 기간 중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40%로 확대
 - 신설위원회 및 임기 만료 위원 교체시 여성 중심으로 선임
-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관심을 반영하도록 훈련
- 지자체의 위원회의 여성위원 가운데 여성농어업인의 비율 확대
 - 3차 육성 기간 중 : 여성위원 40%달성 여성위원 중 여성농어업인 비율 30%달성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중앙 및 지자체별 농정위원회 여성비율의 목표치를 매년 상향 조정 2015년 40%까지 확대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정위원회 여성위원 40% 확보	농식품부	30%	35%	40%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개발	농식품부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실시	농식품부					
지자체 여성위원 및 여성농어업인 비율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1-2-2.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 강화

□ 현황

- 시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2차 계획기간 중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09년 광역단체 9개, 기초자치단체 26개에서 조례제정

□ 추진방향

- 시도단위의 연도별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과 연1회 이상 여성농어업인정책 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 확대 추진
 - 3차 계획기간 중 50개 시군으로 확대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 계획기간 전 시도(市道) 및 50개 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세칙마련	지자체					
시군단위 여성농어업인육성 조례제정	지자체					

1-2-3. 마을운영 및 개발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 현황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등의 사업과 향후 공동체 회사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농촌마을종합개발 : 265개소
 - 녹색농촌체험마을 74개소
 - 공동체회사 : 2011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수사업체 1000개 육성
- 마을 단위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인력조력자로서의 소극적 활동에 머무르고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추진방향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마을개발 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녹색농촌체험마을, 공동체 회사에 여성참여율을 40% 수준 유지
 - 남녀공동대표제를 유도(사무장 여성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심사 시 여성참여비율을 20%이상 의무화
- 마을 단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이익분배에서 남녀간 노동격차 해소
- 여성주도의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
 -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우수 공동체회사에 우선 선발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마을단위 개발사업 여성참여율 40% 확보	농식품부 농촌공사					
공동체회사 여성참여율 40%확보	농식품부					
마을단위 개발사업 선발평가 여성평가자 확대	농식품부 농촌공사					

1-2-4.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현황

- 2차 육성 계획 기간 중 농·수협 여성조합원 및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수협의 경우 여성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임
 - 조합원 : 농협 29.7%, 수협 27.4%

- 대의원 : 농협 15%, 수협 3.7%
- 임원 : 농협 4%, 수협 0.6%

- 2차 육성계획 기간 중 농협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도 증가함
- '08년 565개 농협, '09년 572개 농협

□ 추진방향

- 여성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는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
 - 농협 : 여성조합원 30%, 여성대의원 30%, 여성임원 10% 달성
 - 수협 : 여성조합원 30%, 여성대의원 20%, 여성임원 10% 달성
 - ※ 축협도 농협과 같은 비율의 실적 달성
- 신규 대의원 및 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실시
 - 대의원 : 도단위 교육 (협동조합의 이해,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 임 원 : 전국단위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협동조합임원의 역할과 과제 등)
 - 여성 대의원 및 임원용 교육과정 개발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수축협 여성조합원, 대의원, 이사 할당 목표제	농수축협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리더십 교육 과정 개발	농수축협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리더십 교육 실시	농수축협					

과제2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정책 방향

- 농어촌 지역 농외소득활동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농촌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 경영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 진행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전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도우미 제도 확대 및 수급체계의 효율화, 마을공동급식소 사업 진행

2-1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 지원

2-1-1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 현황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명목)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됨(농가경제통계 각년도).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6%(명목소득)씩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4%씩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

- 농림수산물부는 최근 그간 농정평가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농업외 소득의 증대방안으로 수출, 가공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업 창업지원에 정책적 관심을 제고함(2010 농업농촌대책).

- 농어업 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들이 현재 농의 소득 활동 현황은 매우 낮음. 여성농어업인의 겸업활동 비중은 2003년 8.7%에서 2008년 13.1%로 증가하긴 했지만 낮은편임.

☞ 일본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9,050건을 기록하였음. 개인 창업보다는 공동창업이 많아 2005년 공동창업은 전체 여성 창업의 63%를 차지함.

-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39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향후 농외소득활동 종사 및 창업 의향(43.2%)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남(40대 40.8%, 50대 20.4%)

☞ 응답자의 70% 이상이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 가공이 소득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어업인 관련 창업활동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사업인 '창의 손맛'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06년 시작된 농외소득 지원사업이 2009년부터 창의 손맛 사

업으로 진행되다가 2010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일 반으로 변경하여 오히려 여성창업자 지원은 축소됨.

- 농식품 관련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확보임. 따라서 이들 창업자 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이나 마케팅 증진은 물론 여성농어업인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및 우선구매 지원을 실시가 필요함(현재 여성기업의 경우 조달청 입찰시 5점의 가점 부여).

□ 추진방향

- 여성 창업사업의 한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으로 성장이 어려움. 따라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인큐베이터 과정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공동체 회사 육성(년차별 비율할당 30%목표)

- 여성창업관련 사업의 영역을 '창의 손맛', '사회적 기업', '공동체 회사' 등으로 다변화하고 영역도 음식가공에서 농어촌 사회적일 자리, 다문화 관련 특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함.

-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로 인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및 지역먹거리 체계의 순환형체계를 확립에 관심 증대. 여성농어업인들의 생산품을 학교급식 납품, 지역 푸드지원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일정량을 의무구입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공동체 회사 육성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회사 선정기준에 여성기업 가점 반영	농식품부					
여성기업 생산품목 우 선구매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기업지 원단 운영	농식품부					

【참고자료】독일의 취창업 관련 지원

- 독일은 이미 농촌지역의 공업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있고 하부 시설의 발달로 접근이 쉽기 때문에 겸업농에 대한 지원도 취업 기회보다는 직업 훈련이 중시되고 있고, 농민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겸업 형태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를 이룸.
- 겸업의 수용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쟁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미래의 겸업종사자들에게도 강도 높은 직업훈련을 통해 고도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데 필수적임. 독일의 성인 직업훈련은 전통적인 장인교육제도(meister)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농민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1단계는 개괄교육단계로 교육대상은 부모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을 즈음의 젊은 영농인으로 농한기에 2주정도 실시되며, 2단계는 기본교육단계로 농업과 관련된 기본교육 및 기술과 경영에

대한 조직적인 능력 양성에 관함. 3단계는 특별교육단계로 기본교육 이수자 및 2종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 4단계는 재교육 및 부가교육단계로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현장속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특수 전문과정으로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 그리고 5단계는 그룹교육 단계로 역시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이 단계는 그룹토의를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임.

- 농민이 농장시설을 이용하여 민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침실 15개까지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요액의 20%를 저리용자 해주며 캠핑 장소의 전기·수도 등을 설치해줌.
- 농산물 직판사업 지원
 - 농민들이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의 광장 등에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운반용 자동차의 구입 등에 대해 저리 용자를 제공.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 독일은 전통적으로 농민과 농민단체에 의한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육가공, 포도주 등 소규모 농산물 가공이 발달함.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비농민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농민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 5~6%의 저리용자를 지원.

2-1-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여성인력 육성

□ 현황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젊은 여성농업인은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유형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여성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 보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인력 육성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동 기회의 제공임과 동시에 농촌공동화 대응전략임.
- 젊은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변화하는 농촌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젊은 여성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해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대, 30대 초 젊은 여성농업인은 취업, 시간제 근무 등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고, 40~50세 장년층 여성농업인은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들어 귀촌, 귀농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귀농 귀촌은 세대 특징은 미혼의 젊은 여성, 자녀의 나이가 어린 젊은 여성,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진수기 여성들로 3층으로 구분됨. 또한 농어촌을 선택하게 된 동기 역시 다양함. 따라서 이들

여성들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인력육성 교육과정 및 일자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함.

-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각종 마을개발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할 실무인력, 가공이나 농산물 유통의 증가로 인한 마케팅, 유통, 전자상거래 관리 등을 전담할 인터넷 관련 인력, 농어촌 고령인구의 증대로 인한 사회서비스 인력 등으로 구분됨.
- 최근 실시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70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음(대부분 농촌지역의 경우 사업참여 인원의 80% 정도가 여성임). 또한 지역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단 역시 고령여성 비중이 매우 높음.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소득기여도에 대해서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응답도 36.2%로 높음.

<표 V-3> 고령여성농어업인의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소득기여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큰 기여를 할 것임	96	36.2
약간 기여할 것임	128	48.3
별로 기여하지 못 할 것임	29	10.9
잘 모르겠음	12	4.5
합 계	265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마을 노인돌봄도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노인복지사, 보육교사, 공부방 교사, 다문화강사 등과 같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함.
- 젊은 여성농어업인은 보육, 집안 살림 등의 가사부담에 의해 정상적인 농외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진입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사업을 추진함.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 발굴, 도입
 - 마을간사, 마을자원조사단, 평생학습지도사 등 농어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 각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산학연 협동과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의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전통자원을 개발하고 전수하는데 고령여성 자원을 적극 활용함(예: 개실마을-한과사업단). 고령자들이 보유한 전통지식을 활용한 마을단위의 농산물가공 관련 법인을 창설하여 고령여성농어업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함.

- 여성농어업인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아동지원 사업 등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특화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령여성 전통지식 자원화 모델연구	농식품부					
고령친화 마을기업 육성	여성부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 농협 여성가족부					
노-노 케어 사업실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여성 고령인력과 지역자원연계

市町村	桶川(おけがわ)市
추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江戸시대에는 중산도의 역으로 번영하고, 또 연지꽃 산지로서 번영한 역사를 보유한 지역으로 옛날의 풍경 및 정원수에 둘러싸인 농가환경을 보전하면서 明治후기에 건축된 전통적 건축물인 “旧甘樂邸”의 고재를 활용한 “연지꽃 고향관”을 정비, 연지꽃 가공품 및 꽃·묘목 등의 판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산업을 주로 한 지역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음.
정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지꽃고향관은 明治후기의 “田자형”의 칸막이가 되고 있는 민가를 재생했기 때문에 일단의 방문객이 보고 즐기며, 학습할 수 있으며, 안채, 좌우로 긴 집의 문, 관리공방, 창고 등의 시설과 체험강좌 실시, 지역산 원료를 이용한 식사, 시의 행사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교류장소로 이벤트 등에 활용, 산지와 안전성에 구애된 식재 제공에 대하여 평가고 높고, 지역 유기농가에 활기가 생겨나고, 뜬 관광코스로 도입되는 등 연간 이용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있음. 또, 지역 상점가로 안테나숍 개설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음.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가”, “고향”이라는 전체 사업의 콘셉트는 고가를 활용한 시설면에서 활용됨과 함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 콘셉트에 따른 서비스가 이루어져 전체 60세 이상의 인재를 무리하지 않게 순번제로 활용하는 등 현재로서는 구전효과에 의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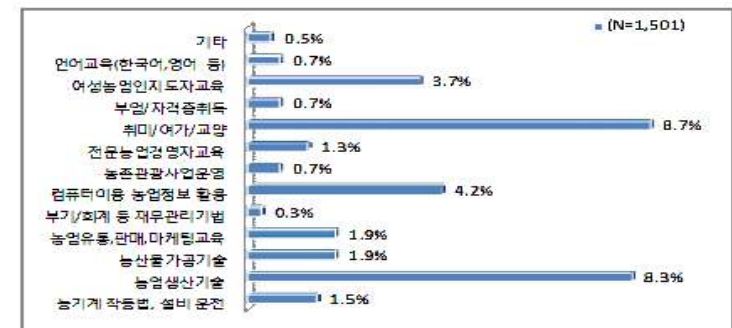
2-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2-2-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 현황

- 과거의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은 생활, 의식, 식생활 교육이 중심이었음. 그러나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도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어떤 종류의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농어업인은 전체의 21.3%임. 또한 경영관련 교육경험은 낮게 나타남. ‘부기/회계와 재무관리’(0.3%), ‘부업 및 자격증 취득’(0.7%), ‘농촌관광사업 운영’(0.3%)
- 반면, 영농활동이 활발한 40, 50대 중장년 여성농어업인은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유통, 마케팅 기술, 컴퓨터 교육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증대

<그림 V-1> 여성농어업인의 교육경험, 2008년



자료: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 현재 농업연수부, 농촌진흥청, 시도와 시군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어업인단체, 농업계 실업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여성농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부족하여 교육내용의 중복되어 있음. 여성농어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젊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사업 경영참여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 경영능력 배양도 필요함.
 -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39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43.2%가 향후 농외소득활동 종사 및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음.
 -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관련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 여성농어업인이 교육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사일과 집안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39세 이하 젊은 연령층은 ‘아이들과 집안일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렵다’를 지적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평소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제 1순위 이유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39.4%),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22.7%),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1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CEO과정’ 운영.

- ‘여성농어업인 CEO과정’은 창업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교육이 될 것임.
-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필요
 - 농사일로 인한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시기를 농한기로 조정
 - 교통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교육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함.
 - 교육장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및 도우미 지원
 - 시간부족, 교통편 불편 등의 교육 참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집체식 교육과 여성농어업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소규모 교육방법 병행
 - 지역의 선도 여성농어업인이 신규 또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 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 지원⁵⁾ 제도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CEO 과정 운영	농식품부					
교육도우미 실시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실시	농식품부 농협					

5) 결혼이민여성 농어업인을 위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2-2 평생학습 체계 마련

□ 현황

- 평생학습은 21세기 자기개발의 중요한 영역임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평생학습 과정은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함. 평생학습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으나 최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평생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취미, 소양, 영농기술, 정보화, 요리 등 음식관련 연구 및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짐.
- 여성농어업인 대상 교육을 표준화 및 단계화하여 생애주기 및 활동,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과 전담교육기관의 차별화가 필요함
 - 모든 교육과정을 초, 중, 고등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수준과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화를 위해 단계별 표준화된 교재개발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학점은행 도입 등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학습 결과가 학위나 자격 취득 및 정책자금 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함.
 - 현재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단편적인 교육으로 운영되어 교육결과의 활용 및 정책연계가 곤란한 실정임.

□ 추진방향

- 학점은행 도입으로 평생학습 체제 마련
-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세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표준화 매뉴얼 개발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학점은행제도 운영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여성농어업인 강사은행 운영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평생학습 센터 운영	농식품부 농진청					

2-3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현황

- 여성농어업인은 영농기술교육 참여 기회가 적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 농사일과 더불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으로 교육 시간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영농기술교육이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남편이 주로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농기계 또한 대부분 남성위주로 설계·제작되어 여성농어업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여성농어업인은 작동 및 조작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농기계 이용률이 낮은 편임. 이러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은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짐.
- 따라서 여성농어업인도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와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여성전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여성농어업인의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농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여성전용 농기계가 개발되어도 가격이 비싸 이용률이 높지 않음.
 - 통계를 보면 농자재 가격이 생활필수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농기계 역시 일반 소비재에 비해 고가임.
 - 또한 대부분의 농기계 연간 사용일수가 짧아 개별적으로 농가에 구비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농산물 생산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특히 여성용 농기계 구입의 경우, 다른 농기계 구입에 우선순위가 밀려 구입비율이 매우 낮음. 이렇듯 낮은 이용률로 여성전용 농기계 개발도 진척되지 않고 있음.
- 모든 활동 유형에서 여성농어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로 나타났음. 또한 젊은 여성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과중한 노동부담 때문이라고 조사된 바 있음(강혜정·마상진, 2007).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함.

□ 추진방향

- 여성전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해서 여성전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여성전용 농기계를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성전용 농기계 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구입지도와 A/S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노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는 사고발생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사업’, 고령 취약 농가를 위한 ‘가사인력지원사업’, 출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출산농가도우미사업’이 있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중장년 여성농어업인에게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도우미 제도임. 따라서 현재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가의 도우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하여 도우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임.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농의 유희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 또는 지역내 활동 가능한 여성농어업인을 파악하여 농가도우미 인력을 양성하고 알선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 여성농어업인은 영농경험과 이해도가 높아, 도우미로서 경쟁력이 높음. 다양한 수요, 전문성 강화, 표준화 프로그램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단체 주관으로 인력지원단 운영 및 인력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함. 또한 농촌여성 평균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도우미 이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노동 특히 농번기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을공동급식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이 활용가능한 농기계 임대 사업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도우미제도 확대, 수급체계 효율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동급식소 지원확대	농식품부 지방자치체					

과제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 육성

정책 방향

-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로 육성
- 차세대 여성농어업인력으로 후계여성농어업인과 여성귀농업인 육성
- 결혼이민여성을 농어업인력으로 적극 활용

3-1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육성

□ 현황

- 농어가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과거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민주적 조정과 관리가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이 되면서 마을리더로서 여성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음.
- 농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어촌 사회에 양성평등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도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2006~2010)에 농촌마을의 여성이장 30%이상 확대 계획을 명시한 바 있음.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 '마을

개발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남녀공동대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의 사업시행지침에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농촌에서 남성리더에 비해 여성리더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지역리더 육성이 중요한 추진과제가 될 수 있음.
- 강혜정·마상진(2007)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가사일, 농사일과 지역사회 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로 나타났음.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도 큰 제약요인이었음. 특히, 마을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쉽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 추진방향

- 사회생활과 조직문화 경험이 부족한 여성농어업인은 토론, 회의 기법 등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대상 회의, 토론 능력 함양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정보수집 및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이장 마을에 부업장려금 등의 정책 지원 우대는 여성리더 확대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또한 우수 여성 이장 마을 포상제도 등을 마련하여 여성리더 육성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확대를 도모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리더십교육확대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여성농어업인 정보활용교육	농식품부 지방자치체					
여성이장마을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3-2 후계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 육성

3-2-1 후계 여성농어업인 육성

□ 현황

- 신규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여성 가산점 제도가 1992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⁶⁾. 총점 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20%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여성 우대조치임. 그러나 이러한 여성우대제도가 있어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음. 1999년 20.3%까지 선발되었던 후계여성농어업인 비율은 이후 하락 추세에 있음.

6)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는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 딸에게 영농 승계를 기피하는 상속문화로 여성이 영농에 종사하고 싶어도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음.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 저조현상으로 후계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이 후계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는데 단순히 가산점 제도만으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인력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 젊은 여성농어가인구의 감소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후계여성농어업인의 증가는 농촌의 재생산기능의 회복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임.

<표 V-4> 연도별 후계여성농어업인 선정현황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후계농 업인(천명)	9.0	9.0	8.3	9.7	8.2	8.5	7.8	4.8	4.7	3.3	2.5	1.9	1.1	1.1
후계여성 농업인(명)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147	158
여성비율 (%)	2.4	3.0	5.3	6.1	8.6	9.7	12.9	20.3	18.4	14.1	13.4	13.8	13.1	15.0

자료: 농림부, 2006.

□ 추진방향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함. 특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30~40대에 해당되는 여성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체계가 필요함.

<표 V-5> 단계별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 로드맵

- 진입단계(0~3년):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업인 자긍심 고취
 - 농업의 이해 및 기초 영농교육
- 정착단계(3~5년): 여성농어업인으로 연착륙 할 수 있는 지원
 - 현장 실습 중심의 영농교육 병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도우미 및 후견인 제도 강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영농환경조성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 성장단계(5~10년): 전문농어업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 지원, 농어업경영교육 실시
 - 농관련 사업 창업 지원

- 농어업의 외연적 확대에 의해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한국농업대학 여학생 설문조사에서 농어촌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22%)라는 응답이 많았고,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 지원(20.8%)이 높았음(강혜정·마상진, 2007).

- 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가칭)여성농어업인 인력은행」을 설립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 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역의 농어업인력자원의 원활한 수급 조절 및 기존 농어업인력을 신규농어업 인력에게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 후계여성농어업인 인력은행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제정 및 실무작업을 위한 T/F 구성 필요
- 후계여성농어업인 교육 및 정착을 위해 중견 여성농어업인 인적 자원을 활용함.
- 중견 여성농어업인이 신규 후계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역할모델이자 멘토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리더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 엘리트 후계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여 후계여성농어업인의 성공사례 및 표준모델을 제시함.
- 일정교육을 이수한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전문강사화
- 여성농어업인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제시 및 홍보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후계 여성농어업인 육성	농식품부					
귀농 여성농어업인 멘토육성	농식품부					
후계여성농어업인 성공사례 대회개시	농식품부 한여농					

3-2-2 귀농 여성농어업 멘토 육성

□ 현황

- 최근 들어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00가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경북, 전북, 경남지역으로의 귀농 인구 비율이 높음.
- 30, 40대의 귀농자 비율이 높으며, 대체로 부부가 함께 귀농하므로 여성귀농인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 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농업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여성귀농인은 중요한 농업인력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성귀농인의 원활한 정착과 농업인력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여성귀농자 멘토링 사업
 - 기존의 여성농어업인과 신규 여성귀농자 간의 협력 체계 지원
 - 농사기술, 농지구입, 작물선택, 판로개척 등을 신규 귀농자에게 지원
 - 멘토(귀농자 도우미) 발굴 및 지 : 읍면별 1~3명 선발

- 여성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시·군별 여성귀농·귀촌자 모임을 만들어 상호 정보교환 및 애로 사항 해결
 - 기존주민과 여성귀농·귀촌자간 만남의 장 마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귀농자 멘토링사업	농식품부					
여성귀농, 귀촌자 만남의 장 마련	농식품부 지자체					

3-2-3 결혼이민여성의 농어업 인력화

현황

- 농림어업인중 외국인여성과의 혼인비율은 2003년 21.1%에서 2005년 35.9%, 2008년 38.3%로 증가하는 추세임.
 - 농어촌지역의 외국인여성과의 혼인비율('08) : 13.8%(전체 8.6, 도시지역 7.6). 여성농가인구 중 20-30대 이민여성농어업인 : ('08) 10.0% ('20) 53.2%
- 결혼이민여성 농어업인들은 농어촌사회 구성원으로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농어촌 결혼이민자의 69%가 농업활동, 교육 및 지역사회활동에 73%, 취업활동에 43%가 참여한 경험 있음.
 - * 사회활동 참여율 : 일본(85.1%), 필리핀(80.5%), 중국(70.3%), 베트남(65.9%), 캄보디아(63.0%)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에 부응하여 결혼이민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단계적인 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어촌 정착의지를 높임.
 - * 현재 농업활동참여 결혼이민여성 69%, 지속적 영농종사 의사 82% 농촌의 다문화가족(농업인)의 생활수준은 같은 지역 다른 국내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
-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이주여성농어업인과 자녀를 차세대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결혼이민자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보통수준(3.0) 이상
- 이러한 현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8년부터 농촌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및 결혼이민여성농어업인1:1 맞춤형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결혼이민여성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컨설팅, 문화비즈니스, 어린이집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유관부처와 중복성이 있어서 농식품부만의 특화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다문화 테마 창업지원 컨설팅, 문화 비즈니스 등 교육 지원, 원어민 강사, 어린이집 보조 교사, 농산업 인턴, 찾아가는 도우미, 창업 등 다문화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 '09년 여성농업인센터 어학강사 및 보조교사 활용(26개소 63명, 1.7억원)

일본 농촌의 이문화(異文化) 관련 사례

◆ 이문화(異文化) 수용 행사

○ 배경

- 일본의 농가후계자들의 결혼 난 이후 저출산 대책과 농촌사회 유지 차원에서 다양한 이문화 행사 실시

○ 예산 : 후생성이 농산어촌에 저출산대책 임시특례 교부금으로

지원한 2,000억 엔의 상당 부분이 이문화 행사에 활용('99)

○ 내용

- 농산어촌 미혼자들의 결혼 및 교류추진, 체험교실
- 한국출신 결혼이민여성들에 의한 김치교실
-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에 의한 영어회화 교실
- 스리랑카 민속무용단 초청공연 '풀뿌리' 국제교류행사로 스리랑카 출신여성들 위로 등

※ 야마가타현 도자와무라(戸澤村)의 고려관과 김치랜드

○ 설립 목적: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한 도자와무라 김치와 냉면 등 한국식품의 생산·판매로 지역활력화 모색

○ 예산 : 13억 엔 (국비, 지방비)

○ 이문화행사 운영 프로그램

- 농악제, 식문화 국제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 한국식당, 한국식품관 운영

○ 판매액 : 연간 600~700만 엔

자료: 2009 농촌다문화가족 지원방안(농식품부)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여성인력을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육성,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지역아동 영어보조교사, 농어촌사회 복지서비스 인력 등으로 지원하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제공함.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농가 규모가 영세하여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특히 생산수단(농지, 농기계 등)을 규모화 할 수 있는 경지가 많지 않아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농업관련기술을 전수하여(수박 접붙이기, 수정기술 등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술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가 취업을 지원함.
- 다문화가족 여성인의 창업은 다문화 음식, 문화체험 등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육성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일대일 영농기술교육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여성창업 인력육성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과제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정책 방향

-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노인인구의 여성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해야 함.
-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항목은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둘째,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등의 영역을 반영해야 함.
- 영역별(거주유형, 재생산노동의 특성, 생애주기)로 반영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 도출.
- 특히 최근 농어촌 복지의 3대 화두인 여성농어업인 건강, 다문화가족, 일-가정 양립을 통한 후계세대의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의 효율적이 복지정책 방안 마련.
- 귀농자, 이민자, 토착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함. 또한 노인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이 농어촌지역 거주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의 욕구반영이 필요함.

4-1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4-1-1 한방보건 진료 확대

□ 현황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 63.5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강원 91.5, 충북 78.9, 충남 90.7, 전북 97, 전남 121, 경북 103.7, 경남 68.3, 제주 61.2로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평균보다 1.5배 ~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여성농어업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어업인의 43%가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령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80%가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여성농어업인들이 주로 많이 보유한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통, 관절염 등 주로 신체의 과다한 노동, 특히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거나 쭉그리고 앉는 농작업 상태에서 비롯된 질병이 매우 많았음.
-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70%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전체 농어촌 사회의 의료지원 및 보완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의료기관 이용 애로점과 관련해 접근성 미비 32.7%, 진료비

부담 28.7%로 나타남. 특히 관절염 등의 질병은 안질환이나 귀 질환 등과 달리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2차 병증(장기)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6> 의료기관 이용 중 애로점

구 분	빈 도	백분율(%)
진료비 부담 큼	73	28.7
거리가 멀	83	32.7
치료효과가 낮음	39	15.4
진료대기 시간과 날짜 김	30	11.8
기타	29	11.4
합 계	254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따라서 침, 뜸, 부황 등의 치료법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한방보건진료인 허브보건소는 54개에 불과함(그중 11개가 전남에 위치함).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지만 노령인구가 밀집해 있는 농촌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농촌지역 우선설치를 건의하고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해야 함.

□ 추진방향

- **1군 1한방보건소 확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양약의 남용으로 인한 2차 질병의 유병을 억제하여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한방보건소의 경우 약제나 의료도구 등이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서 이동진료에 적합한 수단임. 따라서 한방관련 진료

의 경우 **이동진료를 확대**. 특히 섬이나 산간오지일수록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의 확대실시가 필요함.

- 보건진료 사업의 경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면단위, 마을단위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한방진료 **사업을 면지소와 마을진료소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연차별 우선지원책 마련.
- 병의료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진료만이 아니라 **주1회 이동버스를 운영**하여 이동수단이 없거나 이동 수단조작 능력이 없는 여성들 및 지역민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강화. 활용하는 버스는 교육청의 학교용 마을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공기관 도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용.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한방진료소 농어촌우선지정	보건복지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단련실 한방도구 확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의료버스 운행(공동버스)	보건복지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질병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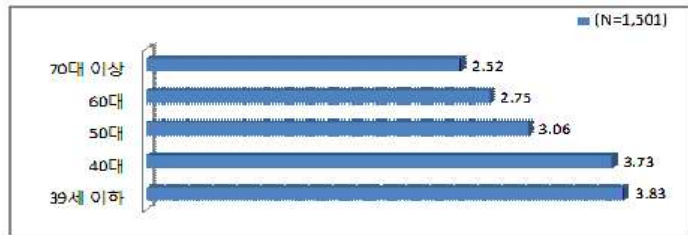
비고 :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제2차 삶의질 5개년계획과 연계

4-1-2 여성농어업인 질병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도구 보급

□ 현황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질병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임. 여성농어업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였으며 고령일수록 건강 체감도는 매우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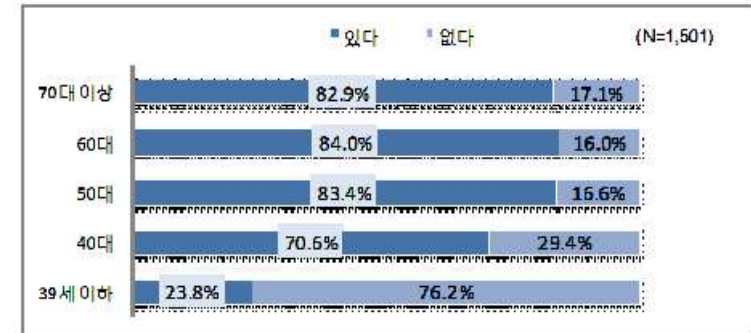
<그림 V-2>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주: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냄. 자료 :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보고서

- 건강에 관한 예방적 관리에 있어서는 젊은층이 노령층에 비해 훨씬 무방비 상태였음.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0%가 '없다'고 응답했음.
-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23.8%만이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비교적 저연령층 여성농어업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60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해 고령일수록 건강검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V-3>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현황



자료 :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보고서

- 농촌마을별로 건강관리실 설치가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건강관리를 위해 비치되는 시설이 런닝머신, 안마기 등 일반적인 헬스 도구인 경우가 많음.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센터, 농협문화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지침, 뜸, 부황, 체조 등 여성농어업인들이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도 일상적으로 만성질환 관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급
 - 센터사업에서 수지침, 뜸 등 예방적 관리 필요 프로그램 실시.
 - 농협문화복지센터에서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건강관련 체조 및 위생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질병이 진전될 수 있는 환경요인 제거. 특히 젊은 세대들의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관련 질병에 대한 의식 환기.
 -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나 순회진료시 건강검진 중요성 홍보

-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성별 유병율을 조사하여 이에 도움이 되는 건강도구를 갖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할 도구를 중심으로 기구가 배치되어야 함.
- 마을 건강관리실 건강기구 실태파악
- 필요한 기구에 대한 성별육구 조사
- 기구배치 시 여성농어업인 관련 기구 우선배치토록 구입지침 변경(여성고령자 비중이 마을인구의 60% 이상임)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건강프로그램 보급	농협, 지자체, 농진청					
건강검진홍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남녀유병율의 성차 반영한 건강도구 배치	보건복지부, 지자체					

4-3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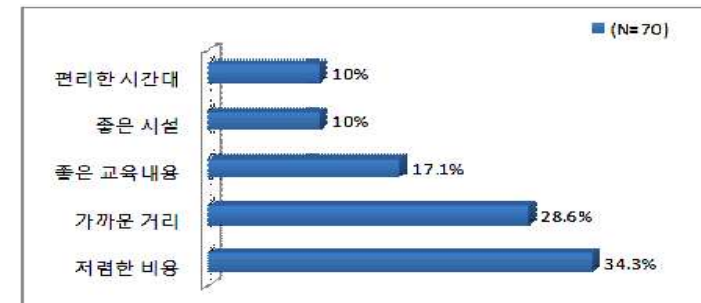
4-3-1 1면 1국공립 유치원 확보

□ 현황

-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9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83.3%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며, 60대에서는 58.8%가 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하여, 젊은 여성농어업인의 보육시설 활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촌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렴한 비용이 중요하다'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8.6%가 '가까운 거리'로 응답함. '교육내용이 좋아야 한다'는 17.1%, '맡기는 시간이 길고 종일반, 야간반, 휴일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시설이 좋아야 한다' 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V-4>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1순위)



자료: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견해로는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가 26.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표 V-8>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

구 분	빈 도	백분율(%)
현재로 충분	13	5.3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함	102	41.5
보육시설을 늘려야함	66	26.8
아이들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낌	65	26.4
합 계	246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추진방향

○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 저출산 시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중 보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항목임.
- 농촌지역의 경우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수익성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 수혜를 위한 공보육 개념으로 농어촌 지역 1면 1국공립 보육시설의 의무화가 필요함.

○ 농어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그룹홈 보육 확대

- 최근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인증여건을 보면 일정규모의 아동 수 확보가 필수적임. 이러한 조항은 아동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증보육시설 여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움.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적더라도 지역내 거리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농촌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인증이 필요함.
- 소규모 그룹홈 보육의 장점은 거리접근성의 향상 및 계절성, 시간제 등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계절, 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농어업의 특성상 농작업 시간의 불안정성, 농작업의 계절성 등의 영향으로 보육기관의 규칙적인 운영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
- 또한 농촌의 경우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이 증가함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문교육 만이 아니라 마을내 그룹홈 보육이나 마을파견 보육사 제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농촌 보육 및 교육 지원 교사 지원단 육성

- 농어촌지역 보육의 서비스 다양화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보육의 또 다른 어려움은 양질의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임. 따라서 보육교사 순환제를 실시하여 군단위로 양질의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어린이집 파견 근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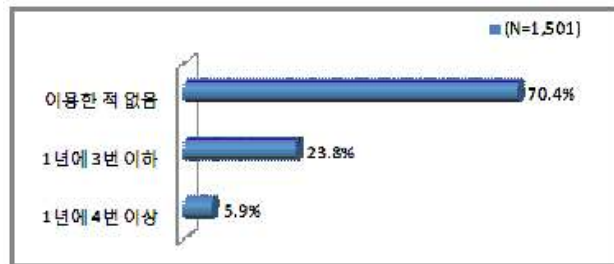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1면 1국공립 유치원확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촌 공동탁아 그룹홈 인증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어촌 지원 파견보육교사단 운영	보건복지부					
	지자체					

4-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지원

□ 현황

- 문화의 차이는 시설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은 더욱 낮음. 공연장수는 전체 대도시는 평균 40.86개소이지만 기초생활권은 1.6개소에 불과, 전시관은 대도시 27.42개, 기초생활권 1.12개, 영화관 41.57, 기초생활권 3.52개(2009, 농림부 기초생활권 정책방향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
 - 지역문화 복지시설 대도시 59개소 기초생활권 5.77개,
 - 지역축제 대도시 26.8%, 기초생활권 73.2%
-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 또는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70.4%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년에 3번 이하는 23.8%, 1년에 4번 이상은 5.9%로 나타나,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향유는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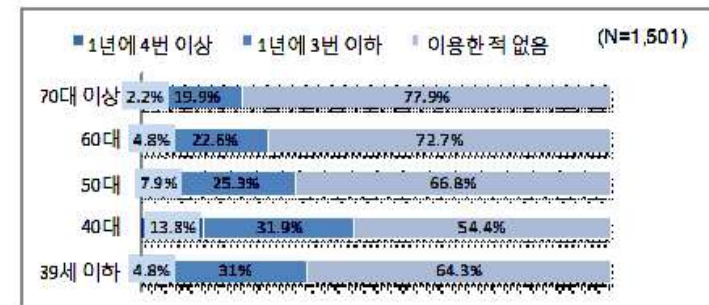
<그림 V-5>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도



자료: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보고서

- 연령대별로는 40대의 13.8%가 1년에 4번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여, 40대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1년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비율은 39세 이하에서는 64.3%, 40대에서는 54.4%, 50대에서는 66.8%, 60대는 72.7%, 70세 이상은 77.9%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과 이용도는 낮았음. 또한 30대의 경우 아이들이 어려서일 수 있지만 문화향유 수준이 낮음.

<그림 V-6> 연령대별 문화향유 정도



자료: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보고서

-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문화 활동에 대해 국내여행이 64.7%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과 영화관람이 각각 40.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전시회나 연극관람은 26.7%, 공연 참여는 14.3%순으로 나타남.

<표 V-8> 1년중 시행한 문화 활동

구 분	빈 도	백분율(%)
해외여행	108	40.6
국내여행	172	64.7
전시회나 연극관람	71	26.7
영화관람	108	40.6
공연참여	38	14.3
기타	15	5.6
합 계		100.0

-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영농활동이 활발한 40대, 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을 많이 지적하였고, 60대, 70세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건강, 체력부족, 교통 불편 등의 이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함. 특히 30대의 경우 정보부족에 대한 응답이 22%로 높게 나타남.

<표 V-9> 연령대별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시간부족	55.6	59.8	57.5	48.2	38.5
취미·의욕 없음	11.1	11.5	14.6	15.8	18.8
경제적 부담	11.1	8.0	10.3	11.4	9.9
건강, 체력 부족	0.0	0.0	4.6	8.2	13.1
교통불편	0.0	8.0	5.4	7.1	11.1
정보부족	22.2	6.9	5.7	7.9	7.3
시설부족	0.0	4.6	1.1	1.1	1.3
기타	0.0	0.0	0.8	0.0	0.0
모름/무응답	0.0	1.1	0.0	0.3	0.0
합계	100(27)	100(87)	100(261)	100(367)	100(314)

자료: 2008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 추진방향

-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 향상
 -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관심 항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문화 프로그램의 거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전개함.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해 근거 문화거점센터를 육성하여 다양한 참여거리를 제공함.
 - 이를 위해 면단위 농협 등에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 동아리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면단위 농협 등의 역할 필요.
- 기능별, 취미별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문화동아리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1회성 문화향유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스스로 참가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활동이 아니고 문화향유 유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문형에 불과함
 - 따라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즐길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여성농어업인 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중 프로그램개발이나 소모임 지원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 면단위 농협의 문화센터 기능 강화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해 면단위 농협이나 종합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거점화

- 년 6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문화활동 기관이나 도시의 문화동아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특히 폐교를 중심으로 문화공간화 하여 지역접근성을 강화
- 문화소모임 활동 적극 지원
 - 마을별로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모임이나 새로운 문화활동을 위한 동아리 모임을 적극장려하고 지원함.
 - 군단위별로 여성농어업인 평생학습관 등의 공간제공이 필요함.
 - 또한 여성농어업인 들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여성농어업인 문화 경연대회 실시
 -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그 날 행사에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 솜씨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어업인만의 문화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참여 의지를 높이고 지역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관광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 동아리 지원 확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문화경진대회	농식품부					

과제5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정책 방향

-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인 제도, 사람, 조직, 돈 4가지 요소를 확보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효과를 증진을 통한 정책체감도 향상.
- 정책추진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의 개정보완 및 담당부처 인력의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정책의 구체적 실행과 트너가 지방자치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정책담당 인력확보가 중요함.
- 지자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성과 및 환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정책집행력 강화방안 보완.
- 최근 여성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인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강화 및 성인지 정책강화방안 마련.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 성별통계에 대한 생산 및 활용조향을 강화하여 성별통계 생산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연차별 농업정책 관련 성별통계 발행을 의무화.
- 농어촌 지역의 보수화로 인해 양성평등한 지역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 관련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 교육 및 의식확산 강화 방안 모색.
- 여성농어업인 단체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역할 증진 방안, 여성관련 정책연구 과제 실행 등의 방안을 제시함.

5-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5-1-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 현황

- 2차 계획 기간 중 여성농어업인 관련법과 제도는 부분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정비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 관련 지위 향상이나 농가공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은 농외소득관련법의 개정(2009.5),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특별법 개정,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
-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특별법의 내용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나 정책환류에 관한 수단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추진방향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제도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필요.
- 각종 여성농어업인 관련법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정책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추진을 평가하는 전담기구 설치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 제정 독려(기초자치단체)	지자체					
여성농어업인관련 법의 개정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정책집행 우수지자체 담당자 시상	농식품부					

5-1-2 여성농어업인 정책 평가지표 및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

□ 현황

-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 또한 환류시스템이 없음.
-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지표를 구성해야함. 또한 이들 성과지표를 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 현황은 형식적으로 보고될 뿐 집행을 강화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실행은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성과지표 및 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집행에 강제력이 부가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 및 성과 유인요인이 제공되어야 함.
- 성과 유인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은 성과 인센티브의 제공임. 성과 인센티브를 표창과 예산 연계지원이 타당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추진 및 집행의 연계 시스템의 강화 방안 구축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성과 우수 지자체 표창	농식품부					
성과 우수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중앙-지방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자 정기간담회개최	농식품부					

5-2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5-2-1 성별영향평가 확대

□ 현황

- 성별영향평가는 성주류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농업정책의 품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정책 중 성별격차가 예상되는 항목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함.

- 성별영향평가는 성주류화 실현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란 점에서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환류가 미흡할 경우 평가는 평가고 정책은 정책으로 남겨질 우려가 있음.
- 농업정책의 경우 정책목표가 대부분 농가를 단위로 하는 沒성적(gender blind)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의 의미가 매우 큼
- 2006년 13개, 2007년 6개, 2008년 2개, 2009년 3개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됨. 특히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홍보 및 성과가 불분명함
- 농림부 성별영향평가는 심층사업으로 농기계 생산, 임대 등에 대한 심층평가가 있었음
- 여성부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는 농어업인력 육성 및 농기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있음. 이 결과가 정책에 활용되었는지 파악필요(기타 군단위 임대사업 등 다수가 있음)

□ 추진방향

- 농어업 정책중 여성농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정책사업을 설정하여 연차별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남녀공동참여 및 양성평등한 농업정책을 통해 남녀 농어업인들의 정책만족도를 증진
- 성별영향평가의 환류를 통해 농어업인 정책의 성과향상 및 품질향상에 기여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1과 1과제 평가	농식품부					
성별영향평가 환류협의회 구성	농식품부					
성별영향평가 과제 우수담당자 포상	농식품부					

5-2-2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강화

현황

- 성 인지적 통계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보여주고 정책 결정과 입안, 설계, 실행 및 평가에서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도구임. 제3차 여성발전을 위한 FAO 행동계획은 정책입안자 및 업무 담당자들이 여성농어업인의 특수한 정보를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성인지적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농업관련 통계의 생산은 1995년까지 농림부에서 실시하다가 2000년부터는 통계청이 처음 주관하여 실시한 농업총조사가 있음.
- 농업총조사에서 실시한 내용은 일반적인 항목에 성별구분통계는 있으나 주로 가구주인 남성을 중심으로 통계가 종합되어 있음. 따라서 성별 농지소유관계, 재배작물, 판매금액,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참여, 생활환경 등에 있어서 성별경영참여 현황을 알 수 가 없음.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재분석해야 함.

- 어업관련 통계는 2007년부터 성별통계가 부분적으로 생산됨,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별분리통계의 미생산이 대부분임.
- 성별통계는 정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기본수단임. 따라서 각 정책별로 성별통계가 생산되고 활용되어야 함(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을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성별자료를 요청했는데 생산된 곳이 거의 없었음)
- 통계생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농어업인 통계의 별도 생산만이 아니라 통계청의 일반통계, 농어업총조사 등에 성별에 대한 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 또한 성별통계의 생산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는 성별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집행 성과 보고서 성별통계를 의무화해야 함.

추진방향

- 성별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목표에 부합함. 따라서 성별통계는 생산만이 아니라 활용 역시 일상화되어야 함.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연차별 성별통계의 생산	농식품부					
사업보고서 작성시 성별통계 의무화(지침 보완)	농식품부					
농업총조사, 통계청 조사에 성별통계 관련 지표개선	농식품부 통계청					

5-2-3 양성평등 교육확산

□ 현황

- 여성의 참여활동에 제약요인은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이라는 의견이 52.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이 인식미비가 31.6%, 가족의 반대는 10.7%로 나타남.

<표 V-10>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	133	52.6
가족의 반대	27	10.7
여성들의 인식미비	80	31.6
잘 모르겠음	13	5.1
합 계	253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성평등 지수에 있어서는 가족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음. 성평등 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가사노동 분담 2.18, 육아 공동분담 2.25 순으로 나타남.

<표 V-11> 농어촌 지역내 성평등 지수에 대한 인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소득분배	2.51	1.16
정치참여	2.44	1.09
지역정책 결정 참여	2.44	1.12
마을사업 결정참여	2.52	1.10
가족 내 의사결정	3.49	1.06
농지 등 소유	2.35	1.26
농업관련 조직에 참여	2.89	1.15
농사일 분담	3.10	1.12
농작업 결정과정	2.97	1.16
농업관련 정보향유	2.97	1.16
가사노동 공동분담	2.18	1.16
육아 공동분담	2.25	1.16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어업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별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가 60%로 높게 나타남.

<표 V-12> 차별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24	60.0
없다	16	40.0
합 계	40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차별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업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은 69.7%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음.

<표 V-13> 차별경험 영역

구 분	빈 도	백분율(%)
정책	7	21.2
소득	5	15.2
일상생활	9	27.3
농어업자금신청	4	12.1
후계자육성	7	21.2
기타	1	3.0
합 계	33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일상생활의 영역만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 생산 및 정책 과정에서 차별경험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추진방향

- 농업관련 공무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이해 과정 설치
- 농업정책 관련 지원시 정책수혜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농업, 어업, 임업 후계자 선정시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적용
- 공동경영협약 가구의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 적용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관련 공무원 여성농업인 정책 이해 과정 설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 관련 지원시 정책수혜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어업, 임업 후계자 선정시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적용	농림수산식품부					
공동경영협약 가구의 양성평등 교육 수료시 가점 적용	농림수산식품부					

5-3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5-3-1 여성농업인 센터 확대 및 기능전환

현황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민간지원기구로서는 유일한 기구로 당초 2010년까지 100여개가 넘도록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2005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38개가 개설된 이래 오히려 1개소가 감소하였음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은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되고 필수사업의 경우 보육, 방과 후 아동교육 2개를 지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의 경우 관할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통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등이 주무부처가 되어 사업이 집행됨.

-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이나 교육업무가 필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지역에서 관할은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기관의 다양화로 인해 지원부서 따로 사업의 감독부서 따로 라는 행정체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V-14> 보육사업 인증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증 받음	9	42.9
인증 준비중	2	9.5
인증 못받음	10	47.6
합 계	21	100.0

자료: 3차 여성농업인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현재 38.1% 이고 사설학원이 없는 곳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센터가 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의 역할은 1면 1개 국공립 유치원 및 방과 후 교실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14.2%만이 보육기능이 적합하다고 응답해 센터의 기능전환이 필요함. 2010년 4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지원 등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기관으로의 전환의지를 밝히고 있음.

<표 V-15>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구 분	빈 도	백분율(%)
보육기능	36	14.2
여성농어업인 취미활동 교육지원	66	26.1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교육	135	53.4
기타	16	6.3
합 계	253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농어촌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사회적일자리와 농어촌 여성농민에 관한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V-16> 센터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업

구 분	빈 도	백분율(%)
사회적일자리 강화사업	8	40.0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	2	10.0
농어촌 여성노인 지원사업	7	35.0
기타	3	15.0
합 계	20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센터의 기능전환 유도
- 사회적일자리 사업 유치
 - 농촌공동체 회사 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특화

- 1군 1센터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각종 농업관련 지원 프로그램 우선 배정
 - 지방양여금 배분시 인센티브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정 및 유관사업 지원 실시(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등)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역아동센터 지정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농식품부					

5-3-2. 여성농어업인 단체 육성

□ 현황

- 여성농어업인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자긍심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
- 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간 중 여성농어업인 단체는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의식 개혁을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활동, 소비자단체와의 교류하는 도·동 교류사

업을 실시

- 정책 위원회의 참여 등 농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농산물을 이용한 사업활동,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단위의 활동은 미흡함
-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위한 단체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아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정책적 요구가 어업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 또한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농업인내부의 이질화 등의 변화와 지방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새로운 역할이 요청됨.
- 기존의 관성적 조직과 달리 최근 전문적 관심사나 생산여건을 바탕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전문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음(품목별 연구회, 음식연구회, 여성농어업인 CEO, 벤처대학 동아리 등) 이들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 지역수준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시군 및 시도의 여성농업정책의 민간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제한을 가짐. 따라서 영역별로 전문화되는 조직간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을 D/B화하여 활용.

□ 추진방향

- 전국 여성농어업인단체 지도자들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지역의 농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 하고 지역개발의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는 핵심주체로 육성
- 농업의 전문화와 지역적 분화에 따라 품목별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조직을 발전시킴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 조직으로 양성평등 의식개혁 및 캠페인을 주도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농어업인 단체지원	농식품부					
여성어업인 단체네트워크 활성화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단체					
도 시군여성농어업인 협의체결성	지자체					

■ 신규/계속 사업 여부

추진과제	신규	계속
가.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권리향상		
①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		○
②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
나.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여성농어업인의 취창업 지원	○	
②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③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다.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①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육성	○	
② 후계 및 귀농 여성농어업인 육성		○
라. 여성농어업인의 맞춤형 복지증진		
①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
②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서비스 강화		○
③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	
바.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①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	
②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③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 지원		○
과제수(13)	4	9

■ 세부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1.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1-1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인정							
•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인정						농식품부	
• '농가경영협약' 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농식품부 여성농어업 인단체	
• 여성농어업인의 피해 구제 및 법률 상담						농식품부 농협	
1-2.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정책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마을운영 및 개발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농식품부	
•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농식품부 농수축협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향상							
2-1. 여성농어업인 취창업 지원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농식품부 농진청	●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여성인력 육성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2-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배양							
•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농식품부	
• 평생학습 체계 마련						농식품부 인재개발원	
2-3.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여성전용 농기계 임대활성화						농식품부	●
• 도우미제도 확대, 수급체계 효율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마을공동급식소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육성							
3-1.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육성							
• 여성농어업인 리더십 교육강화						농식품부	
• 여성이장 마을 인센티브 제공						농식품부 지자체	●
3-2 후계 및 귀농여성농어업인 육성							
• 후계여성농어업인 육성						농식품부	
• 귀농 여성농어업 멘토 육성						농식품부	●
• 결혼이민 여성의 농업인력화						농식품부 농협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신 규
4.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4-1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확대							
•한방보건 진료 확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여성농어업인 질병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도구보급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
•여성농어업인 질병 전문병원 지정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
•주간 의료버스 운행						농식품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
4-2 여성농어업인 보육 및 복지 서비스 강화							
•1면 1국공립 유치원확보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
•농촌 공동탁아 그룹홈 인증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농어촌지원 파견보육교사제도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구 분	'11	'12	'13	'14	'15	추진부처 및 기관	
4-3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지원							
•면단위농협 문화센터 강화						농식품부 농협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
•문화소모임 활동지원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지자체	●
5.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5-1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여성농어업인 정책평가 및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지자체	
5-2. 양성평등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성별영향평가 강화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강화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확산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
5-3. 여성농어업인 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농식품부 농수협 농진청	●

《참고문헌》

- 강혜정·마상진(2007).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발전연구원.
- (2008).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김경미(2002). “여성의 농업 참여유형에 따른 지위 인정 방안.” 『농촌생활과학연구』 23
- (2007). “아시아 여성농어업인 지위지표(GEIA)의 설정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역할 연구 지도 목표 달성의 기준지표”, 『농촌자원과 생활』, 통권111호(가을)
- 김동원 외(2009), 2009 국민의식조사, 농촌경제연구원
- 김미숙(2006), 「한국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03). “글로벌 가버넌스의 여성정책: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18
- 김엘림 외(2000). 「21세기의 인권II」,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한길사
- 김영옥, 양승주(2000).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수산식품부)
- 김정호·최경환·이용호(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 외(2006),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방안,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외(2006). 여성농어업인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 농업정책 추진계획
- (2006), 제2차 여성농어업인 정책기본계획
- (2009), 식품산업종합대책
- (2003). 「선진국의 여성농어업인 지원사례」,
- (2001).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
- (2003, 2008). 여성농어업인통계
- (2004, 2009). 농림어업 주요통계
- (2006).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
- (2007).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 「일본의 가족경영협약과 여성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 (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 박대식 외(2008), 해외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3). 여성농어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외(2005).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2002). 「여성농어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외(2009). “해외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2002), 여성농어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9),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정망 개선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박민선(2000). “EU 회원국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농협조사월보』 45(4): 1~13.
- (2004). “여성농어업인 경영참여 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 30: 25~44.
- 외 (2007). “여성농어업인 인구 추계와 정책적 함의.” 『농촌사회』 17(1): 69~90.
- 외 (2005). “여성농어업인 참여확대를 위한 농업경영 모델 설정.” 농촌진흥청
- 송미령 외(2009), 기초생활권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 지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가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 오미란 외(2008).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의 심층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 지원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2009), 여성농어업인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방안, 젠더법학회 2009. 1권 1호
- (2009).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에 관한 탐색”. 젠더와 문화 2권 2호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동필, 최경환, 성주인(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정미미(2008). 여성농어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 최동주 외(2004).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과 아시아 여성복지정책 비교.” 「국 제지역연구」 8(1): 271~304.
- 최윤지(2006). 「농업인 부부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프랑스 농림성(2001), 프랑스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권리

<내부문건>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 , 2009, 농촌다문화가족 지원방안
- , 2006, 제2차 여성농어업인 정책 기본계획
- , 여성농어업인정책 2006, 2007, 2008, 2009 년차별 실행계획
- 시도광역자치체, 16개 시도 2차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해외논문>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94. 「Women in Farming and

-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 Droit Rural, 2007, 『Droit Rural』, ellipses.
- European Commission, 2002, 『Agriculture: The Spotlight on Women』.
- (2005), 『‘Making Work Pay’ Debates from a Gender Perspective』.
- (2006), 『Rural Development Success Stories』.
- (2008), 『Manual for Gender Mainstreaming』.
- (2008), 『Report i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6, 『Employment in Rural Areas: Closing the Jobs Gap』.
-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8, 『Rural Development in the EU』.
- FNSEA, 2008,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
- Hae-Kyeong, Lee, 2005,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Women's World 2005, 9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 伊藤孝惠, 2000, “在日外國人女性の「異文化適應」とsocial support-都市近郊部に在住する日本人と結婚した外國人女性の場合”, 『日本文化學報』, 8월호.

• 홈페이지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 농촌진흥청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ifaff.go.jp/>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http://www.kwpa.org/>
- 지역아카데미 <http://www.terrami.org/agroinfo/>
- 한국여성농어업인중앙연합회 <http://www.waff.or.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법률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농외소득 지원특별법
-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 각 지방자치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부 록 1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여성농어업인 268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여성농어업인 대상 전화조사, E-mail 조사, 방문조사 병행
- **측정 항목** : 총 15지표, 48항목 측정
 - 농어업, 농어촌 발전전망에 관한 인식
 - 2차 기간 동안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만족도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에 관한 제도 인식현황 및 수단의 적절성
 - 여성농어업인 관련법에 관한인지도 및 보완점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에 대한 인식 및 방안
 - 여성농어업인 소득지지를 위한 영역별 욕구
 -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 평가 및 항목별 욕구
 - 농어촌지역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및 보완점
 - 여성농어업인 정책인프라에 대한 욕구
 -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욕구 및 방안
 - 고령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방안
 - 여성농어업인 문화서비스 수혜정도 및 욕구
 - 여성농어업인 관련 집행체계에 관한 인식 및 욕구
 - 여성농어업인 관련 예산에 관한 욕구
 - 여성농어업인 관련 연구기관에 관한 인식 및 욕구 등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현황

- 정책에 관한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대상자는 여성농업인 단체 군 단위 회장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함.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1.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반면 20~30대는 9.2%, 60대 이상은 1.9%에 불과하였음.
-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48.6%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22.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대졸도 18.1%나 되었음.

<표 1> 응답자의 일반특징

	구 분	빈 도	백분율(%)
연령	20~30대	24	9.2
	40대	125	47.9
	50대	107	41.0
	60대이상	5	1.9
	합 계	261	100.0
학력	무학	2	0.8
	초졸	25	9.7
	중졸	59	22.8
	고졸	126	48.6
	대졸	47	18.1
	합 계	259	100.0

2) 농업관련 현황

■ 농업규모 및 주소득

- 응답자들의 농업규모는 중소규모의 농가가 전체의 44.6%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전업농가가 28.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영세규모 농가는 전체 27.4%였음. 주소득 작물로는 벼농사가 36.7%로 가장 많았고, 과수가 14.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특작이 11.0%, 시설채소가 10.6%순으로 나타남.

<표 2> 농업의 규모

	구 분	빈 도	백분율(%)
농사규모	대규모 전업농가	52	28.0
	중소규모 농가	83	44.6
	영세규모 농가	51	27.4
	합 계	186	100.0
주소득 작물	벼농사	97	36.7
	과수	37	14.0
	시설채소	28	10.6
	화훼	12	4.5
	노지채소	14	5.3
	축산	26	9.8
	특작	29	11.0
	기타	21	8.0
	합 계	264	100.0

■ 영농형태

- 응답자들의 영농형태는 전적으로 농사만 한다는 여성이 전체 65.7%로 전업농이 대부분이었음. 농사와 농업 외 소득을 같이 한다는 여성이 25.4%, 영농관련 사업을 한다는 여성은 6.3%, 농사 중 먹거리만 한다는 여성이 2.6%순으로 나타남.

<표 3> 영농형태

구 분	빈 도	백분율(%)
농사만	176	65.7
농사와 농업 외 소득 같이	68	25.4
농사는 먹거리만	7	2.6
영농관련 사업	17	6.3
합 계	268	100.0

- 영농형태를 세분화하여 구분한 결과 특작의 경우 3천평 이상 38.6%로 가장 많았고 천평 이상 2천평 이하가 24.1%, 천평 미만 20.5%로 여성농업인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줌. 마찬가지로 과수의 경우 3천평 이상 5천평 이하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35.3%, 5천평 이상이 25.5%, 2천평 이상 3천평 이하는 23.5%, 2천평 미만은 15.7%로 경영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 과수, 특작 규모

	구 분	빈 도	백분율(%)
	3천평이상	32	38.6
특작	2천~3천평	14	16.9
	천평~2천평	20	24.1
	천평미만	17	20.5
	합 계	83	100.0
과수	5천평이상	13	25.5
	3천~5천평	18	35.3
	2천~3천평	12	23.5
	2천평미만	8	15.7
	합 계	51	100.0

■ 농업종사 경력 및 농사일 참여도

- 농업에 종사한 경력으로는 21년 이상 된 농업인이 전체 52.1%로 가장 많았고,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20.9%, 10년 미만이 14.8%,

11년 이상 15년 미만이 12.2%순으로 나타남.

<표 5> 농업에 종사한 경력

구 분	빈 도	백분율(%)
10년미만	39	14.8
11~15년	32	12.2
16~20년	55	20.9
21년이상	137	52.1
합 계	263	100.0

- 여성농어업인의 전체 농사의 참여정도를 알아본 결과 81%에서 100%로 사이가 전체의 50.4%로 가장 많았고, 51%이상 80이하인 여성농어업인이 18.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0%가 농사의 참여도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전체 농사의 참여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30%미만	42	16.5
31~50%	38	15.0
51~80%	46	18.1
81%이상	128	50.4
합 계	254	100.0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4.9%로 대부분의 여성농어업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표 7>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중요	241	94.9
약간 중요	9	3.5
보통	2	0.8
역할 미미	1	0.4
역할 없음	1	0.4
합 계	254	100.0

3) 정보화 및 이동수단

- 여성 농업인의 정보화 정도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메일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는 농업인이 전체 62.8%로 정보화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이었음. 그러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9.9%로 여성농업인 내부의 정보격차가 발생함.

<표 8> 정보화 능력

구 분	빈 도	백분율(%)
모름	52	19.9
인터넷 이메일이나 커뮤니티활용	164	62.8
손수 블로그 등 운영	19	7.3
전자상거래 활용	24	9.2
홈페이지 제작 등 가능	2	0.8
합 계	261	100.0

- 여성농업인들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차량의 경우 자가운전의 비율이 84.4%로 높게 나타남.

<표 9> 차량운전

구 분	빈 도	백분율(%)
한다	222	84.4
면허증은 있지만 해보지 않음	10	3.8
면허증 없음	31	11.8
합 계	263	100.0

3. 농어촌 인식 및 대응욕구

1) 향후 농어촌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욕구

■ 농촌전망에 대한 인식

-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32.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21.8%, 매우 나빠질 것이다가 19.5%순으로 나타나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농어촌 발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표 10>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전망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좋아질 것 임	18	6.9
약간 좋아질 것 임	50	19.1
현재와 별 차이 없음	86	32.8
약간 나빠질 것임	57	21.8
매우 나빠질 것임	51	19.5
합 계	262	100.0

■ 거주계획 및 원하는 영농형태

- 향후 농어촌 거주 계획에 대해서는 이농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68.1%로 농어촌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남.

<표 11> 향후 농어촌 거주 계획

구 분	빈 도	백분율(%)
이농할 계획	24	9.2
이농하고 싶지만 조건이 안되서 그냥 삼	33	12.7
기회가 된다면 이농할 생각	16	6.2
이농할 생각 없음	177	68.1
잘모르겠음	10	3.8
합 계	260	100.0

- 앞으로 원하는 농업경영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농사+판매 및 가공형태에 60.0%가 답을 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농사만 짓겠다는 의견은 17.3%, 농사와 관광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은 16.5%순으로 나타남.

<표 12> 원하는 농업경영형태

구 분	빈 도	백분율(%)
전적으로 농사만	44	17.3
취업+농사	11	4.3
농사+판매 및 가공	153	60.0
농사+관광(민박, 체험농원포함)	42	16.5
완전취업+자가소비용 먹거리만	5	2.0
합 계	255	100.0

- 농업 외 소득관련 정책항목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농산물 가공판매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 37.2%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2.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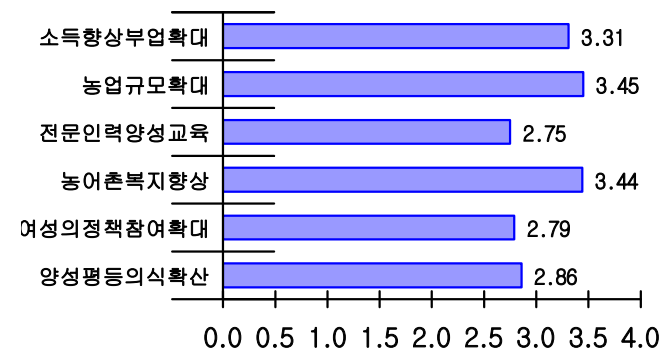
<표 15> 농업외 소득관련 정책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

구 분	빈 도	백분율(%)
농산물 가공판매	165	37.2
농촌체험마을 조성	77	17.4
농촌민박 및 관광사업	58	13.1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사업	119	26.9
없음	24	5.4
합 계	443	100.0

* 위 분석은 다중응답 분석임

■ 분야별 정책중요도 인식

- 소득, 규모, 인력, 복지, 여성참여, 양성평등 6개 항목에 대해 3점 척도로 정책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2.22부터 2.89까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응답함. 농어촌 복지향상이 평균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가 2.84,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82, 양성평등의식 확산이 2.77, 소득향상 부업확대가 2.76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농업규모 확대에 대한 중요도는 모든 요인들 중 평균값이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1] 여성농어업인 정책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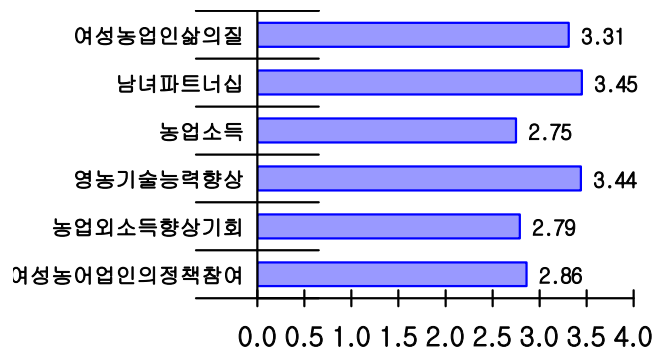
4. 2차 계획 기간 여성농업인 정책 만족도

1)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 2차 계획기간 중 목표와 중요정책 과제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남녀 파트너십 성취도가 평균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농기술 능력향상 3.44, 삶의 질 향상 3.31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업소득이나 농외소득 기회향상 및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는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16> 2차 계획 기간 중 변화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3.31	.89
남녀 파트너십	3.45	.90
농업소득	2.75	1.02
영농기술 능력향상	3.44	.94
농업외 소득향상 기회	2.79	1.03
여성농어업인 관련 제도	2.85	.93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	2.86	.99



[그림2] 2차 계획 기간 중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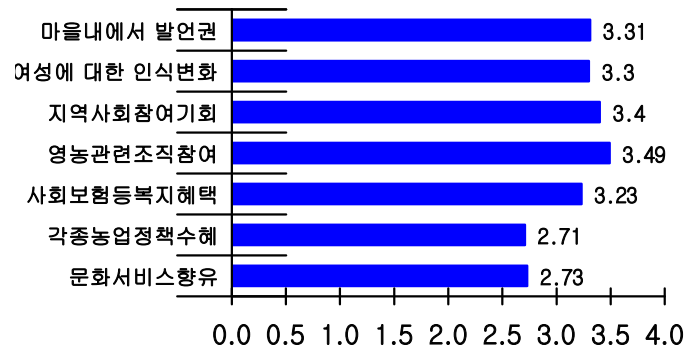
2)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인식

- 2차 계획기간 중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로는 4개 항목이 척도평균(3점) 이상으로 나타나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중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평균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평균 3.40, 마을 내에서 발언권 평균 3.30, 영농관련 조직참여 평균 3.23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역사회 여성참여 부분은 증대한 것으로 보여짐.
- 반면에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각종 농업정책 수혜, 문화서비스 향유 항목은 척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이들 정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각종 농업정책 수혜가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들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표 17>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마을 내에서 발언권	3.30	1.07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3.40	1.04
지역사회 참여기회	3.49	.99
영농관련 조직참여	3.23	1.03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2.71	.93
각종 농업정책 수혜	2.57	.92
문화서비스 향유	2.73	1.09

- 매우향상 5점, 약간향상 4점, 보통 3점, 약간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부여



[그림3]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5. 3차년도 계획 목표 및 과제선정에 대한 욕구 측정

1)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직업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욕구

-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직업인정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23.5%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76.5%가 모른다고 답하였음.

<표 18>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직업 인정 조건인지

구 분	빈 도	백분율(%)
알고 있다	60	23.5
모른다	195	76.5
합 계	255	100.0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규정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이 해당하는 분야를 살펴본 결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27.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5%였음. 따라서 농가경영체 등록시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시급함.

<표 1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 어업인에 대한 규정 중 해당항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함	32	52.5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7	11.5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7	27.9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고용	3	4.9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	2	3.3
합 계	61	100.0

■ 여성농어업인 스스로의 직업적 지위 인식

-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합당한 지위에 대해 공동경영주라는 의견이 84.6%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합당한 지위

구 분	빈 도	백분율(%)
경영주	18	6.9
공동경영주	220	84.6
농업보조자	14	5.4
가족종사자	7	2.7
기타	1	0.4
합 계	260	100.0

■ 직업적 지위 인정방식

-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공동출하에 응답자의 95.5%가 적합하다고 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부부 공동 참여가 95.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농가경영체 등록시 공동명의로 적합하다가 92.7%, 여성명의 농산물 판매 통장이 92.4% 순으로 나타남.

<표 21>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입증하는 방법

구 분	매우적합 N(%)	적합 N(%)	적합하지않음 N(%)
결혼후 취득 농지의 공동소유	173(68.7)	58(23.0)	21(8.3)
농산물 공동출하	150(61.5)	83(34.0)	11(4.5)
여성명의 농산물 판매통장	148(60.7)	79(32.4)	17(7.0)
농가경영체등록시 공동명의	158(64.8)	68(27.9)	18(7.4)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	136(57.4)	61(25.7)	40(16.9)
작목반,영농법인 등에 부부공동 참여	168(69.1)	64(26.3)	11(4.5)

■ 연금가입 여부

- 여성농어업인 본인 명의의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가입하고 있다고 답함. 반면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53.5%로 나타나 가입하고 있는 여성보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연금가입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가입함	117	45.0
가입하지 않음	139	53.5
잘 모르겠음	4	1.5
합 계	260	100.0

<표 23> 연금가입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돈이 없어서	56	43.8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30	23.4
남편이 가입해서	19	14.8
잘 모르겠음	23	18.0
합 계	128	100.0

- 본인 명의의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여성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조직참여정도

<표 24> 체험마을 등의 사업실시에 운영위원 참여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참여함	224	86.2
참여하지 않음	21	8.1
잘 모르겠음	15	5.8
합 계	260	100.0

- 농촌마을개발 및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 운영위원'에 여성위원 20% 할당제에 대해 실제 시행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6.2%가 참여하겠다고 답함.

<표 25>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능력이 안돼서	6	26.1
바빠서	11	47.8
원치 않아서	6	26.1
합 계	23	100.0

-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바빠서 안하겠다고는

의견이 47.8%로 가장 많았고, 능력이 안되서와 원치 않아서가 각각 26.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생산조직 참여

-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해 농수축협조합원이 50.0%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작목반이 34.6%가 참여해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농어업 후계자는 32.0%, 영농조합은 28.2%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표 26> 참여하는 생산자조직

구 분	빈도	백분율
영농조합	75	28.2
농수축협조합원	133	50.0
작목반	92	34.6
농어업후계자	85	32.0
기타	11	4.8

-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참여하고 싶으나 남편이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장 많은 답을 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참여할 조직이 없어서가 17.2%,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14.9%로 나타남.

<표 27> 생산자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	백분율(%)
참여할 조직이 없어서	15	17.2
참여하고 싶으나 남편이 참여해서	49	56.3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13	14.9
기타	10	11.5
합 계	87	100.0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전문인력화를 위해 개발필요영역

- 농업 전문 인력화를 위한 본인의 능력개발 중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1,2,3순위를 종합하여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이라는 의견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이 17.3%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카페 운영 등 정보화 능력은 16.4%, 농산물 재배기술은 16.1%순으로 나타남.
- 필요한 능력 1순위로는 농산물 재배기술능력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이 30.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이 26.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3순위로는 홈페이지, 카페 운영 등 정보화 능력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이 16.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표 28>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본인능력 개발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전체 N(%)
농산물 재배기술	94(36.3)	11(4.3)	18(7.2)	123(16.1)
농기계 조작능력	14(5.4)	22(8.7)	6(2.4)	42(5.5)
법인,작목반 등 조직운영	20(7.7)	22(8.7)	16(6.4)	58(7.6)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	80(30.9)	67(26.4)	35(14.0)	182(23.9)
경영장부 기록 및 회계관리 능력	8(3.1)	18(7.1)	16(6.4)	42(5.5)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	20(7.7)	72(28.3)	40(16.0)	132(17.3)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능력	10(3.9)	22(8.7)	26(10.4)	58(7.6)
홈페이지, 카페 운영 등 정보화능력	13(5.0)	20(7.9)	92(36.8)	125(16.4)
기타	0(0.0)	0(0.0)	1(0.4)	1(0.1)
합 계	259(100.0)	254(100.0)	250(100.0)	7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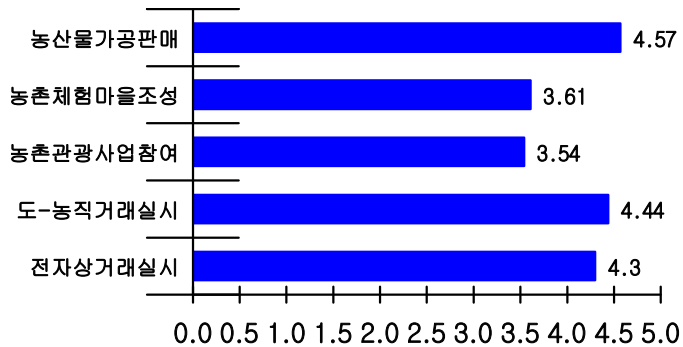
* 위 분석의 전체는 1,2,3순위를 합친 다중응답 분석임

■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책분야

- o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공, 체험, 관광, 직거래 등의 정책이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측정했는데 농산물 가공판매의 중요도가 평균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농 직거래 실시가 평균 4.4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상거래 실시가 4.30,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3.61, 농촌관광 사업참여 3.54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가공과 직거래 판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표 29>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농산물 가공 판매	4.57	.69
농촌체험마을 조성	3.61	1.17
농촌관광 사업 참여	3.54	1.16
도-농 직거래 실시	4.44	.88
전자상거래 실시	4.30	.92



[그림4]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 농산물 가공식품 참여 현황

<표 30> 농산물 관련 가공식품 판매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74	28.0
없음	158	59.8
향후 참여의향 있음	32	12.1
합 계	264	100.0

- o 농산물 관련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28.0%였음. 반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59.8%나 되었음.

<표 31> 판매하는 제품종류

구 분	빈 도	백분율(%)
김치류	7	9.6
양념류	7	9.6
잡곡류	2	2.7
음료	20	27.4
농산물	14	19.2
수산물	1	1.4
장류	10	13.7
기타	12	16.4
합 계	73	100.0

- o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여 재분류 해 보았는데, 음료(각종 즙이나 우유 등)가 전체 27.4%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이 19.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장류도 13.7%나 되었음.

<표 32> 판매방식

구 분	빈 도	백분율(%)
직거래판매	54	79.4
전자상거래	5	7.4
납품	9	13.2
합 계	68	100.0

- 가공식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 직거래 판매가 79.4%로 가장 많았고, 납품이 13.2%, 전자상거래가 7.4%순으로 나타남.

<표 33> 판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방법을 몰라서	37	24.8
바빠서	26	17.4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38	25.5
기타	48	32.2
합 계	149	100.0

- 가공식품 판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다는 의견이 25.5%, 방법을 모른다가 24.8%, 바쁘다가 17.4%로 나타남. 기타 의견도 32.2%나 되었음.

■ 농산물 출하방식

- 농산물 출하 장소에 대해 주요 판매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농협에 출하하는 농업인이 30.6%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도매상, 소매상, 5일장이나 지역 시장, 농협, 대형매장, 공판장 이외의 장소)가 28.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공판장이 19.4%, 도매상이 13.2%순으로 나타남.
- 출하장소 1순위로는 농협이 39.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장소가 23.6%로 나타남. 출하장소 2순위로는 기타장소가 37.5%로 가장 많았고, 공판장이 25.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표 34> 농산물 출하장소

구 분	1순위 N(%)	2순위 N(%)	전체 N(%)
도매상	38(14.7)	17(10.6)	55(13.2)
소매상	5(1.9)	9(5.6)	14(3.3)
5일자이나 지역시장	6(2.3)	6(3.8)	12(2.9)
농협	103(39.9)	25(15.6)	128(30.6)
대형매장	4(1.6)	3(1.9)	7(1.7)
공판장	41(15.9)	40(25.0)	81(19.4)
기타	61(23.6)	60(37.5)	121(28.9)
합 계	258(100.0)	160(100.0)	418(100.0)

* 위 분석의 전체는 1,2순위를 합친 다중응답 분석임

■ 농번기 공동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 농번기에 고용인의 식사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2%가 본인이 직접 준비한다고 답함.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에서 배달한다가 29.1%로 나타남.

<표 35> 농번기에 고용인의 식사해결 방법

구 분	빈 도	백분율(%)
본인준비	163	63.2
다른 가족원이 준비	7	2.7
음식점 배달	75	29.1
공동취사	1	0.4
기타	12	4.7
합 계	258	100.0

- 농번기에 공동급식 제도 도입시 참여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8%가 참여하겠다고 답함.

<표 36> 농번기에 공동급식 제도 도입 시 참여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참여함	201	78.8
참여하지 않음	32	12.5
잘 모르겠음	22	8.6
합 계	255	100.0

3)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 육성

■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제약요인

<표 37>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요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	133	52.6
가족의 반대	27	10.7
여성들의 인식미비	80	31.6
잘 모르겠음	13	5.1
합 계	253	100.0

- o 여성의 참여활동에 제약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역사회의 남성 주도성이라는 의견이 52.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인식 미비가 31.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가족의 반대는 10.7%로 나타남.

4) 여성농어업인의 맞춤형 복지증진

■ 도우미 활용

<표 38> 도우미 이용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37	14.0
없음	224	84.8
도우미 제도 모름	3	1.1
합 계	264	100.0

- o 도우미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사람은 14.0%에 불과하였고 경험이 없다고 84.8%나 되었음. 도우미 제도를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39> 도우미제도 이용 종류

구 분	빈 도	백분율(%)
출산도우미	17	47.2
영농도우미	17	47.2
가사도우미	2	5.6
합 계	36	100.0

- o 도우미를 이용한 사람들 중 어떤 종류의 도우미를 이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출산도우미와 영농도우미가 각각 47.2%로 나타났음. 가사도우미는 5.6%에 불과하였음.

■ 고령여성농어업인 마을조직

<표 40> 고령자들의 참여 보장하는 마을기업 조직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반드시 필요함	121	45.7
필요하지만 어려울 것임	123	46.4
불가능함	7	2.6
잘 모르겠음	14	5.3
합 계	265	100.0

- o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참여를 위하여 고령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기업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필요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45.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2.6%나 되었음.

<표 41> 고령여성농어업인들의 가공, 농촌관광 등 참여에 소득기여

구 분	빈 도	백분율(%)
큰 기여를 할 것임	96	36.2
약간 기여할 것임	128	48.3
별로 기여하지 못 할 것임	29	10.9
잘 모르겠음	12	4.5
합 계	265	100.0

- o 고령 여성농어업인이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등 참여한다면 소득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여를 할 것이다에 전체 응답자 85%정도가 답하였음.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36.2%나 되었음.

<표 42> 의료기관 이용 중 애로점

구 분	빈 도	백분율(%)
진료비 부담 큼	73	28.7
거리가 멀	83	32.7
치료효과가 낮음	39	15.4
진료대기 시간과 날짜 김	30	11.8
기타	29	11.4
합 계	254	100.0

- o 의료기관 중 어려운 점에 대해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28.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

<표 43> 결혼이주여성 거주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165	62.7
없음	98	37.3
합 계	263	100.0

- o 결혼이주여성이 마을에 있는가에 대해 있다가 62.7%로 나타나 없는 마을보다 있는 마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결혼이주여성이 하는 일

구 분	빈 도	백분율(%)
농사일 돕기	78	47.0
다른 일에 취직	27	16.3
집에서 아이만 돌봄	61	36.7
합 계	166	100.0

- o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 농사일을 돕는다가 47.0%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본다가 36.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에 취직하고 있다는 16.3%에 불과함.

<표 45> 결혼이주 여성들의 마을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

구 분	빈 도	백분율(%)
한글교육	119	46.5
우리문화교육	98	38.3
영농기술교육	25	9.8
기타	14	5.5
합 계	256	100.0

- o 결혼이주 여성들의 마을 정착을 위해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 한글교육이 46.5%로 가장 많았고, 우리문화 교육이 38.3%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영농기술교육은 9.8%로 나타남.

■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현황

<표 46> 1년 중 시행한 문화 활동

구 분	빈 도	백분율(%)
해외여행	108	40.6
국내여행	172	64.7
전시회나 연극관람	71	26.7
영화관람	108	40.6
공연참여	38	14.3
기타	15	5.6
합 계		100.0

- o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문화 활동에 대해 국내여행이 64.7%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과 영화 관람이 각각 40.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전시회나 영화 관람은 26.7%, 공연 참여는 14.3%순으로 나타남.

<표 47> 건강을 위해 하는 스포츠 활동

구 분	빈 도	백분율(%)
요가	47	19.7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등	26	10.9
수영	46	19.2
등산	45	18.8
걷기	59	24.7
기타스포츠	10	4.2
없음	6	2.5
합 계	239	100.0

- o 건강을 위해 하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 걷기 운동이 24.7%로 가장 많았고, 요가가 19.7%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수영은 19.2%, 등산은 18.8%순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복지

<표 48>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사람

구 분	빈 도	백분율(%)
이장	19	7.8
부녀회장	12	4.9
마을민 모두	37	15.2
아무도 돌보지 않음	67	27.6
기타	108	44.4
합 계	243	100.0

- o 마을내에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27.6%로 나타났고, 돌볼 경우 마을민 모두가 돌본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장은 7.8%, 부녀회장은 4.9%순으로 나타남. 그 외 방법으로 돌본다는 44.4%나 되었음.

■ 보육

<표 49>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

구 분	빈 도	백분율(%)
현재로 충분	13	5.3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함	102	41.5
보육시설을 늘려야함	66	26.8
아이들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낌	65	26.4
합 계	246	100.0

- o 농어촌 지역 육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견해로는 농번기 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가 26.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 o 아이들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26.4%나 되었음.

5) 정책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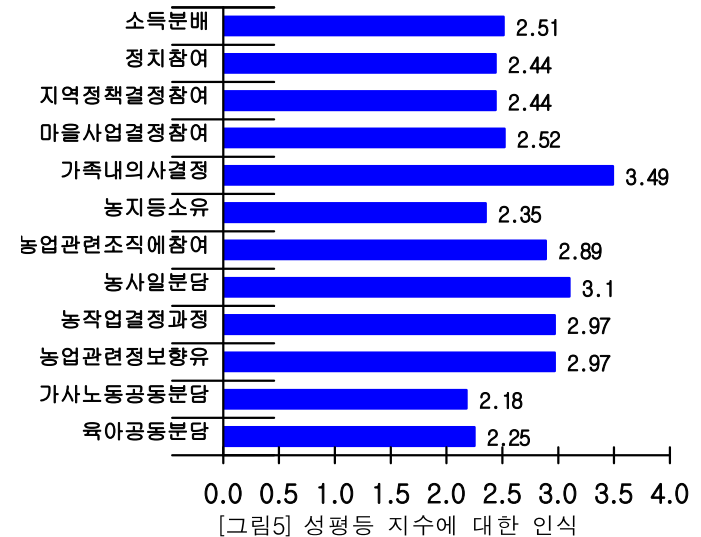
■ 성평등 지수

- 여성과 남성의 평등 지수에 대해 척도평균(3점) 이상으로 인식한 요인은 가족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뿐이었는데, 이 변인들만 약간 평등하고 지각하고 있었음. 그 중 가족내 의사결정 평등지수가 가장 높았고, 농사일 분담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 그 외 변인들은 전부 척도평균이하로 지각하여 불평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중 평등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가사노동 공동분담으로 평균 2.18로 나타남. 그리고 육아공동 부담이 2.25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고, 농지 등 소유, 정치참여, 지역정책 결정참여, 소득분배, 마을사업 결정참여, 농업관련 조직에 참여, 농작업 결정과정, 농업관련 정보향유 순으로 평등지수를 낮게 지각하였음.

<표 50>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소득분배	2.51	1.16
정치참여	2.44	1.09
지역정책 결정 참여	2.44	1.12
마을사업 결정참여	2.52	1.10
가족 내 의사결정	3.49	1.06
농지 등 소유	2.35	1.26
농업관련 조직에 참여	2.89	1.15
농사일 분담	3.10	1.12
농작업 결정과정	2.97	1.16
농업관련 정보향유	2.97	1.16
가사노동 공동분담	2.18	1.16
육아 공동분담	2.25	1.16

- 아주평등 5점, 약간평등 4점, 보통 3점, 약간불평등 2점, 매우불평등 1점 부여



■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표 51> 남녀공동 농업참여 증진

구 분	영향이크 N(%)	어느정도 영향 N(%)	별로 영향없음 N(%)
남녀공동농업참여 관련 법의 제정	162(64.0)	66(24.6)	25(9.9)
농어촌 여성의 날 제정	118(46.8)	82(32.5)	52(20.6)
각종 농업정책에 남녀공동참여 농가 우대정책	182(72.2)	59(23.4)	11(4.4)
농업관련 교육에 남녀공동참여 의무화	172(69.1)	64(25.7)	13(5.2)

- 남녀공동 농업참여 증진을 위해 정책이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각종 농업정책에 남녀공동참여 농가 우대정책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9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관련 교육에 남녀공동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94.8%로 역시 높게 나타남. 반면에 상대

적으로 낮은 하지만 남녀공동 참여 관련 법의 제정은 88.6%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하였고, 농어촌 여성의 날 제정은 응답자의 78.5%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정책개발 필요성

<표 52> 정책개발 연구소와 연구예산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필요	182	74.0
약간 필요	59	24.0
필요하지 않음	5	2.0
합 계	246	100.0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실태나 정책요구조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연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도 74%나 되었음.

■ 여성농업인센터

<표 53> 지역의 여성농업인센터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105	40.2
없다	150	57.5
모르겠다	6	2.3
합 계	261	100.0

- 지역내 여성농업인센터 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지역은 40.2%였고, 없는 지역은 57.5%였음.

<표 54>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

구 분	빈 도	백분율(%)
보육기능	36	14.2
여성농어업인 취미활동 교육지원	66	26.1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교육	135	53.4
기타	16	6.3
합 계	253	100.0

-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농어업인 취미활동 교육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가 26.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기능은 14.2%로 나타났다.

부 록 2

여성어업인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여성어업인 41명

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 어업인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질문지에 어업에 관련된 항목과 농업에 관련된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

○ 조사 방법 : 여성어업인 리더양성 워크숍 참석자 설문조사 및 전화 설문

○ 측정 항목 : 총 8개 지표, 31개 항목 측정

여성 어업인을 둘러싼 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과 여성어업인 정책관련 8개 영역(전문인력화, 여성어업인의 지위, 여성어업인 사회보장제도, 여성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에 인지도, 양성평등 인식, 농촌마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영역, 지역개발 참여 욕구,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영역)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식 정도를 선정

2.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 현황

1) 인구통계학적 현황

<표 1> 연령

구 분	빈 도	백분율(%)
50세 이하	9	22.5
51~55세	10	25.0
56~60세	15	37.5
61세 이상	6	15.0
합 계	40	100.0

- 응답자의 연령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그 중 56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들이 37.5%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이 25.0%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학력

구 분	빈 도	백분율(%)
초졸	6	15.8
중졸	15	39.5
고졸	15	39.5
대졸이상	2	5.3
합 계	38	100.0

-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졸과 중졸이 각 39.5%로 나타나, 초졸이 17.6%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평균 학력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이는 응답대상들이 농어촌 지역의 지도자급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2) 어업 및 농업현황

<표 3> 경영분야

구 분	예 N(%)	아니오 N(%)
논	15(36.6)	26(63.4)
밭	17(41.5)	24(58.5)
어선보유	26(63.4)	15(36.6)
양식장 보유	11(26.8)	30(73.2)

- 현재 본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을 경영하고 있다는 여성은 응답자의 36.6%였고, 밭은 응답자의 41.5%였으며, 어선보유는 63.4%로 나타남. 응답자의 40% 정도가 반농반어 형태임.
-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8%로 나타남.

<표 4> 소득작목

순 위	작목
1순위	감귤, 갯, 게, 굴, 김, 꽃게, 낙지, 농업, 멸치, 미역, 버, 상엽, 소라, 수산물, 실뱀장어, 양식업, 어업(2), 오징어, 잠수, 전복, 피조개(5), 해녀
2순위	고추, 굴, 농산물, 마늘(2), 바지락(2), 법인, 봉장어, 새우젓, 생새우, 성게, 조동학조, 통발, 판매, 해산물
3순위	고기, 과수원, 꽃게, 다시마, 마늘, 문어, 바지락, 배, 해삼

- 주 소득 작목이 무엇이고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 소득 작목이 농업과 어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의 여성어업인들이 농업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판매 또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5> 농어업 종사년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10년 이하	10	24.4
11~15년	2	5.4
16~20년	12	32.4
21~25년	3	8.1
26~30년	2	5.4
31년 이상	8	21.6
합 계	37	100.0

-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는 16년 이상 20년 이하 라는 응답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31년 이상된 여성도 21.6%나 되었음. 반면에 10년 이하인 여성은 24.4%에 불과함.

<표 6> 농사 참여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20%이하	8	21.6
30~40%	3	8.1
50~60%	9	24.3
70~80%	3	8.1
80%이상	14	37.8
합 계	37	100.0

- 전체 농사에서 응답자들의 참여율을 알아본 결과 80%이상을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약 70%정도가 농사의 50%이상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내외적 여건 및 여건변화

<표 7> 농어업 미래에 대한 전망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좋음	3	7.7
좋은편	16	41.0
보통	6	15.4
좋지않은편	11	28.2
전혀좋지않음	3	7.7
합 계	39	100.0

- 여성어업인의 농어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지 않은 편이 28.2%로 나타나 농어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 농어업 소득의 증가방법

구 분	매우 도움 N(%)	도움이 되는편 N(%)	보통 N(%)	도움이 안됨 N(%)	전혀 도움안됨 N(%)
농어촌관광	8(20.0)	13(32.5)	9(22.5)	5(12.5)	5(12.5)
농수산물 유통	8(21.6)	19(51.4)	3(8.1)	5(13.5)	2(5.4)
농수산물가공	16(47.1)	7(20.6)	6(17.6)	1(2.9)	4(11.8)

- 농어업의 소득증가 방법에 대해 농어촌 관광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2.5%로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함.
-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3.0%로 도움이 된다고 답함.

- 농수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여성어업인들은 농수산물 유통이 소득증가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농어촌 대내외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매우 그렇다 N(%)	그런 편이다 N(%)	보통 N(%)	그렇지 않다 N(%)	전혀 그렇지 않다 N(%)
농수산물 수입개방	12(30.8)	12(30.8)	9(23.1)	3(7.7)	3(7.7)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15(39.5)	11(28.9)	7(18.4)	3(7.9)	2(5.3)
농어촌 유통회사 설립	13(34.2)	15(39.5)	8(21.1)	2(5.3)	0(0)
전자상거래 확대	17(44.7)	3(7.9)	6(15.8)	6(15.8)	6(15.8)

- 농어촌의 대내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1.5%로 나타남.
-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은 전체응답자의 68.4%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함.
- 농어촌 유통회사 설립은 응답자의 73.7%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전자상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52.6%로 나타남.
- 여성어업인들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이 농어촌 대내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다음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등 대내적인 환경 변화가 수입개방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전문인력화

- 농업경영자나, 농가공업주체,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담당자로서의 여성어업인의 전문 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성 어업인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농업경영자로서의 전문 인력화 는 31.7%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사회돌봄서비스 담당자로 전문 인력화에 대해서는 35.1%가 높다고 응답해 농업경영자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공업의 주체로서의 전문 인력화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응답자의 18.9%였고, 농촌관광 및 체험 등의 지도자로서 전문 인력화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6.2%에 불과함.
- 따라서 향후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업,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갈 농가공 및 농촌관광 등에 여성 어업인에 대한 참여와 역할증진에 관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0> 여성어업인의 전문인력화

구 분	매우 잘됨 N(%)	잘되어 있는편 N(%)	보통 N(%)	잘되지 않음 N(%)	전혀되지 않음 N(%)
농업경영자	8(19.5)	5(12.2)	9(22.0)	12(29.3)	7(17.1)
농가공업 주체	1(2.7)	6(16.2)	8(21.6)	10(27.0)	12(32.4)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도자	4(10.8)	2(5.4)	9(24.3)	10(27.0)	12(32.4)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담당자	6(16.2)	7(18.9)	4(10.8)	6(16.2)	14(37.8)

5. 여성어업인의 지위

- 농수산업 생산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28.2%였고, 법 제도적 측면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7.7%에 불과하였으며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2.5%로 나타남.
-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10.3%였고 행정 및 사회적 조직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8.4%로 나타나 전 분야에서 여성어업인들의 자신들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 특히 법제도적 특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여성어업인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여성어업인의 지위

구 분	매우 높음 N(%)	높음 N(%)	보통 N(%)	낮음 N(%)	매우 낮음 N(%)
농수산업 생산	6(15.4)	5(12.8)	8(20.5)	17(43.6)	3(7.7)
법제도적인 측면	2(5.1)	1(2.6)	2(5.1)	22(56.4)	12(30.8)
지역사회구성원	4(10.0)	5(12.5)	8(20.0)	19(47.5)	4(10.0)
문화적인 측면	3(7.7)	1(2.6)	7(17.9)	16(41.0)	12(30.8)
행정 및 사회적 조직	3(7.9)	4(10.5)	8(21.1)	15(39.5)	8(21.1)

6. 여성어업인 사회보장제도

- 여성어업인의 연금 가입은 전체 응답자의 35.0%만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5.0%가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농어업인 연금 가입

구 분	빈 도	백분율(%)
그렇다	14	35.0
아니다	26	65.0
합 계	40	100.0

- 여성어업인이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절차를 몰라서라는 의견이 22.6%, 불필요해서가 16.1%, 돈이 없어서가 22.6%로 나타났음.
- 응답자들 중 연금 가입절차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2.6%라는 점은 향후 여성어업인의 연금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

<표 13> 농어업 연금 가입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가입절차를 몰라서	7	22.6
불필요해서	5	16.1
돈이 없어서	7	22.6
기타	12	38.7
합 계	31	100.0

- 재해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2%가 가입하고 있다고 답함.

<표 14> 농어업인 재해보험 가입

구 분	빈 도	백분율(%)
그렇다	27	69.2
아니다	12	30.8
합 계	39	100.0

7. 여성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

<표 15>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인지 정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알고있다	16	41.0
모른다	23	59.0
합 계	39	100.0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1.0%만이 알고 있다고 답함.
- 특히 응답한 여성어업인들의 59.0%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어서 정책관련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농어업과 지역 내에서 전국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여성 어업인들의 정책체감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16> 여성농어업인 관련정책 인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만족	1	2.8
만족	6	16.7
보통	8	22.2
만족하지 않음	10	27.8
전혀 만족하지 않음	11	30.6
합 계	36	100.0

-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다가 27.8%로 나타남. 만족한다는 의견은 19.4%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인지 정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알고 있다	8	20.0
모른다	32	80.0
합 계	40	100.0

-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응답자의 20.0%만이 알고 있다고 답함.

<표 18>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련법 인지 정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알고 있다	8	19.5
모른다	33	80.5
합 계	41	100.0

-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련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알고 있다는 의견이 19.5%에 불과함.

8. 양성평등 인식

<표 19> 차별 받은 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24	60.0
없다	16	40.0
합 계	40	100.0

- 현재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 응답자의 60.0%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차별을 경험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 차별경험 영역

구 분	빈 도	백분율(%)
정책	7	21.2
소득	5	15.2
일상생활	9	27.3
농어업자금신청	4	12.1
후계자육성	7	21.2
기타	1	3.0
합 계	33	100.0

- 차별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후계자 육성에서의 차별경험은 21.2%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영역 만이 아니라 농어업 생산 및 정책 과정에서 차별경험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표 21> 양성평등 교육 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16	41.0
없다	23	59.0
합 계	39	100.0

-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41.0%가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함.

9. 농촌마을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영역

<표 22> 다문화가족 유무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21	52.5
없다	19	47.5
합 계	40	100.0

-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이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응답자의 52.5%정도가 살고 있다고 답함.

<표 23> 다문화가족 정책의 우선적 해결 문제

구 분	빈 도	백분율(%)
한국생활 적응교육	14	40.0
가족관계 향상교육	8	22.9
한국어 교육	4	11.4
양성평등 교육	3	8.6
자녀학습도우미	2	5.7
기타	4	11.4
합 계	32	100.0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한국생활 적응교육이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관계 향상교육이 22.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은 11.4%로 나타남.

10. 지역개발 참여욕구

<표 24> 지역개발 참여 영역

구 분	예 N(%)	아니오 N(%)
문화관광	23(56.1)	18(43.9)
체험마을	20(48.8)	21(51.2)
농수산물가공판매	31(75.6)	10(24.4)
영어법인(회사포함)	11(26.8)	30(73.2)

- 지역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영역에 참여하길 원하는가에 대해 복수응답을 한 결과 문화관광 영역은 응답자의 56.1%가 참여를 원한다고 응답했고, 체험마을은 48.8%, 농수산물 가공판매는 응답자의 75.6%, 영어법인(회사법인)은 응답자의 26.8%가 참여하길 원한다고 답함.

<표 25> 여성어업인의 지역사회 비중

구 분	매우 높음 N(%)	높음 N(%)	보통 N(%)	낮음 N(%)	매우 낮음 N(%)
정치참여	3(7.7)	3(7.7)	8(20.5)	11(28.2)	14(35.9)
각종위원회 참여	4(10.8)	3(8.1)	10(27.0)	11(29.7)	9(24.3)
지역개발참여	5(12.2)	4(9.8)	11(26.8)	12(29.3)	9(22.0)

- 지역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비중이 높다는 의견은 15.4%인데 반해 정치참여가 낮다는 응답이 64.1%로 정치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종위원회 참여는 18.9%만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54.0%가 낮다고 응답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중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음.
- 지역개발참여는 22.0%가 비중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51.3%는 낮다고 응답해 정치참여, 각종위원회참여, 지역개발참여 등 모든 요인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낮은편이라는 인식이 대부분.

<표 26> 수협조합원 가입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예	30	73.2
아니오	11	26.8
합 계	41	100.0

- 수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가입되어 있다고 답함.

<표 27> 수협조합원 가입시 직책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조합원	24	64.9
대의원	0	0
기타	13	35.1
합 계	37	100.0

- 수협조합원 가입시 직책에 대해서는 평조합원이 64.9%로 가장 많이 차지함.
- 대의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여성은 한명도 없었음.

<표 28> 어촌계 가입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예	28	71.8
아니오	11	28.2
합 계	39	100.0

- 어촌계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다는 답한 여성이 71.8%임.

<표 29> 마을임원 경험

구 분	예 N(%)	아니오 N(%)
어촌계장	6(14.6)	35(85.4)
부녀회장	29(70.7)	12(29.3)
마을지도자	6(14.6)	35(85.4)
이장	5(12.2)	36(87.8)

- 어촌계장과 부녀회장, 마을지도자, 이장과 같은 마을지도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어촌계장은 응답자의 14.6%가 부녀회장은 70.7%가, 마을지도자는 14.6%가, 이장은 12.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들만의 대표로서 임원을 경험은 높지만 남녀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에서의 임원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0> 어업후계자 선정 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5	12.5
없다	35	87.5
합 계	40	100.0

- 본인이 어업후계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5%만이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답함.

11.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영역

<표 31> 여성어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도

구 분	매우 필요 N(%)	필요 N(%)	보통 N(%)	필요하지 않음 N(%)	전혀 필요하지 않음 N(%)
소득향상	29(76.3)	4(10.5)	5(13.2)	0(0)	0(0)
의료서비스향상	26(72.2)	5(13.9)	3(8.3)	2(5.6)	0(0)
학교유치	14(42.4)	6(18.2)	7(21.2)	3(9.1)	3(9.1)
공장유치	10(31.3)	7(21.9)	7(21.9)	6(14.6)	2(4.9)
문화서비스	26(74.3)	6(17.1)	3(7.3)	0(0)	0(0)
복지서비스확대	29(80.6)	4(11.1)	3(8.3)	0(0)	0(0)

- 여성어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6개 항목을 제시하여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는 문화서비스 욕구로 응답자의 9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소득향상은 86.8%, 의료서비스향상은 86.1%, 학교유치는 60.6%, 공장유치는 53.1%로 여성어업인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한 조건으로 복지, 문화, 소득, 의료, 학교, 공장유치 순으로 응답함.

부 록 3

여성농업인 센터 수요조사

[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전국 여성농업인 센터 33개 중 22곳
- 조사 방법 : E-mail 및 전화조사
- 측정 항목 : 총 13개 지표 55개 항목 측정

시설규모, 건물유형, 임대기관유형, 센터현황,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주요업무, 상담관련 사항, 부정기 사업에 대한 의견, 센터관련현황, 업무관련현황, 센터의 개선방향, 여성농어업인 센터의 전망, 센터의 이용 등.

[조사 결과]

1. 시설규모

<표 1> 시설규모

지 역	면적(M ²)							임 대 료
	보육실	사무실	교육실	공부방	놀이터	기타	합계	
강원도	58.9	9.0	-	25.1	-	6.7	99.6	2,950,000
경기도	69.9	14.0	27.0	29.1	-	31.0	170.0	1,075,000
충청북도	40.0	14.5	77.0	-	-	54.0	186.0	-
충청남도	34.6	5.9	36.0	-	-	7.6	163.2	500,000
전라북도	78.0	32.7	60.0	47.7	178.0	26.0	426.0	2,050,000
전라남도	110.0	16.0	60.0	43.0	-	-	229.0	4,650,000
경상남도	127.3	27.1	29.3	41.3	785.4	180.7	1216.1	16,033,333
제주도	89.6	8.8	13.3	38.4	55.0	68.1	273.3	3,200,000
평 균	86.6	16.0	43.2	37.4	339.4	53.4	345.4	4,351,190

*경상북도는 응답한 센터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평균은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한 개입

- 센터의 시설규모는 평균 345.4M²로 나타났고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상남도로 1216.1M²로 나타났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강원도로 99.6M²였음.
- 보육실 규모는 평균 86.0M²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127.3M²로 나타남. 사무실은 평균 16M²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32.7M²임. 교육실은 평균 43.2M²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77.0M²로 나타남. 공부방의 평균은 37.4M²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47.7M²로 나타남. 놀이터의 평균은 339.4M²로 나타났고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785.4M²임.
- 연간임대료는 전체 평균 4백 3십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임대료가 가장 적은 개는 충청북도로 연간임대료가 없었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개는 경상남도로 약 천 육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음.

2. 건물유형

<표 2> 건물유형

구 분	빈 도	백분율(%)
무상	6	27.3
유상	11	50.0
자가소유	5	22.7
합 계	22	100.0

- 센터의 건물유형은 유상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무상이 6개, 자가소유가 5개로 나타남.

3. 임대기관유형

<표 3> 임대기관유형

구 분	빈 도	백분율(%)
개인	2	9.1
교육청	1	4.5
군	6	27.3
농협	1	4.5
면여성농민회	1	4.5
무료임대	1	4.5
영농조합법인	1	4.5
없음	9	40.9
합 계	35	100.0

- 임대기관의 유형으로는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센터가 9개로 가장 많았고, 군 소유인 센터는 6개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개인이 소유한 센터는 2개 그 외에는 각각 교육청, 농협, 면 여성농민회, 무료임대, 영농조합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었음.

4. 센터현황

<표 4> 센터인근 보육시설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13	61.9
없음	8	38.1
합 계	21	100.0

-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유무에 대해 13개가 있다고 답하였음

<표 5> 센터인근 학원시설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8	38.1
없음	13	61.9
합 계	21	100.0

- 인근지역에 학원시설 유무에 대해 8개가 있다고 답하였음.

<표 6> 국고지원시기

구 분	빈 도	백분율(%)
1,2월	13	61.9
3,4월	6	28.6
5월이후	2	9.5
합 계	21	100.0

- 국고지원시기에 대해서는 1,2월이 전체 13개로 가장 많았고, 3,4월이라는 응답은 6개, 5월 이후 라는 답은 2개로 나타났다.

<표 7> 현 예산규모

구 분	빈 도	백분율(%)
많음	0	0
적당	0	0
부족	21	100.0
합 계	21	100.0

- 응답한 모든 센터가 부족하다고 답하였음.

<표 8> 예산지원어려움

구 분	빈 도	백분율(%)
예산 적음	15	71.4
지급시기 늦음	5	23.8
기타	1	4.8
합 계	21	100.0

- 예산 지원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센터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지급시기가 늦어서 어렵다는 센터가 5개로 나타난다.

<표 9> 연봉제도 적용

구 분	빈 도	백분율(%)
적용	5	22.7
비적용	17	77.3
합 계	22	100.0

- 연봉제도 적용 우무에 대해서는 17개의 센터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고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 센터는 5개에 불과함.

<표 10> 센터소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개인	3	13.6
단체	1	4.5
법인	15	68.2
기타	3	13.6
합 계	22	100.0

- 센터를 소유에 대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센터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개인이 3개, 단체가 1개로 나타났다.

<표 11> 센터후원금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6	28.6
없음	15	71.4
합 계	21	100.0

- 센터 후원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한 센터가 15개였고 있다고 답한 센터는 6개에 불과하였음.

5.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표 12> 시행하는 사업

구 분	빈도	비율
여성농민교육	22	100.0
여성농민상담	22	100.0
보육사업	22	100.0
공부방사업	22	100.0
도·농교류사업	18	81.2

* 참여하고 있다는 빈도와 비율로만 분석

-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여성농민교육, 여성농민상

담, 보육사업, 공부방 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 도, 농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답한 센터는 18개, 하지 않는다고 답한 센터는 4개였음.

<표 13> 보육사업 인증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증 받음	9	42.9
인증 준비 중	2	9.5
인증 못 받음	10	47.6
합 계	21	100.0

- 보육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인증 못 받았다고 답한 센터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인증 받았다고 답한 센터가 9개였으며, 인증 준비 중인 센터는 2개로 나타났다.

<표 14> 공부방사업 운영

구 분	빈 도	백분율(%)
지역아동센터 별도사업 지원	4	19.0
센터자체 사업	17	81.0
합 계	21	100.0

- 공부방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센터의 17개가 센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4개는 지역아동센터 별도사업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표 15> 4대 필수 사업에 대한 생각

구 분	빈 도	백분율(%)
모두필수사업으로 해야함	3	13.6
4가지영역 중 지역설정에 맞게 센터자율적 운영	19	86.4
합 계	22	100.0

- 4대 필수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19개 센터가 4가지 영역 중

지역 설정에 맞게 센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답하였고

- 3개 센터가 모두 필수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표 16> 필수사업으로 적당한 사업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5순위 N(%)	6순위 N(%)
여성농민교육	15(68.2)	2(9.1)	2(10.0)	2(10.5)	1(5.6)	0(0)
여성농민상담	2(9.1)	10(45.5)	3(15.0)	2(10.5)	3(16.7)	1(5.9)
보육사업	4(18.2)	4(18.2)	3(15.0)	1(5.3)	3(16.7)	3(17.6)
공부방사업	1(4.5)	2(9.1)	3(15.0)	6(31.6)	4(22.2)	3(17.6)
도·농교류사업	0(0)	2(9.1)	4(20.0)	2(10.5)	4(22.2)	7(41.2)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	0(0)	2(9.1)	5(25.0)	6(31.6)	3(16.7)	3(17.6)

- 필수 사업 종류를 줄여야 한다면 필수 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해 보았는데, 1순위에서는 15개의 센터가 여성농민교육이라고 가장 많은 답을 하였고,
- 2순위에서는 10개의 센터가 여성농민상담이라고 가장 많은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3순위는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표 17> 필수사업 운영 어려움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시설여건 부족	9(40.9)	6(27.3)	4(19.0)	3(16.7)
업무담당인력 부족	5(22.7)	5(22.7)	8(38.1)	3(16.7)
예산 부족	8(36.4)	9(40.9)	5(23.8)	12(66.7)
표준메뉴얼 없음	0(0)	2(9.1)	4(19.0)	0(0)
기타	0(0)	0(0)	0(0)	0(0)

- 센터 운영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긴 결과는 우선 1순위에서는 시설 여건 부족이라는 의견이 9개 센터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곳으로 나타났고,

- 2순위는 예산부족이 9개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3순위에서는 업무담당 인력 부족이 8개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6. 주요업무

<표 18> 대표가 하고 있는 업무

구 분	빈 도	비율
대표	22	100.0
운전	8	36.4
사무원	10	45.5
보육교사	3	13.6
공부방교사	1	4.5
상담사	19	86.4
기타	5	22.7

* 참여하고 있다는 빈도와 비율로만 분석

- 현재 대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는 센터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22명 모두가 답하였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8개, 사무원을 겸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10개,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3개로 나타남. 그리고 상담사를 겸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19개나 되었음.

7. 상담관련

<표 19> 센터소재 지역에 전문 상담기관 유무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1	4.5
없음	21	95.5
합 계	22	100.0

- 센터 소재 지역에 전문 상담기관이 있는 곳은 1군데 불과함.

<표 20> 센터의 상담업무담당자

구 분	빈 도	백분율(%)
대표겸직	18	81.8
기타직원겸직	3	13.6
전문상담사 별도 있음	1	4.5
합 계	22	100.0

- 센터의 상담업무는 전문상담사가 있는 곳은 1군데에 불과. 18개 기관은 대표가 겸직하고 있음.

<표 21> 센터 내 상담공간 유무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4	18.2
없음	18	81.8
합 계	22	100.0

- 센터 내 상담공간이 있는가에 대해 센터의 18개가 없다고 답하였고 있다고 답한 센터는 4개에 불과함.

<표 22> 전문상담사업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필요함	19	90.5
필요 없음	2	9.5
합 계	21	100.0

- 전문상담 사업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19개 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2개 센터가 필요없다고 답하였음.

<표 23> 상담사업의 활성화

구 분	빈 도	백분율(%)
체계적 전문상담사 교육	8	36.4
상담소 공간 확보	8	36.4
적당한 예산 확보	5	22.7
기타	1	4.5
합 계	22	100.0

-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8개 센터는 체계적 전문상담사 교육이라고 답하였고, 8개 센터는 상담소 공간 확보라고 답하였으며, 5개 센터는 적당한 예산확보라고 답하였음.

8. 부정기 사업

<표 24> 현재 실시 중인 부정기 사업의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5순위 N(%)	6순위 N(%)	7순위 N(%)
취미교양	9(40.9)	4(18.2)	5(22.7)	4(19.0)	3(15.0)	0(0)	0(0)
지도력개발	4(18.2)	4(18.2)	6(27.3)	4(19.0)	0(0)	0(0)	0(0)
상담교육	5(22.7)	3(13.6)	1(4.5)	3(14.3)	2(10.0)	5(31.3)	1(7.7)
영농교육	1(4.5)	2(9.1)	1(4.5)	2(9.5)	4(20.0)	3(18.8)	5(38.5)
복지사업	3(13.6)	5(22.7)	1(4.5)	2(9.5)	3(15.0)	2(12.5)	1(7.7)
초청강연회	0(0)	0(0)	3(13.6)	3(14.3)	4(20.0)	2(12.5)	4(30.8)
탐방 및 견학	0(0)	4(18.2)	4(18.2)	3(14.3)	4(20.0)	4(25.0)	1(7.7)
기타	0(0)	0(0)	1(4.5)	0(0)	0(0)	0(0)	0(0)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정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는 9개 센터가 취미교양이라고 가장 높게 답하였고, 2순위는 5개 센터가 복지사업이라고 응답함. 3순위는 6개 센터가 지도력 개발이라고 응답함.

<표 25> 부정기 사업의 중요도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5순위 N(%)	6순위 N(%)	7순위 N(%)
취미교양	7(36.8)	2(10.5)	2(10.5)	3(16.7)	3(16.7)	1(6.3)	0(0)
지도력개발	6(31.6)	5(26.3)	3(15.8)	2(11.1)	1(5.6)	0(0)	0(0)
상담교육	5(26.3)	2(10.5)	3(15.8)	2(11.1)	2(11.1)	4(25.0)	0(0)
영농교육	0(0)	3(13.6)	3(15.8)	1(5.6)	3(16.7)	0(0)	7(46.7)
복지사업	1(5.3)	3(13.6)	4(21.1)	5(27.8)	3(16.7)	2(12.5)	0(0)
초청강연회	0(0)	0(0)	2(10.5)	3(16.7)	1(5.6)	3(18.8)	7(46.7)
탐방 및 견학	0(0)	4(18.2)	2(10.5)	2(11.1)	4(22.2)	5(31.3)	1(6.7)
기타	0(0)	0(0)	0(0)	0(0)	1(5.6)	1(6.3)	0(0)

- 부정기 사업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1순위로 7개 센터가 취미교양이라고 답하였고, 2순위에서는 5개 센터가 지도력 개발이라고 답함. 3순위는 모든 항목에서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음.

- 부정기 사업의 수행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13개 센터가 예산 부족이라고 답하였고, 6개 센터는 적절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으며, 3개 센터는 교육 참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답하였음.

<표 26> 부정기사업의 수행시 어려움

구 분	빈 도	백분율(%)
교육 참여자 찾기 어려움	3	13.6
예산부족	13	59.1
적절한 강사 구하기 어려움	6	27.3
합 계	21	100.0

9. 센터관련

- 센터 설립연도에 대해 2002년도에 9개 센터가 설립되어 가장 많았고, 2004년도에 4개 센터, 2005년도에 3개 센터가 설립되었음. 2005년 이후로는 센터가 거의 증가되지 않았음.

<표 27> 센터 설립연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2001	2	9.5
2002	9	42.9
2004	4	19.0
2005	3	14.3
2006	2	9.5
2010	1	4.8
합 계	21	100.0

-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해 11개 센터가 협조를 잘해준다고 답하였고, 11개 센터는 보통이라고 답하였음.

<표 28>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

구 분	빈 도	백분율(%)
협조를 잘해줌	11	50.0
보통	11	50.0
합 계	22	100.0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센터는 4개였고, 비협조적 태도가 어렵다가 2곳이었음. 지나친 업무 감독 때문에 어렵다는 곳은 한곳도 없었음. 낮은 국고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곳은 9개였고, 자주 바뀌는 담당자 때문에 어렵다고 답한 곳은 8개 있었음.

<표 29>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어려움

구 분	빈도	비율
어려움 없음	4	18.2
비협조적 태도	2	9.1
지나친 업무 감독	0	0
낮은 국고보조금 지급	9	40.9
자주 바뀌는 담당자	8	36.4
기타	2	9.1

* 참여하고 있다는 빈도와 비율로만 분석

- 센터 사업의 대상에 대해 22개 센터 모두 여성농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18개,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20개 있었음.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18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19개였고,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21개 있었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4개 센터였음.

<표 30> 센터사업의 대상

구 분	빈도	비율
여성농민	22	100.0
아동	22	100.0
청소년	18	81.8
농민	20	90.9
가족	18	81.8
노인	19	86.4
국제결혼여성	21	95.5
장애인	4)	18.2

- 농촌에서 센터 성격에 대한 의견으로는 13개 센터가 농촌문화 복지센터라고 답하였고, 2개 센터가 여성농민 교육복지기관, 2개 센터가 농촌 가족지원센터라고 답하였음.

<표 31> 농촌에서 센터 성격

구 분	빈 도	백분율(%)
여성농민교육복지기관	2	10.0
농촌가족지원센터	2	10.0
농촌문화복지센터	13	65.0
기타	3	15.0
합 계	20	100.0

10. 업무관련

-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16개 센터가 없다고 답하였고, 5개 센터가 있다고 답함.

<표 32> 업무교육 경험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음	5	23.8
없음	16	76.2
합 계	21	100.0

- 업무 교육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2회를 받았다가 4개 센터였고, 3회를 받았다가 1개 센터였음.

<표 33> 업무교육 경험 횟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2회	4	80.0
3회	1	20.0
합 계	5	100.0

- 업무 교육 필요성에 대해 22개 센터 모두가 필요있다고 답하였음

<표 34> 업무교육 필요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필요있음	22	100.0
필요없음	0	0
합 계	22	100.0

- 필요한 업무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1순위로 9개 센터가 교육사업 운영 및 개발교육이라고 답하였고, 2순위로 8개 센터들이 사업영역별 보수교육과 교육사업 운영 및 개발교육이라고 답하였음.

<표 35> 필요한 업무교육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상담교육	2(9.1)	4(19.0)	6(33.3)	5(29.4)
사업영역별 보수교육	5(22.7)	8(38.1)	4(22.2)	2(11.8)
회계교육	6(27.3)	1(4.8)	6(33.3)	8(47.1)
교육사업 운영 및 개발교육	9(40.9)	8(38.1)	2(11.1)	1(5.9)
기타	0(0)	0(0)	0(0)	1(5.9)

- 센터 업무의 농촌지역 기여도에 대해 18개 센터가 기여도가 높다고 답하였음.

<표 36> 센터업무의 농촌지역 기여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기여도 높음	18	85.7
보통	3	14.3
합 계	21	100.0

- 센터의 개선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것에 대해 1순위로 8개 센터들이 각각 적당한 예산과 신증축을 통한 시설개선이라고 답하였음. 2순위로는 4개 센터가 적당한 예산이라고 가장

많은 답을 하였음. 3순위로는 6개 센터가 부정기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함.

<표 37> 센터의 개선과제

구 분	1순위 N(%)	2순위 N(%)	3순위 N(%)	4순위 N(%)	5순위 N(%)	6순위 N(%)
적당한 예산	8(38.1)	4(40.0)	0(0)	1(12.5)	0(0)	0(0)
신 증축 통한 시설개선	8(38.1)	3(30.0)	1(11.1)	0(0)	0(0)	0(0)
센터법인화	1(4.8)	0(0)	1(11.1)	1(12.5)	3(60.0)	0(0)
부정기사업 프로그램개발	2(9.5)	0(0)	6(66.7)	1(12.5)	0(0)	1(25.0)
직원들의 전문화된 교육	1(4.8)	3(30.0)	1(11.1)	5(62.5)	1(20.0)	0(0)
센터기능전환	1(4.8)	0(0)	0(0)	0(0)	1(20.0)	3(75.0)

11. 센터의 개선 방향

- 센터 지원예산에서 가장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12개 센터가 인건비라고 답하였고, 6개 센터가 운영비, 2개 센터들이 각각 시설비와 프로그램 사업비에 답함.

<표 38> 센터 지원예산 중 부족한 항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운영비	6	27.3
인건비	12	54.5
시설비	2	9.1
프로그램사업비	2	9.1
합 계	22	100.0

-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13개 센터가 신축이라고 답하였고, 5개 센터가 개축, 3개 센터가 편의시설이라고 답함.

<표 39>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역

구 분	빈 도	백분율(%)
신축	13	61.9
개축	5	23.8
편의시설	3	14.3
합 계	21	100.0

- 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8개 센터가 사회적 일자리 강화사업이라고 가장 높은 답을 하였고, 7개 센터가 농어촌 여성노인 지원 사업이라고 답하였으며, 2개 센터가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이라고 답하였음.

<표 40> 센터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업

구 분	빈 도	백분율(%)
사회적일자리 강화사업	8	40.0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	2	10.0
농어촌 여성노인 지원사업	7	35.0
기타	3	15.0
합 계	20	100.0

- 직원 채용관련해서 어려움에 대해 12개 센터가 적절한 사람이 찾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5개 센터가 이직율이 높다고 답하였으며, 2개 센터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음.

<표 41> 직원채용 관련 어려움

구 분	빈 도	백분율(%)
이직율 높음	5	25.0
전문성 부족	2	10.0
적절한 사람 찾기 어려움	12	60.0
기타	1	5.0
합 계	20	100.0

- 적당한 예산지원방법에 대해 15개 센터가 사업별 예산을 책정하여 규모별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표 42> 적당한 예산지원방법

구 분	빈 도	백분율(%)
사업별 예산 책정하여 규모별 차등지원	15	71.4
예산심사 통한 차등지원	1	4.8
실적심사 통한 차등지원	1	4.8
기타	4	19.0
합 계	21	100.0

- 센터 법인화에 대해 18개 센터는 법인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답하였고 3개 센터는 현재 추진중이라고 답하였음.

<표 43> 센터법인화

구 분	빈 도	백분율(%)
현재추진중	3	14.3
법인구성완료	18	85.7
합 계	21	100.0

- 부정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9개 센터가 센터별로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6개 센터는 각 센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6개 센터는 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표 44> 부정기사업 프로그램개발방법

구 분	빈 도	백분율(%)
각 센터가 알아서 해야함	6	27.3
센터별 정기적 공유	9	40.9
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6	27.3
기타	1	4.5
합 계	22	100.0

-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교육에 대해서는 11개 센터가 관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7개 센터는 센터별로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2개 센터는 각 센터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답하였음.

<표 45> 직원 전문적인 업무교육

구 분	빈 도	백분율(%)
각 센터가 알아서 해야함	2	9.5
센터별 정기적 공유	7	33.3
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11	52.4
기타	1	4.8
합 계	21	100.0

12. 여성농어업인 센터의 전망

- 여성농어업인 센터에 대한 전망으로는 11개 센터가 운영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5개 센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답하였으며, 4개 센터는 현재와 다를바 없을것이라고 답하였음.

<표 46> 여성농어업인 센터 전망

구 분	빈 도	백분율(%)
운영여건 개선	11	52.4
현재와 다를 바 없음	4	19.0
미래 불확실	5	23.8
잘 모르겠음	1	4.8
합 계	21	100.0

-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개 센터가 운영이 힘들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답하였음.

<표 47> 미래불확실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	1	20.0
운영이 힘들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자신없음	4	80.0
합 계	5	100.0

<표 48> 운영상 어려움 해결 방법

구 분	빈 도	백분율(%)
농림부 담당자와 상담	1	4.8
시군담당자와 상담	1	4.8
인근센터와 상담	2	9.5
센터협의회와 상담	7	33.3
알아서 해결	10	47.6
합 계	21	100.0

-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0개 센터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7개 센터는 센터 협의회와 상담한다고 답하였음.

<표 49> 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안

구 분	빈 도	백분율(%)
센터의 법인화	1	4.8
건물신축	3	14.3
전문인력육성	4	19.0
체계적인교육과 지도감독	1	4.8
현실적 예산확보	12	57.1
합 계	21	100.0

-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개 센터가 현실적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4개 센터가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3개 센터는 건물신축이라고 답하였음.

13. 센터의 운영 전망

<표 50> 향후 센터 운영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꼭 운영하겠음	11	57.9
지원없다면 하지 않겠음	4	21.1
잘모르겠음	4	21.1
합 계	19	100.0

- 향후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1개 센터가 꼭 운영하겠다고 답하였고, 4개 센터는 지원이 없다면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음.

<표 51> 여성농어업인센터 하게 된 배경

구 분	빈 도	백분율(%)
개인적 필요에 의해	1	5.0
소속한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3	15.0
보육이나 공부방 사업 때문에	2	10.0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일환	12	60.0
기타	2	10.0
합 계	21	100.0

- 여성농어업인 센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12개 센터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환이라고 답하였고, 3개 센터는 소속한 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했으며 2개 센터는 보육이나 공부방 사업 때문에 했다고 답하였음.

<표 52> 센터의 최대 장점

구 분	빈 도	백분율(%)
이용자들의 거리적 인접성	3	15.0
농촌지역여성농민관련 프로그램 제공	13	65.0
아동보육의 해결	4	20.0
합 계	20	100.0

- 센터의 최대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13개 센터가 농촌지역 여성 농민관련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답하였고, 4개 센터는 아동보육 해결이라고 답하였음. 그리고 3개 센터는 이용자들의 거리적 인접성이라고 답하였음.

<표 53> 센터의 위치

구 분	빈 도	백분율(%)
군소재지	2	10.5
면소재지	12	63.2
마을내	5	26.3
합 계	19	100.0

- 센터의 위치에 대해 12개 센터는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었고, 5개 센터는 마을내에, 2개 센터는 군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표 54> 센터이용대상자의 직업비율(농어업)

구 분	빈 도	백분율(%)
40~60%	8	40.0
61~80%	5	25.0
81~100%	7	35.0
합 계	20	100.0

- 농어업인이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에 대해 8개 센터가 농어업인이 40~6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7개 센터는 80%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5개 센터는 61~80%를 이용하고 있었음.

<표 55> 센터이용대상자의 직업비율(비농어업)

구 분	빈 도	백분율(%)
0~20%	9	47.4
21~40%	7	36.8
41~60%	3	15.8
합 계	19	100.0

- 비 농어업인의 센터 이용률은 9개 센터는 비 농업인이 20%이하를 차지하였음. 7개 센터는 21~40%의 비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었고, 3개 센터는 41~6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센터의 직원(정규직)

구 분	빈 도	백분율(%)
0~3명	4	20.0
3~6명	10	50.0
6~9명	4	20.0
10명 이상	2	10.0
합 계	20	100.0

- 센터의 정규직 구성원은 10개 센터가 3~6명 정도 차지하였고, 4개 센터는 6~9명, 4개 센터는 3명 이하로 나타남. 10명 이상인 경우는 2개 센터에 불과하였음.

<표 57> 센터의 직원(비정규직)

구 분	빈 도	백분율(%)
0~3명	15	75.0
3~6명	5	25.0
합 계	20	100.0

- 반면에 비 정규직 지원의 구성원은 15개 센터가 3명 이하로 나타났고 5개 센터가 3~6명으로 나타남.

부 록 4

지자체 년차별 사업결과 분석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1)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확대	○ 4개위원회 - 농정심의 23% - 기금심의 13.2% - 농특위 27.2% - 품질관리 14.2%	2006년과 같음 - 농특위 위원의 경우 3명감소 - 품질관리 없음	2007년과 같음	2008년과 같음
	2) 여성농어업인에 대한포상	○ 포상인원: 33명	○ 사업량: 53명	○ 사업량: 68명	○ 사업량: 63명
	3)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향상, 대의원, 임원확대	○ 여성 조합원 23,638명 ○ 여성대의원 738명 ○ 여성임원 35명	○ 여성 조합원 24,818명 ○ 여성대의원 818명 ○ 여성임원 31명	-	-
	4)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없음	○ 사업량: 3개소 ○ 사업비:	○ 사업량: 8개소 - 8개소 (국비 6개소, 자체 2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 - 8개소 (국비 6개소, 자체 2개소)
	5)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 경주의식고취	○ 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 부부연수회 86명 ○ 전통문화탐방 38명 ○ 사회적응지원 및 복지욕구실태조사 (12월) ○ 정책간담회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3개소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3개소	-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추진 72명 230가정 아동양육지도 (97명 388가정) ○ 이웃사촌결연 - 결연식: 15시군 - 자조모임: 19팀 - 봉사단운영: 119가족 302명
	6) 여성농어업인하마음축제	○ 참여인원: 1,147명	○ 2,924명	○ 1,028명	○ 2,300명
	7)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적응지원	○ 46가구 976회 ○ 출산도우미 (산전, 산후) 16가구	○ 59가구 ○ 출산도우미 (산전, 산후) 17가구	-	-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어업인 전문력화	1) 창업농 후계농경영인육성	○ 창업농선정 65명	○ 창업농 59명, 신규농 25명	○ 창업농 59명, 신규농 25명	○ 창업농 48명, 신규농 27명
	2)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 85명	○ 사업량: 104명	○ 사업량: 103명	-
	3) 후계농업경영인농어민신문구독	○ 6,163명	○ 사업량: 6,143명	○ 사업량: 6,002명	○ 사업량: 5,923명
	4) 여성농어업인창업활동지원	○ 사업량: 4개소 (국1, 도3)	○ 사업규모: 2사업	○ 사업규모: 2사업	○ 농촌여성창업활동 : 9개소 ○ 전통식품음식농가육성: 4개소 ○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3개소
	5) 여성농어업인전문교육추진	○ 교육대상: 20,770명/년 (104%)	○ 교육인원: 22,492명 (113%)	○ 교육인원: 21,227명 (106%)	○ 핵심지도자교육: 3과정 122명 ○ 소비자농촌생활교육: 1,141명 ○ 농촌여성교육: 19,510명
	6)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운영	○ 사업량: 1개소 (강릉)	○ 교육규모: 3과정 24과정, 800명	○ 교육규모: 20과정, 700명	-
	7) 여성농어업인전문교육강화	○ 교육대상: 여성농어업인 446명	○ 영농기술혁신교육: 9회, 71명 ○ 정보화교육: 9회, 85명 ○ 농기계운전교육: 7회, 60명	○ 영농기술혁신교육: 21회, 188명 ○ 농업인정보화교육: 10회, 126명 ○ 여성농기계교육: 8회, 69명	○ 여성농기계운전반 2기 50명
	8) 여성농어업인리더십향상교육	○ 교육대상: 여성농어업인 500명	○ 교육대상 354명	-	-
	9) 이주여성농어업인지원사업	-	-	-	○ 86쌍 지원
여성농어업인의복지증진	1)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 사업량: 1,787명	○ 사업량: 2,226명	○ 사업량: 4,576명	○ 사업량: 4,576명
	2) 여성농어업인일손돌기지원	○ 사업량: 2,265명	○ 사업량: 1,651명	-	-
	3)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 사업량: 6,437명	○ 사업량: 6,188명	○ 사업량: 5,682명	○ 사업량: 5,750명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4)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량:261명	○사업량:327명	○사업량:321농가	○사업량:4,576명
	5) 자영농과 생 급 식 비 지원	○사업량:348명	○ 364명 1	○ 369명	○ 370명
	6) 여성농업인센터의 효율적운영	○ 05년과 동일 (3개소)	○ 05년과 동일 (3개소)	○ 05년과 동일 (3개소)	○ 05년과 동일 (3개소)
	7)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	○ 30명	○ 22명	○ 26명	○ 31명
	8) 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지원	○사업량:35,320세대	○지원실적:34,824세대	○지원실적:34,021세대	○지원실적:34,021세대
	9) 농어촌지역응급의료인프라확충	○정 보 센 터 운영:949백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1,020백만원 ○농어촌응급실지원:393백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1,316백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11개소, ○농어촌응급실지원:5개소, 340백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2개소 ○응급의료기관 11개소 ○농어촌응급실지원 5개소 4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2개소 ○응급의료기관 8개소 ○농어촌응급실지원 6개소
	1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6건	○시설개선:17개소 ○장비보강:28건	○시설개선:완료9, ○장비보강:28건완료	○시설개선:완료2, ○장비보강:19건완료
	11)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육성	○4건	○사업내용 -시설개보수:4개 -장비현대화:5개	○사업내용 -시설개보수:3개 -장비현대화:3개 -전 산 장 비 현대화:5개소	○ 사업내용 -시설개보수:3개소 -장비현대화:3개 -전 산 장 비 현대화:5개소
	12) 한방 지역보건사업	○12개 프로그램, 2,050명 ○ 환 자 진 료 133,617명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7,183회 ○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 57개소	○한방진료실설치운영:63개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5,015회,	○한방진료실설치운영:63개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7,000회, 150천명
	13) 한방 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12개 프로그램, 2,050명 ○ 환 자 진 료 133,617명	-		
	14) 농 산 어촌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확충사업량 : 3개소	○.보육시설확충 3개소 ○보육시설환경개선:34개소	○보육시설확충:6개소 ○ 보육시설환경개선:35개소	○보육시설신축:3개소 ○증개축:4개소 ○개보수:21개소 ○장비보강:7개소 ○ 장애 아편 의 시설:2개소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15) 농 산 어촌만5세아무상보육	○만5세아 무상보육 5,315명	○만5세아무상보육 5,855명	○ 만5세아 무상보육 5,789명	○ 만5세아무상보육 4,404명
	16)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량:13개소	○사업량:16개소	-	-
	17)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 농 도 우 미:149명 ○ 가 사 도 우 미:871명	○영농도우미 429명 ○가사도우미 1,257명	○영농도우미 829명 ○가사도우미 1,318명	○영농도우미 543명 ○가사도우미 1,446명
	18) 지역 문화복지센터운영	○육성:18개소	○ 육성 :22개소		
	1) 공동취사장운영 지원사업	없음	○ 사업량:2개소 (화천,인제)	○사업량:4개소 계속 2개, 신규 2개	○사업량:4개소 계속
여성농업인소득향상	2)여성농업인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없음	○ 사업량:3,000세트	○사업량:5,000세트	○사업량:4개소
	3)여성농업인농작업환경개선	○사업량:2사업8개소	사업규모:5개소	○사업 규모:5개소,	○농작업편이장비지원 :4개소
	4)소형농기계공급사업	○소형농기계(관리기):250대	○소형농기계(관리기등) 250대	○소형농기계(관리기등) : 250대	○소형농기계(관리기등) : 100대
	5)영세농가자립기반사업지원	○사업량:비닐하우스100동	○사업량:100동	-	-
	6) 농 산 촌나무보일러지원	○사업량:200대	○사업량:218대	○사업량 : 208대	○산림바이오매스보일러보급 511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 성 농 어 업 인 지 위 향 상	1)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 농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중 여성위원 30%이상	○ 농정심의위원회 여성참여 44%	○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의심의위원여성참여 44%	- 현행 : 농정심의회 30%
	2)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	○ 지원실적:이민자 210가구	-	-
	3)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영농교육	-	-	○ 교육인원:31명	-
여 성 농 어 업 인 전 인 력 화	1) 여성농어업인에대한전문 교육 실시.전문여성농어업인육성	○ 여성농어업인 교육: 190명 ○ 여성농어업인 세미나:100명 ○ 도시·농촌체험 교육 : 160명 ○ 여성농어업인 대회:1,000명	-	○ 여성농어업인세미나150명 ○ 도시·농촌체험 교육 160명 ○ 제4회경기도여성농어업인대회 1,000명	-
	2) 여성농어업인단체의 교육운영 역량강화	-	-	○ 여성농어업인임원·현장교육 60명 ○ 우리쌀지킴이 어울림한마당 120명 ○ 우수여성농어업인포상7명	-
여 성 농 어 업 인 의 복 지 증 진	1) 농업인영양아양육비 지원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56,397명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월 평균 4,810명	○ 월평균 7,406명지원	○ 농업인자녀(0~5세)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등 보육료 지원
	2) 여성농어업인일손돕기 지원	○ 여성농어업인일손돕기지원 17,999명	○ 여성농어업인일손돕기지원 월 평균 1,970명		
	3) 농가도우미지원	○ 농가도우미지원 -176명	○ 농가도우미지원 - 190명	○ 농가도우미지원 - 143명	○ '05년부터분권교부세에의한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전환.지방비등 예산확보가어려우며,특히지원단가가낮아이용률매우저조.
	4) 여성농업인센터	○ 4개소	○ 2006년과 동일	○ 2006년과 동일	○ ○ 2006년과 동일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 성 농 어 업 인 지 위 향 상	1)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 위원회 여성참여 33.6%	농정심의회여성위촉비율:30%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여성위촉비율:30%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여성위촉비율:30%
	2) 여성농어업인의 농협조합원·대의원·임원 참여 확대	○ 여성농어업인 농협사업 참여확대 - 조합원비율 23.63%,대의원수 499명, 임원수17명	-	-	-
	3) 농어촌 여성 결혼 이민자가족지원	-	○ 방문교육도우미 운영(3개군) ○ 부부교실 2회, 가족캠프1회 ○ 농촌여성결혼이민자부부60쌍 ○ 모국방문1가정, 선진지견학2가정	·인원:30명	○ 1:1맞춤형영농교육실시:52명 ○ 다문화가정서울투어체험 2개소 ○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2개소 41명 ○ 모국방문지원:11가정46명 ○ 대리모 연결
	4)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	○ , 양성평등의식 교육 도300,농업기술원 21,660 ○ 여성농어업인업무성별영향평가 실시3개 과제 ○ 농촌마을여성성장확대(전체이장(2,768명)의 3.52%)	○ 여성이장수 103명 (전체이장수(2,871명)의 3.58%)	○ 여성이장수 119명 (전체이장수2,888명의4.1%)
	5) 여성농어업인단체 활동 지원	○ 여성농어업인단체 교육훈련지원 : 18백만원 ○ 한국여성농어업인 대회 지원 : 20백만원	-	-	○ 품목별연구회 육성 60개회 ○ .가정원예생활화 전문교육 12회 ○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지도자과정 운영 15명
	6) 우수여성농어업인 포상	○ 우수여성농어업인 포상 : 3명	-	-	-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인력 및 리더십 향상	-	○ 교육운영역량강화 도300명, 농업기술원21,660명 ○ 여성농정위원전문성강화 4명	-	-
	2) 여성농업인단체의 교육지원	-	-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한여농)300명	·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한여농)300명
	3) 여성농업인단체의 교육역량강화 및 인력육성	-	-	-	○ 생활개선회지도력배양교육 :600명 ○ 과제교육및현지역찬교육:5회 ○ 농촌생활문화정보지제박배부:1,000부
	4) 여성농업인창업활동지원	-	-	-	○ 농촌여성창업지원 5개소
	5) 여성농업인전문교육강화	○정보화 2,545명 ○영농기술 16,540명 ○ 전문농업경영인 30명	○정보화교육추진 3,456명	○정보화선도자육성:32명 ○ 농가방문교육횟수:3,500회	○ 정보화선도자육성:31명 ○ 농가방문교육횟수:3,205회
	6) 선도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 해외선진농업연수:16명(일본)	-	-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1)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2,291명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1,936명,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4,800명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3,620명
	2) 여성농업인일손돌기지원	○ 여성농업인일손돌기 지원1,429명	○ 여성농업인일손돌기지원 1,100명,	-	-
	3)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 농업인의고교생학자금지원: 5,880명	-	-	-
	4) 농가도우미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285명	○ 농가도우미지원 345명	○ 농가도우미지원 - 345명/60일 한도	○ 농가도우미지원 - 236명/75일한도
	5) 여성농업인센터운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3개소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운영 3개소
정책인프라추진	1) 여성농업인정책추진체계구축	○ 여성농업인육성 06년시행계획수립	'07년기본계획에따라 도 자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08년기본계획에따라 도 자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09년 기본계획에따라 도 자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1) 각종위원회여성 참여확대	-	○ 여성농업인위원회 비율 12.4% 확대	○ 여성농업인위원회 비율 7.4%	-
	2)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244가구	○ 여성결혼이민자영농교육(54명)	-
	3)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	○ 여성이장수 117명	○ 여성이장수 138명 -도내이장4,515명 중138명(3.1%)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창업활동지원	○ 영농창업자금 : 9명	-	-	-
	2) 여성농업인전문교육강화	○ 정보화교육: 25,000명 ○ 전문농업인육성: 49명	-	○ 정보화선도자선정:28명 ○ 농가방문교육:3,433회	-
	3) 농업경영능력및리더십향상	-	○ 여성농업단체육성 6개사업 ○ 리더십아카데미 12명	-	-
	4) 여성농업인단체 교육운영역량강화	○ 여성농업인단체육성지원:1개단체 ○ 전진대회1,500명 ○ 도·농 학생교류 200명	-	○ 여성농업인단체육성 6개사업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1)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 농업인영양아양육비지원 4,879명	○ 영유아양육비 지원 9,313명	○ 영유아양육비지원
	2) 여성농업인일손돌기지원	○ 여성농업인일손돌기지원:3,400명	○ 여성농업인일손돌기지원 3,129명,	-	-
	3)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	-	-
	4) 농가도우미지원	○ 농가도우미제도 운영 : 420명 661백만원	○ 농가도우미지원 : 456명, 688백만원	○ 농가도우미지원 - 540명, 792백만원	○ 농가도우미지원 - 550명, 866지원
	5) 여성농업인센터운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개소	○ 2006년과 동일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1개소 감소)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1개소 감소)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1)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 농정심의위원회 위촉 여성 20% ○ 농특위 33%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83%	○ 농정심의위원회 위촉 여성 20% ○ 농특위 33%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83%	○ 농정심의위원회 위촉 여성 10% ○ 농특위 33%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83%	○ 농정심의위원회 위촉 여성 15% ○ 농특위 33%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83%
	2) 여성농어업인 단체 활동 지원	○ 농업관련지원여성단체 3개단체	○ 농업관련지원여성단체 3개단체	○ 농업관련지원여성단체 3개단체	-
여성 농어업인 전문 인력화	1) 여성농어업인 전문 교육·훈련	○ 정보화교육: 여성농어업인 448명 ○ 농기계교육: 62명	○ 정보화교육: 381명 ○ 농기계교육: 78명		
	2) 여성농어업인 교육	○ 영농기술: 1,019명 ○ 가공: 4,546명 ○ 품목별모임: 5개반 1,287명 ○ 생활기술및농외소득: 5,267명	○ 영농기술: 4,964명 ○ 농산물가공: 4,489명 ○ 품목별모임: 5개반 9,053명 ○ 생활기술및정보교육: 4,989명	-	-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1)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 사업량: 2,503명 (계획대비 90.0%)	○ 사업량: 3,194명 (계획대비 26%)	○ 영유아양육비지원: 6,510명	-
	2)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	-	○ 사업량: 2,727명 (계획대비 5%)	-	-
	3) 농업인 자녀학자금	○ 사업량: 9,078명 (계획대비 109%)	○ 사업량: 9,244명 (계획대비 5%)	-	○ 사업량: 7,800명
	4) 농가도우미지원	○ 농가도우미 435명	○ 농가도우미 575명	○ 농가도우미 560명	○ 농가도우미 500명
	5)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 사업량: 6개소	○ 사업량: 6개소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6개소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7개소 (1개소 증가)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1)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확산	○ 농업관련위원회 여성농어업인참여확대 - 농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여성 26.4% ○ 여성농어업인대의원 참여확대 - 전체대의원 9,068명 중 여성대의원 1,525명 (16.8%) ○ 여성농어업인이장 참여확대: 15% 이상 - 전체통리장 8,089명 중 여성리장 1,248명 (15.4%)	○ (시군포함): 38.5% ○ 도농정분야 32.5% ○ 협동조합참여 - 조합원 31.7% - 대의원명 (17.2%) - 임원 (3.6%) ○ 여성분과 71개소 ○ 여성대의원·임원 교육 67명 ○ '농가경영협약'의 보급 8쌍 ○ 여성농어업인법률상담지원 및 피해구제: 21회 2,361명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2명 ○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5명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회: 6명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6명 (계획은 20명으로 미함) ○ 전라남도농업위원회 위원: 8명 (계획은 62명으로 미함) ○ 여성농어업인센터 심의위원 회: 5명
	2) 여성농어업인협의회 구성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
	3) 여성단체육성 및 지원	○ 한여농: 2개 사업 ○ 여성농민회: 1개 사업 10,000원 지원	○ 도여성농어업인단체행사지원: 2개	○ 여성농어업인세미나 및 농촌체험 ○ 단체지원 3개 ○ 여성농어업인 해외연수	○ 여성농어업인세미나 및 농촌체험 ○ 3개 단체 지원 ○ 여성농어업인 해외연수:
	4) 해외연수	○ 인원: 23명			
	5) 우수여성농어업인포상	22명			
	6) 농촌여성결혼이민자지원	○ 대상사군: 4개	○ 4개시군 ○ 농협결혼이민자모국방문: 28가정 120명 ○ 추석절전통문화체험: 34명		
	7) 여성농어업인 단체회원교육	-	○ 여성농어업인생활대학운영: 21개	○ 여성농어업인생활대학운영: 21개	○ 여성농어업인생활대학운영: 21개
	8) 여성농어업인 단체연구활동·정책제안지원	-	○ 여성농어업인과제분과활동지원: 7개소, ○ 농촌복지실천자원봉사자양성: 150명	○ 생활개선회과제분과활동지원	○ 생활개선회과제분과활동지원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	1) 최고농업경영자과정	66명(전체 304명의 21.7%)		-	-
	2) 여성농어업인정보화	7개과정 12기/ 383명		-	-
	3) 여성창업농업인 육성	51명(전체 227명 중 22.5%)	○농촌여성창업:1개소	○농촌여성창업지원:1개소	○농촌여성창업지원:1개소
	4) 노동생산성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1개 과정 31명	○6종의농기계 개발보급 ○여성농어업인농기계교육 실시:30명	-	-
	5) 여성농어업인 농촌지역개발 리더교육	8명	○지역농업특성화교육여성농어업인 참여:124명 ○정보화능력향상여성리더십:5명	-	-
	6) 전문농업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어업인리더십아카데미:23명 ○농촌지역개발여성리더:5명 ○여성농정위원교육과정참여:10명	○품목별영농기술교육:18과정937명 ○지역농업특성화교육:9과정197 ○전남생명농업대학교육:3과정71명 ○농업정보화교육:7과정338명 ○농정·농림사업연계교육:13과정2,300명 ○귀농인교육:1과정34명 ○농기계훈련교육:1과정13과정1,498명	○품목별영농기술교육:5과정150명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12과정51명 ○전남생명농업대학교육:3과정20명 ○농업정보화교육:7과정338명 ○농정·농림사업연계교육:14과정2,300명 ○귀농인교육:2과정34명(2과정34명) ○농기계훈련교육:1과정105명(1과정105명)
	7)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	-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운영:1개소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운영:1개소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운영:1개소
	8) 농촌여성농외소득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	○농촌여성창업지원:1개소 ○품질향상지원 및 품목별연구모임활성화지원:2개소	○농촌여성소득원제 품 품질향상지원:2개소	○농촌여성소득원제 품 품질향상지원:2개소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	9) 후계 여성농어업인력육성기반 지속추진	-	○창업농후계농56명(23.5%) ○농업인턴제여성27명중5명(18.5%) ○신규후계농23명(33.3%)	-	-
	1)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량:550명	○출산농가도우미지원:630명	○사업량:630농가	○사업량:630농가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	○4개소	○사업량:4개소	○사업량:4개소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량:5,500명	○4,923명	○사업량:10,072명	○사업량:9,860명
	4)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	○사업량:7,900명	○사업량 3,310명,	-	-
	5) 농어촌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기능보강:86개소 ○보육료:43천명 ○시설운영비938개 ○인증:130개소 ○종사자교육1,611명	○보육시설신규확충:9개소27억원	-	-
	6)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사업량:5,137명 ○가사도우미-사업량:11,322명	○취약농가인력지원:4,602농가, -영농도우미(1,742농가) -가사도우미(2,860가구)	-	-
	7) 농촌여성창업 부업능력 향상 교육	○교육인원:6개과정,9기,340명	-	-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8) 농촌여성취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인원:3개과정,5기,170명	-	-	-
	9) 농촌여성일자리 창출 세미나	○참석인원:350명	-	-	-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10)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건 개선	○ 교육인원:4개과정,6기,298명	○농협 지역 문화복지센터확대:43개소 ○곡성여성연극단활동비및여성농업인교육시초청공연	-	-
	11) 농어촌여성건강 지원강화	-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2개소확대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173,947명 ○건강관리실운영활성화지원:114개소 ○유관기관과협조체계구축:21개시군	○건강프로그램운영:16개시군 ○건강관리실활용운영:124개소	○건강프로그램운영:16개시군 ○건강관리실활용운영:124개소
정책인프라추진	1) 여성농업인단체전문가,관계기관협의회정례화	○참석:전라남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12명	-	-	-
	2) 지역협의체구성	○구성인원:12명	-	-	-
	3) 여성농업인정책관련공무원대상교육강화	○과정명:여성농업인정책전문과정 참석:2명	-	-	-
	4) 정책추진체계의구축	-	○도자체시행계획작성 ○기본계획의점검및평가(농경평가)	-	-
	5) 농업정책의성별영향평가실시	-	○2007중앙성별영향평가에서우리도대통령기관표창수상	-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실적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농업인지위향상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I)	○여성농업인명의농산물출하및관리통장갖기운동추진 ○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인정여건조성 ○여성농업인의법률소송시법률상담지원	○이동법률상담실운영내실화 ○분기별정기적으로 실시 ○여성농업인전용상담창구설치	○ 농민신문및전원생활구독확대 ○.이동법률상담실운영내실화	○.농민신문및전원생활구독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II)	○공동경영인으로서의지위확보 ○선도농가를중심으로가족간함의예의한농업경영공동참여확산	-	-	-
	3)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여성조합원:84,414명 (2005년대비1.15%증가) •여성대의원:1,176명 (2005년대비4명감소) •여성임원:60명 (2005년대비2명증가)	○여성농업인의협동조합참여현황 - 전체 조합원의 27.98% - 여성 대의원:1,478명 -여성임원:53명 ○여성대의원교육프로그램운영 -관내여성 조합원 180명교육	○여성농업인의협동조합참여현황 - 전체 조합원의 29.01% - 여성 대의원:1,457명 -여성임원:48명 ○교육참여현황 -여성농업인 CEO교육참가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교육입교 -조합별여성대의원교육실시	○여성농업인의협동조합참여현황 - 전체 조합원의 30.15% ○교육참여현황 -여성농업인 CEO교육참가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교육입교 -조합별여성대의원교육실시
	4)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I)	○여성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 2개소	○여성농업인단체 운영지원 2개소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지원4회	○여성농업인단체 운영지원 2개소 (한여농,전여농)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지원4회	○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지원4회
	5)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II)	○ 여성농업인단체회원교육지원 ○ 우수여성농업인발굴포상 ○ 여성농업인및소비자단체가주관하는교류사업지원	○ 여성농업인단체회원교육지원 20명 ○ 여성농업인및소비자단체가주관하는교류사업지원 500명	○ 여성농업인단체회원교육지원 50여명 ○ 여성농업인및소비자단체가주관하는교류사업지원 180여명 ○ 우리콩지킴이사업실시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6)여성농어업인 단체 회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단위여성농어업인 자기관리및혁신교육:1회41명 ◦ 생활기술과제 교육, 여성농어업인능력개발 교육:23개소3만명 ◦ 도단위여성농어업인 노인전문도우미교육:1회26명 ◦ 소비자+농업인사회 구축을위한생활기술현장교육:23개소18,4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개선회노인도우미간병 1회 22명 ◦ 생활개선회임원파워리더교육 1회 70명 ◦ 생활개선회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친환경농 교육: 1회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부업기술및전문기능교육:11개소 ◦ 독도수호필기대회:1회 ◦ 정보화경진대회 10명이상 ◦ 생활개선회수련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부업기술및전문기능교육:22개소 ◦ 생활개선회임원혁신리더교육:120명 ◦ 정보화능력배양교육:40명 ◦ 생활개선회도대회:5,395명 ◦ 요양보호사:60명
	7)여성농어업인 단체 연구활동 정책제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정책세미나및토론회참여:4회131명 ◦ 품목별연구회조직으로농업과제연구활동지원44개회 2,2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연구회 조직운영 30개 ◦ 가족경영협약교육수료사후관리:22회 ◦ 양성평등농촌가정 만들기 캠페인전개 1,200명 ◦ 양성평등교육, 부부공동문제달기, 부부공동농장명만들기등 ◦ 다문화가족큰사랑대회1회 ◦ 여성결혼이민자농촌정착지원 방안세미나: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농과연구회 조직 운영:39회,2,110명 ◦ 가족경영협약교육:22쌍,44명 ◦ 생활개선회원 양성평등농촌가정만들기캠페인 전개:12,000명 ◦ 양성평등홍보, 부부공동문제달기, 부부공동농장명만들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농과연구회 조직 운영 39회,2,401명 ◦ 가족경영협약교육:26쌍,52명 ◦ 생활개선회원 양성평등농촌가정만들기 캠페인 전개:12,000명 ◦ 행복한농촌만들기 프로젝트시범:5개소
	8)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4개시군,240농가 		
	9)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사업 추진 ◦ 안정적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가족맺기 24쌍('06)→89쌍('07) ◦ 한국어교실 ◦ 한국문화체험가족나들이16가정 ◦ 모국방문 30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어린이친환경체험 캠프초청 초등학생60여명 ◦ 다문화가정사랑의김장나누기 100명 ◦ 모국방문16가정 ◦ 다문화여성대학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어린이친환경캠프초청 초등생100명 ◦ 다문화가정사랑나누기100명 ◦ 모국방문23가정 ◦ 다문화여성대학운영 ◦ 이주여성농어업인1:1영농교육 108명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	10)양성평등의식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별양성평등의식교육운영 ◦ 농가주부모임주관으로다양한양성평등캠페인전개 			
	11)결혼이주여성농어업인 가족캠프 및 자매결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가족캠프 및 자매결연 2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농어업인가족캠프 150명
	12)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농가경제안정지원 20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농가경제안정지원 사업량:54농가
여성 농어업인 전문 인력화	1)여성농어업인 리더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1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1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1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180명
	2)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경산) 	-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여성 농어업인 전문 인력화	3)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농외소득원활동지원:1개소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8개소 천연염색브랜드화지원: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창업지원:1개소(의성)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8개소 천연염색기술개발 및 브랜드화지원: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창업지원:1개소(예천)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5개소 천연염색체험장운영,관광상품개발: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원:3개소(안동, 문경, 영양) 사업지원:3개소(경주, 구미, 의성) 사업지원:2개소(포항, 영천)
	4)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원제 품목품질향상지원:9개소 농산물품목별연구회지원:4개회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소득원제 품목품질향상:2개소 농산물가공품목별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소득원제 품목품질향상:4개소 농산물가공품목별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여성소득원제 품목품질향상:4개소 농산물가공품목별연구회:4개회, 177명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1)5대 암 조기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208,17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258,4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273,6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320,122건
	2)골다공증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 밀도 검진 인원:6,14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다공증검진 6,2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다공증검진 6,0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다공증검진 6,000명
	3)건강관리실 확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실25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시설 운영유지비:30개소 농업인피로회복시설차: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실:31개소 농업인피로회복시설차: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년도현황 	-
	4)농가도우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도우미:7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도우미 8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량: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량:1,000명
	5)영농도우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도우미 12개시군 75개 농협 375농가 고령취약농가가사인력지원 1,109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도우미 23개시군145개농협 해당농가연계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개시군확대 자원봉사인력등의DB화농가에인력지원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개시군확대 자원봉사인력등의DB화농가에인력지원신속화
	6)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3,8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3,435명 	-	-
	7)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2개소(안동길안,영양입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2개소(안동길안,영양입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2개소(안동길안,영양입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2개소(안동길안,영양입암)
	8)농촌보육·경보센터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11개시군1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11개시군1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11개시군1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11개시군12개소

기본 전략	핵심정책 과제	2006년실적	2007년실적	2008년실적	2009년실적
	9)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4,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4,7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9,3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9,663명
	10)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보강 4개소 증개축개보수:19개 장비지원:1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2개소 리모델링6개소 장애전담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경주2개소 장애아전담시설신축 김천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경주2개소
	11)시간연장보육 및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형보육시설사업량:3개소,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33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형보육시설추가지정 41개소 농어촌차량운영비지원40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원총90개소 농어촌차량운영비지원 :43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원총101명 농어촌차량운영비지원:501개소
	12)여성농어업인 문화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지역문화복지센터지속적으로확대추진 22개→2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복지센터육성 24개소('06)→34개소('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복지센터운영조합의지속적인확대추진 34개소('07)→44개소('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복지센터운영조합의지속적인확대추진 44개소('08)→46개소('09)
	13)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전승개발보급지원:8개소 각종문화회,독서회등다양한활동으로지역별문화집발간 천연염색연구회육성:16개회(도1,시군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자원개발보급:7개소 지역문화지및소식지발간:2종 문화동아리조직활동:16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지및소식지발간:2종 문화동아리조직활동:16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지및소식지발간:3종 문화동아리조직활동:20개회
	14)농촌마을공동육성 지원	-	-	1.농촌마을공동육성지원:5개소	-

부 록 5

일본 여성농어업인 사례연구

1. 일본의 여성농어업인 현황

1.1. 일반현황

일본의 농업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 60.2%에서 2005년 53.3%이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농어업인 비율의 추이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취업인구	5,653	4,140	3,891	3,622	3,353
여성농어업인	3,403	2,372	2,171	2,000	1,788
(비율, %)	(60.2)	(57.3)	(55.8)	(55.2)	(53.3)

주: 1. 농업취업인구는 만16세 이상의 세대원수(1995년 이후는 만15세 이상의 세대원)이며 자영업에 종사한자 혹은 자영업과 기타의 직업 모두에 종사한 자 중에서 농업을 주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의 합계를 말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 동태조사」

30~60대 농업취업인구의 약 60%를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 50대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5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비율 분포는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40대와 60대에서도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62,495 (62.8)	59,554 (62.8)	50,499 (41.0)	97,549 (40.6)	194,583 (40.6)	383,730 (43.5)	715,988 (50.0)	1,564,398 (46.7)
여성	37,060 (37.2)	35,243 (37.2)	72,688 (59.0)	142,504 (59.4)	284,487 (59.4)	499,211 (56.5)	716,999 (50.0)	1,788,192 (53.3)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표 3.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수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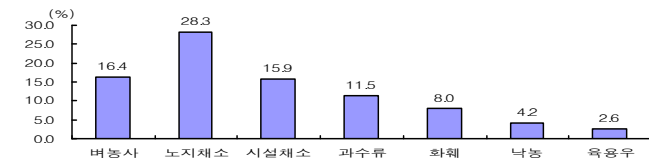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1,079 (82.6)	28,566 (79.4)	45,692 (62.4)	92,068 (50.7)	185,006 (48.4)	338,873 (50.4)	522,880 (58.4)	1,214,164 (54.2)
여성	227 (17.4)	7,415 (20.6)	27,484 (37.6)	89,348 (49.3)	197,183 (51.6)	333,049 (49.6)	371,802 (41.6)	1,026,508 (45.8)

주: 농업 주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중에서 조사날짜로부터 과거 1년간 주직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1년 동안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여성이 있는 농가 중에서 여성농어업인이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야가 있는 농가는 약 70.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담당 작목을 보면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그림 1. 여성농어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 (복수 응답)



자료: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 (2003년 7월)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 부분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라는 응답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정도의 여성농어업인들이 여전히 농업보조자의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단위: %

농업경영 참여 의향	남성	여성
1.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7.2	5.3
2.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8	14.8
3.공동경영자로서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5.4	17.1
4.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가 결정하고 내 의견도 반영하고 싶다	35.4	49.9
5.지시 받은 농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좋다	3.9	11.7
6.응답 없음	0.9	1.2

자료: 식료·농림수산업,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2004년 12월)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농업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도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경영주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이나 후계자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 2004년 2.02%, 2006년 2.4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1)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두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2)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져 있으며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3)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4)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등이다.

표 5.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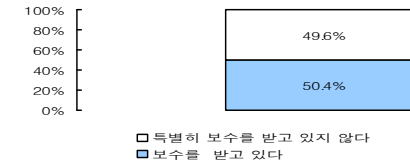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수	1,780	2,140	2,539	2,746	3,149	3,402	3,685	4,125	4,896
비율	1.49	1.57	1.75	1.83	1.93	1.98	2.02	2.15	2.44

주: 2004년 이후의 인정농업자는 부부에 의한 공동신청을 포함한다.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영농유형별 인정현황」

여성농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혹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50.4%로, 과반수의 여성농어업인이 보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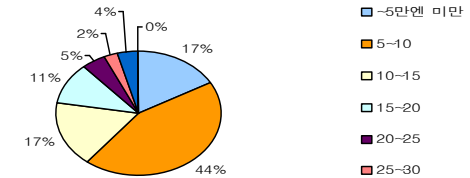
그림 2. 여성농어업인의 보수 및 급여 수취 현황



자료: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7월)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한 달 평균 수취금액은 10만 엔 이하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액은 적은 편이다. 5~10만 엔 보수를 수취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30만 엔 이상은 4%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농어업인의 절반이 농가 내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보다 높은 편이나, 수취 보수액은 적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 여성농어업인의 보수 수취금액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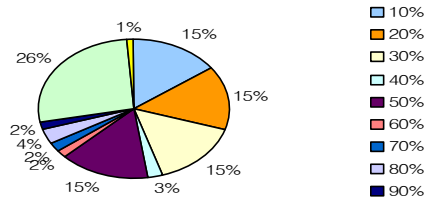
자료: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2003년 7월)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받은 보수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27.2%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자는 62.8%이다. 즉, 보수를 받고 있어도 명목상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농업경영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의향 조사 결과, 90%이상이 보수를 받고 싶어 하며, 그 수취방법에 대해서는 약 60%의 여

성농어업인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또는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한 달 수취 보수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 비율 분포



자료: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여 현황조사-」 (2003년 7월)

표 6. 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여성농업자의 의향

설문항목	응답 비율(%)
정규적(월급, 사분기 마다 등)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싶다	34.1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	21.5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 보수를 받고 싶다	24.5
경영주 판단으로 보수를 받고 싶다	10.8
보수는 필요 없다	4.3
기타	1.5
응답 없음	3.2

자료: 식료·농림수산업,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 (2004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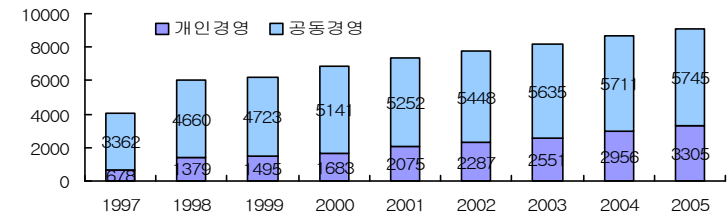
12 여성농어업인의 창업 현황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 생산, 직판장 판매, 농촌관광 등의 농관련산업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9,050 건이 보고되었다.

공동경영 창업이 개인경영 창업 비율보다 높으나, 개인경영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7년 전체 여성농어업인 창업에서 공동경영 비중은 83%였으나, 2005년은 63%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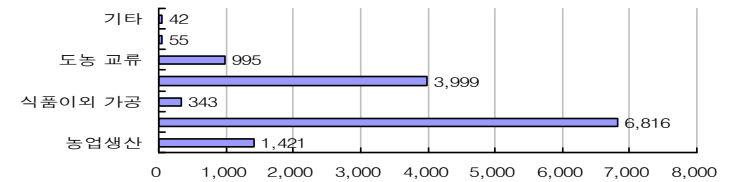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창업 활동내역을 보면, 농산물 식품가공이 75% (6,816건), 직판장 판매·유통이 44% (3,999건)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출금액 1,000만 엔 이상의 창업에서는 유통·판매 활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산물 식품가공, 도농 교류 등의 순이다.

그림 6. 여성농어업인의 창업 활동 내역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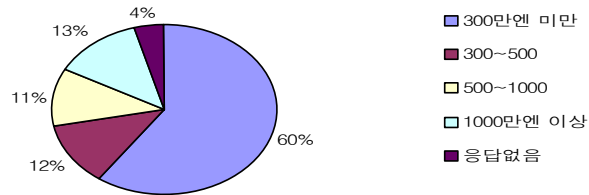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창업 매출액이 300만 엔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여성농어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농업공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여성농어업인 창업 8,667건의 매출액은 624억 5천만 엔이며 총매출액을 창업건수로 나눈 창업 건당 평균 매출액은 735만 엔이다. 매출액 5천만 엔 이상의 사업체는 186건으로 전체 창업건의 2%정도이지만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천만 엔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여성농어업인 창업의 98%를 차지하나 매출액 비율은 64%이다. 또한 매출액 5천만 엔 이상의 사업체들도 10천만 엔 이하에 67%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60% 이상이 5천만 엔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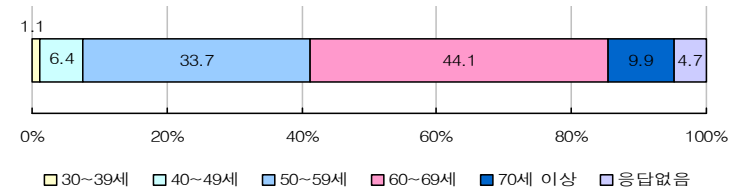
표 7. 여성농어업인 창업의 매출액 분포

	5,000만 엔 이하	5,000만 엔 이상	합계
매출액 합계 비율	399억6,900만 엔 64%	224억8,100만 엔 36%	624.5억 엔 100%
창업건수 비율	8,106건 98%	186건 2%	8,292건 100%

자료: 농업공학연구소 「2005년 농촌생활 종합조사 연구보고서」

창업을 한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44.1%, 50대가 33.7%로 전체의 약 80%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0.1%, 30대에서는 1.1%로 젊은 세대의 창업활동은 부진한 편이다.

그림 8. 창업한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분포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농촌여성 창업활동 실태조사」

표 9.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필요조건

대상자	필요조건
① 인정농업인	
② 인정취농인	경영개시 후 5년 이내, 또는 취농 계획 인정 후 10년 이내
③ 농업경영자 및 이에 준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법인의 경우는 농업관련 매상이 총매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또는 농업조수익 200만 엔 이상(법인의 경우는 1,000만 엔 이상)일 것 ● 청장년(18세 이상 60세미만) 가족농업종사자가 있을 것(법인의 경우는 청장년자 상시고용자가 있을 것) ● 부기기장을 하고 있을 것(예정자 포함)
④ ①부터 ③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가족경영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 주재권이 있고 그 부문의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 및 수익처분권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경리, 부기기장, 농업용 계좌 개설 등)
⑤ ①부터 ④까지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임의단체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지고 있을 것
⑥ 생태농가(eco-farmer)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한 생태농가

자료: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여성농업자 지원제도」

1.3. 가족경영협정제도

가족경영협정은 가족농업경영에 관여하는 각 세대 구성원이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친척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영방침, 역할분담, 작업환경 등을 가족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간 합의에 의해 농가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

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또는 영농승계자)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중심의 농가형태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가족경영협정의 추진은 주로 여성농어업인 리더,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등이 주도하고 있다.

1.3.1.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실태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7,721가구로 2006년도에 비해 3,200가구, 즉 9.3%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7,721가구 중 74%는 인정농업인이다.

표 10.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 추이

단위: 가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협정 체결 농가	5,335	7,205	9,947	12,030	14,777	17,200	21,575	25,151	28,734	32,120	34,521	37,721

자료: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1999년), 보급과(2000~2003년), 보급·여성과(2004~2007년),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표 1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구성 (2007년)

	협정농가수	비율
전체	37,721	100%
인정농업인	27,906	74%
법인	757	2%
기타	9,058	24%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가족경영 협정 농가를 유형별로 보면 단일경영 24,692호(65.2%), 복합경영 7,307호(19.4%), 단일-복합경영 5,722호(15.2%)로 나타남. (단일경영이란 농산물 판매금액중 1위 품목의 판매금액이 총판매금액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를 말함. 복합경영이란 농산물판매금액중 1위품목의 판매금액이 총판매금액의 6할 미만 농가, 단일-복합경영 8할미만~6할 이상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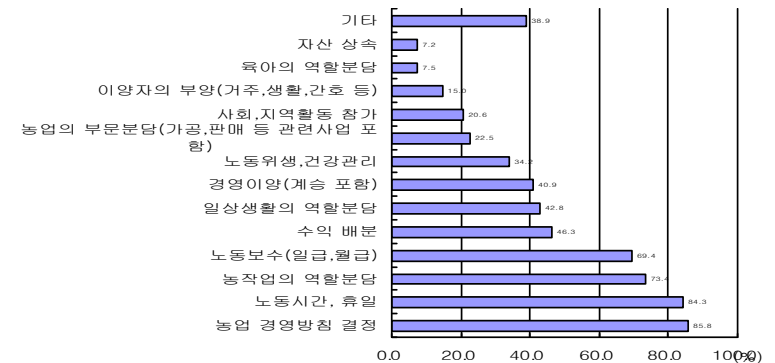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가운데 여성이 농업경영 방침 결정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77.3%이고, 2006년에 비해서 1.2%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이 농업자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농가에 있어서는 0.8% 증가하였고, 여성이 농업개량자금을 차입한 농가는 증감 0.1%이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1) 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소득목표, 경영이양 등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 2) 가사, 육아, 노인수발의 역할분담, 공통 가계비 지출방법, 주거생활방법, 생활목표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 3) 가족의 생각이나 요구 및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협약 내용은 매년 혹은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후계자의 취농이나 결혼, 경영주의 경영이양, 가족의 사회참여, 경영내용 개선 등이 있다면 가족 전원이 의논하여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2007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 경영방침」에 관한 결정이 8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 및 휴일」이 85.9%, 「농업의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이 74.1%, 「노동보수(일급·월급)」이 71.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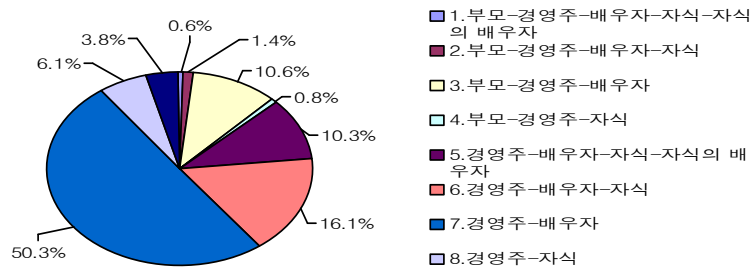
협정을 체결한 가족원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 모 등이 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 체결 유형은 총 9가지인데 즉, 1)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50.2%) 2)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16.1%), 3)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후계자의 배우자(10.3%), 4)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경영자의 부+ 경영자의 모(10.3%)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림 9.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 (복수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그림 10. 가족경영협정 체결 대상 범위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가족경영협정 실태조사」

13.2. 가족경영협정과 연계된 정책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주와 함께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및 후계자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 연금제도, 정책 자금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12. 일본의 가족경영협정과 연계된 정책

정책제도	내용
인정농업자제도(2003년6월~)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신청 허가
농업인 연금(2002년~)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배우자 및 후계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보험료(20,000엔)에 대해 일정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농업개량자금(2002년 7월)	여성농어업인 및 후계자가 당해 농업개량자금 대출을 받고자할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을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과실수급조정대책(2001년도~)	기본대상자는 인정농업자이며, 「인정농업인과 동일한 과수농업의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도 포함
농지 알선 (2003년 도~)	농지의 매매, 임대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가경영주」이나, 부부 공동경영의 경우 ① 부부간 경영 역할 분담이 가족경영협정 체결 등으로 명확히 되어있고, ② 부부 모두가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③ 농산물 출하자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두 사람 모두가 공동경영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경영주」로서 농지매매 및 임대 알선을 받을 수 있음
부부 농업인 표창(2001년도~)	농업경영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표창 받을 수 있음. 단, ①가족경영협정서, ②작업일지 등의 종사 일수가 5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보급조직 등의 의견서 첨부 필요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 여성과

2. 일본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지방자치체 사례)

■지역사례 : 지바현 농산어촌 남녀 공동참여 기본방침(제2기)

제1장 배경

지바현 현인구 : 600만

주생산 : 농산물- 쌀, 어류

1) 시책방향 : 안심농산물 생산, 소비자과 생산자 교류확대

- 신뢰받을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 개성적인 경영체 육성
- 지역의 창의 공부에 의한 매력있는 농산어촌 만들기
- 활력있는 경영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의 장을 확보
- 국제화 대응

2) 남녀공동참여계획, 국가(농림수산성)의 각종 기본계획과 관련

- 농림수산업에 있어서 남녀의 파트너쉽의 확립,
- 생기있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실현.
 - 여성의 재능력개발의 도전지원,
 - 정보제공 등에 의한 의식개발,
 -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제도의 구축 등에 의해 여성의 시책, 방침결정의 장이나 경영 참여 축진을 도모하고 남녀가 함께 담당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
- 국가에서 기초 식료농업 농촌 기본계획(2005년 3월), 삼림. 임업기본계획(2001년10월), 및 수산기본계획(2002년 3월) 농림수산업에 관한 활동에의 여성의 참여축진을 명기해 두고, 이들 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영참여의 촉진 등.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확립을 향한, 총합적인 대책의 추진에 노력한다.

3)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2002년 3월 [지바현 농산어업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기본방침]과 그

추진항목을 결정한, [지바현 농산어촌 다양한 지표(2006년 3월) 목표]를 책정하고 농림어업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하나가되어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여성 기업가 수나 다양한 세미나를 수료자 수 등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반면 여성 농업위원수 등은 목표 달성에 미진함.
- 각 지표항목의 달성 현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여성을 핵심으로 한 기업활동에 의한 개성적인 경영체가 생겨나는 등.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만들기의 여성참여가 진행됨.
- 경영참여, 취업조건의 정비, 시책이나 방침결정의 장애의 참여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제2장 현황과 과제

1) 여성의 참여는 농림수산업의 담당자를 확보하는 위에서 중요

- 지바현에서는 농업종사자의 50%, 임업종사자의 20%, 어업종사자의 20% 정도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
- 농업위원, 인정농업자등 정책방침이나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에서는 농림수산업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어 경영개선을 목표를 파트너십의 추진등에 의해 여성자신의 참여의식의 향상이나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를 추진하여 여성이나 고령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인재를 육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2) 기업화등 활동의 촉진을 통해 남녀공동참여 추진이 필요

- 지역에 있어서는 여성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만들기나 직판소에서의 판매 등 기업활동을 위한 조직이 준비되고 있고 경영의 다각화,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기업가가 탄생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판매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향후 경영규모의 확대나 경영내용의 보완이 요구됨.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기업활동이나 농업단체 등의 여성의 참여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의 경영참여나 사회참여의 상황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3) 생기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창조를 위해 지역활동에 남녀공동참여 필요

-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후계자 부족이나 담당자의 고령화, 휴경지의 증가, 농산물가격의 저하 게다가 집락기능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지바현의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기도하기 위해서도 담당자는 생산조건의 확보, 환경보전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농산어촌의 활성화는 지역의 커다란 과제임.
- 향후 생기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창조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생산활동에 노력하고 남녀가 함께 지역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로 되고 있음.

4) 여성의 참여추진에 해당하는 지역의 추진체계의 확보가 필요

- 남녀공동참여의 추진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자만이 아니라 시정촌. 지역의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로서는 서로 연계된 활동이 증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추진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향후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정보교류 및 추진,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등,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남녀공동참여를 지지하는 환경만들기가 과제로 됨.
- 지역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추진을 기도하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추진에 있어서 추진체계 만들기가 필요함. 또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정촌단계에서 남녀공동참여 목표 설정이 필요함.

<표 1> 지바현 농림업 취업자수

인, %

분야	합계	남	여	여성비율
농업	181,300	98,504	82,796	45.7%
임업 (2003)	6,929	5,745	1,184	17.1%

자료: 2005년 농림업 센서스

제3장 책정의 취지

본현에서는 이제까지 2002년 3월에 [지바현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기본방침]을 정하고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도하였지만, 지역에 있어서 참여현황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본현의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활력있는 농산어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층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성과를 계승해서 강력한 남녀공동참여계획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방침을 정해두었다. 그 기본방침은 농림어업자, 시정촌, 현, 관계단체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상호 연계를 기도하고 주체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본현의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목표를 통해 달성하고 하는 비전과 그 추진목표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추진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표로서 [지바현 농산어촌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이다.

1)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비전

-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라는 것은 개인이 그 기대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가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 남성과 여성이 농림수산업이나 농산어촌을 동시에 담당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목표하는 모습은 [농산어촌에서 남녀의 빛나는 지역만들기]로 한다.

2)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추진목표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각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상호능력을 발휘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천

경영자로서의 자각이나 경영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그 것을 통해서 경영활동에의 참여촉진을 기도하고, 지바현의 특징을 생생하게 살려 지역의 다양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천, 확대를 추진한다.

추진에 있어서는 경영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부여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제까지 배양된 남녀 상호의 이해에 기초해서 경영에 있어서 역할을 배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주요추진항목

- 여성 인정농업자의 확대,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등에 의한 경영 참여촉진
- 다양한 기업활동의 촉진

② 여성의 사회참여의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기있는 파트너십 사회의 실현

농산어촌에 관계하는 심의회, 농협, 어협, 농업위원회 등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농림어업자는 모두 고령자, 여성이나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담당자를 육성하는 지바현 집락영농의 추진이나 농지, 물 등의 농촌환경 자원의 향상 활동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본현을 특색있고 생기있는 파트너십 사회의 실현을 도모한다. 추진에 있어서는 남녀가 함께 의식개혁과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을 향한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

■ 주요추진항목

- 농협 등의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의 추진
- 농림어업 관계 단체의 임원, 농업위원회의 등용추진
- 심의회, 위원회 등의 등용추진
- 여성리더 등의 육성
- 여성의 조직화 추진

③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의 추진으로 남녀가 함께 창조하는 살기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여성 농림어업자가 활동하기 쉬운 작업환경의 정비나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하기 쉬운 조건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영이나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한층 고양시키고, 정보교환과 다른 업종을 포함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내 및 현 지역의 관련조직의 네트워크화를 기도하는 등 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보급원이나 먹거리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향한 도시나 농촌어촌의 교류나 먹거리의 안정, 안심, 먹거리의 조직 등의 추진을 기도한다. 이것들의 추진에 의해서 생기있고 활력있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 주요추진항목

- JA헬퍼 등의 활용추진
-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정비의 추진

④ 지역단계에 있어서 추진체계의 정비와 여성의 사회 경영참여목표 설정에 의한 남녀공동참여의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

지역에 있어서 농림어업자, 시정촌,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함께 인식하고 있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있어서의 추진체계의 정비를 시도한다. 특히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정촌 등의 지역단계에 있어서 참여목표의 설정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주요추진항목

-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목표 설정을 촉진
- 여성의 참여상황의 정기적인 파악과 대응의 추진

지바현 농산어촌의 생기 있는 지표

본 지표는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의 추진목표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농림수산성, 농산어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 목표는 다음 5개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별지)

제4장 지바현 농산어촌에 다양한 행동계획(제2기)

추진목표	추진항목	현황 2006.3	목표 2011.3	비고
I 여성의 경영참여 촉진에 의한 상호능력을 발휘한 다양한 매력있는 경영의 실현	1) 경영에의 참여 - 인정농업자 - 가족경영협약 체결 - 여성의 농업자연금가입자 - 생기있는 세미나의 수료자 - 농림업기계연수 수강자	52명 537호 80명 7,734명 894명	110명 2000호 130명 9,500명 1,300명	인정농업자(2006.3 현재 4,067명)의 약 50% 년간 10명씩
	2) 기업활동 - 그룹, 개인에 의한 기업	307경영체	500경영체	
II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구축하는 생기 있는 파트너 사회의 실현	1) 농협 등의 정조합원 가입 - 농업협동조합 개인 정조합원 - 어업협동조합 정조합원	21,858 1,742	39,750 1,742	전국여성협의 목표-> 현재 25% 증감
	2) 농림어업 관계단체임원, 위원회에의 등용 - 농업협동조합임원 - 어업협동조합임원 - 농업협동조합총대 - 여성농업위원	6 2 257명 12명	14 등용촉진 1,100명 55명	전국여성협의 목표 -> 현재 총대위원수의 10% 증
	3) 심의회, 위원회의 등용 심의위원회	27%	30%	
	4) 여성리더 등의 육성 - 지도농업사 - 농업사 - 임업사 - 여성어업사 - 와사가나 보급원 - 농림업생산조직의 여성임원 - 남녀공동참여 조연자 - 집락영농조직에의 여성 참여자	25명 16명 5명 11명 40명 신규 신규 신규	40명 40명 10명 15명 40명 30% 60명 66명	어식문화의 촉진. 여성이 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생산조직의 비율 업무내용, 명칭의 검토
	5) 여성의 조직화의 추진 JA 여성부원 생활연구 그룹원 각농청년여성부원	9376 776 6조합	11720 1000 참여촉진	전체수의 증가
	임업연구 그룹	3그룹	6그룹	여성그룹없는 지역의 추진
	어협여성부	3지역	4지역	미가입지역 추진
	지바여성농업경영자회 회원	127명	300명	

III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의 추진에 의한 남녀가 함께 창조하는 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1) 헬퍼의 육성			
	- JA홈헬퍼	746명	946명	년간 40명
	- 낙농헬퍼	41%	50%	축산농가의 가입율
	2) 여성의 활동하기 쉬운 환경 정비의 추진, 여성의 네트워크화 추진	현네트워크1	현네트워크1	전지구에서의 네트워크화를 추진
	- 지역네트워크6	지역네트워크6	지역네트워크 10	
	- 농협의 조직	5조직	5조직	현상유지
IV 지역단계에 있어서 추진체계의 정비와 여성의 사회, 경영 참여 목표의 설정에 의한 남녀공동참여의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	- 노력보완 시스템	16시스템	27시스템	
	- 자육에서 지원상담원	2인	10인	
	1)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목표설정의 가속화, 시정촌 농산어촌여성비전	1시정	56시정	전시정촌에서 대책을 목표로 하는(2006년3월 시정 시정촌수 56개)
	2) 여성의 참여상황의 정기적인 파악과 대응의 추진			

일본 농가의 공동경영협정서 작성(예)

[경영발전을 위한 나와 가족의 약정서]

1. 목적

000(경영주)와 000(배우자), 000(후계자), 000(후계자배우자)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업경영과 가족생활에 한층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영계획과 생활설계의 수립

가족전원이 참여해서 금후의 경영규모 시설정비, 자금, 취업조건 등의 농업경영계획과 나와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합당한 생활계획을 합의하여 세우고 실천한다.

5년동안에 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소득의 00만원을 목표로 경영향상을 목표로 한다

농업경영규모에 관한 목표

작목	현황		5년후 목표	
	작부면적	단위면적당	작부면적	단위당 생산량
	사용두수	생산량	사용두수	
수도	100a	480kg	200a	540kg
우유	45두	7500kg	わら수집	8톤
목초	200a	10톤	45두	8000k
면적	300a		400a	12톤
			600a	

3. 경영의 부분분담

수도작에 대해서는 00가 중심으로 담당하고, 우유에 대해서는 00가 책임자로서 00과 00이 작업에 참여한다. 각각의 부문과도 바쁠때는 협력한다.

◦ 경영의 역할분담

가족원 각각의 의향과 능력을 활성화하고 분담을 다음과 같이 두기로 한다.

00: 총괄경영관리, 노동일지 기장, 세금신고, 농작업계획

00: 근무건강관리, 레크레이션

00: 농업부기 가계부입력, 농업기계 정비

계획과 세금의 신고는 00, 기장과 가계부 의 분석 계획은 00이 분담한다

4. 휴일, 휴가노동시간

부문이나 재배시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작업 상황을 모아서 휴일로 한다. 정확히 전원이 1주간에 1일은 휴일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일의 노동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농번기 에도 수면시간은 6시간을 확보한다.

5. 급여, 수익배분

매월 지급일을 정해서 00에게로 월급 00만원, 00에게는 월급 △△ 만원을 구좌로 입금한다.

년 월 일

주소 :

경영주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 배우자

입회인

1.2.3.5 조항이 있는 경우 인정농업자의 공동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 일본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비교

	한국	일본
법	농림수산물식품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특별법	식료 농업.농촌기본법 남녀공동참가기본법
추진 체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정국 농촌사회과 농촌사회팀 지역계획 수립(기본계획, 시행 계획)	농산어촌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농림수산물성 보급여성과, 여성, 고령대책실 지역계획수립
내용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추진 조직	담당부서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
방식	점검없음	매년 달성목표 점검, 공클대회 개최